

한국은행



일반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일반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책을 펴내며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간단히 요약한다면 인간생활과 물질의 관계라고 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물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볼 때 경제는 우리와 동떨어져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자체가 다름 아닌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국민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의 올바른 경제 인식이 부강한 국가 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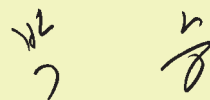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생활 향상과 국가 발전에 있어서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경제에 관해 올바른 지식과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데는 등한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경제는 어렵고 전문가나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개념이나 대외개방문제, 합리적인 노사문제, 그리고 계층 간의 경제적 갈등 조정문제 등 경제 현안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제공해 오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이번에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경제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 만들었습니다. 이론보다는 생활주변의 이야기와 신문기사 등을 사례로 들어 경제현상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민 여러분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3월

한국은행 총재 박 승



책 전체 산책하기

첫째 마당 '생활과 경제'에서는 경제상식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와 함께 경제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개념을 알아봅니다. 욕구에 비해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경제상식과 지식은 이러한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경제적 사고에 꼭 필요한 개념 중 하나는 기회비용입니다. 즉 모든 선택은 다른 선택의 기회를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의식하고 행동하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그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복과 추가적인 희생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첫째 마당에서의 편안한 경제 산책은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준비운동 과정입니다.

둘째 마당 '시장경제의 기초'에서는 시장경제의 기초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왜 귀성열차표를 사기가 힘든지,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인지, 거래를 하면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경쟁이 시장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가계·기업·정부 등 여러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셋째 마당 ‘가격과 시장’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 중의 하나인 어떤 물건의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나에 관한 것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경제를 알아보고 이상적인 완전경쟁시장과 독과점시장을 비교해 봅니다.

넷째 마당 ‘소비자와 기업’에서는 소비와 저축의 기능을 하는 가계, 경제의 ‘엔진’인 기업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어떻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지, 또 경제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기업은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적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라 전체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다섯째 마당 ‘시장과 정부’에서는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정부가 하는 경제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출하는지 살펴봅니다. 또 시장실패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조세의 기능과 바람직한 조세제도도 갖추어야 할 요건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책 전체 산책하기

여섯째 마당 ‘정보, 환경문제와 경제’에서는 우리 주위의 경제문제를 다룹니다. 우선 경제생활에서 정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시장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일어나는 현상들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곱째 마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에서는 나라경제 전체를 이해하고 그 상태가 건강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개별 가계에 소득이 있듯이 나라경제 전체에도 총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소득의 개념과 함께 보통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실질국민소득의 변동에 관한 이해를 도와 줄 것입니다.

여덟째 마당 ‘물가와 인플레이션’에서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관해 알아봅니다. 월급이나 장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증가해도 물가(따라서 생활비)가 더 오르면 실제로는 월급 또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많은 점에서 나라경제와 개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는 왜 안정되어야 하며 장바구니 물가는 왜 지수물가보다 높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아홉째 마당 '경기변동과 실업'에서는 경기변동과 실업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경기가 좋으니 나쁘니 하며 경기를 주요 화제 거리로 삼습니다. 이처럼 경기 상태가 보통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당장은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짓고 사람을 더 고용해서 회사의 매출액 증가에 대비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더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기변동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아홉째 마당에서는 경기와 경기 판단방법, 그리고 실업률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줍니다.

열째 마당 '돈이란?'에서는 '경제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돈'은 아마도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원시사회에서는 생산한 물건의 수가 많지 않아 물물교환이 가능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생산·교환되는 물건의 수가 수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거래를 더 쉽게 하고 물건 값을 공동의 단위로 나타내기 위하여 화폐가 꼭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돈의 양은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책 전체 산책하기

열한째 마당 '금융과 신용'에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금융시장에 대한 소개와 재산 늘리기에 관한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자율과 금융시장의 개념,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하는 신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열두째 마당 '재산 늘리기'에서는 합리적인 투자나 저축의 방법을 중심으로 노후대책을 포함한 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본 장의 내용을 잘 익히면 인생의 바람직한 항해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열셋째 마당 ‘국제수지와 환율’은 경제의 개방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개인들이 모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소비할 수 없듯이, 지금의 세계는 외국과의 거래 없이 문을 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설혹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외국과의 거래에서 해당 국가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셋째 마당에서는 왜 무역거래에서 이득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무역이 제한되는 몇 가지 현실적인 논리를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내용을 기록한 국제수지, 수입과 수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상수지 등을 알아봅니다. 또한 한 나라 돈의 대외가치인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봅니다.

열넷째 마당 ‘경제안정화정책’에서는 우선 정부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이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실업을 줄이고자 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떻게 운용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열다섯째 마당 ‘세계 속의 한국경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 최근의 세계화와 경제통합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과 발전전략 등을 생각해 봅니다.

1부 기초 다지기

첫째 마당 생활과 경제	21
1. 왜 경제상식이 중요한가?	22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경제와 연관	22
국민경제 운영 성과는 국민의 경제상식에 비례	23
2. 생활은 선택의 연속	24
경제활동은 선택의 연속 - 선택은 행복의 최대화 과정	24
선택과 포기는 언제나 함께 발생	27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잃는 기회비용	28
3. 기본개념 몇 개를 알면 경제공부는 끝	30
한계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	30
유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31
수요와 공급은 모든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필수 개념	32
미시경제는 나무, 거시경제는 숲	33
교환의 이익과 가격의 신비한 힘	34
경제현상 분석과 처방의 어려움	38

2부 시장 이해하기

둘째 마당 시장경제의 기초	39
1.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	40
명절 귀성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40
남대문시장, 사이버시장	42

시장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	44
교환의 이득	46
2. 경쟁은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 전제	48
경쟁의 중요성	48
시장경제의 이상 - 완전경쟁시장	50
3. 시장경제에는 4인방이 뛰다	51
우리는 누구나 경제주체	51
경제주체별 역할 분담	53
셋째 마당 가격과 시장	57
1. 수요 · 공급과 재미있는 탄력성 개념	58
가격의 결정과 변동은 수요 · 공급 양자에 의해	58
수요와 탄력성	60
공급과 탄력성	65
2. 경쟁은 시장형태를 구분짓는 잣대	67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67
독과점시장	68
독과점시장에 대한 규제	71



3부 경제주체 이해하기

넷째 마당 소비자와 기업	73
1. 가게는 경제를 지휘하는 '지휘자'	74
소비의 힘	74
소비활동과 효용	75
합리적인 소비	77
2. 기업은 경제의 '엔진'	80
기업의 힘	80
생산활동과 비용	83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84
기업가정신과 기업윤리	86
다섯째 마당 시장과 정부	89
1.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90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	90
정부의 수입과 지출	91
2.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가?	94
시장의 한계	94
시장실패의 원인	94
3.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나?	98
정부의 시장개입	98
정부실패	101
4. 조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	103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103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의 행위	104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106
여섯째 마당 정보, 환경문제와 경제	109
1. 정보는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10
경제생활에서 정보의 역할	110
역 부근 식당과 기사식당	112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	113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	117
2.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119
경제생활과 전략적 상황	119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지속되는 이유	120
가격파괴의 허실	124
3. 이젠 환경도 생각할 때	125
경제발전의 두 얼굴	125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 왜 불행할까?	128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130

4부 나라경제 이해하기

일곱째 마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133
1. 한 나라의 경제성적표, '국민소득' 이란?	134
국민소득 통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	134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하나?	135
국민소득에서 3면 등가란?	137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	139
국민소득 통계는 어떻게 이용되나?	141
2. '1인당 국민소득' 이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정확한 잣대인가?	143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	143
국민소득 통계의 허실	145
3. 경제성장 나무는 무얼 먹고 자랄까?	149
경제성장은 어떻게 측정되나?	149
경제를 키지게 하는 요인은?	150
여덟째 마당 물가와 인플레이션	153
1. 물가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나?	154
경제생활과 물가	154
물가지수에는 어떤 것이 있나?	155
물가지수는 어떻게 활용되나?	158
2. 왜 물가는 안정되어야 하나?	159
물가는 왜 오르나?	159
인플레이션, 왜 막아야 하나?	163
3. 왜 장바구니물가가 지수물가와 다르게 느껴질까?	165
주관적 · 심리적 요인	165
물가지수 작성방법상의 한계	167
아홉째 마당 경기변동과 실업	169
1. 경기는 인체에 비유하면 체온과 같다	170
경기는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활동 상태	170
경기를 판단하는 잣대는?	172

경기의 연착륙과 경착륙 - 경기가 비행기라도 되나?	175
2. 실업은 왜 생기나?	176
완전고용은 실업률 0%를 말할까?	178
실업률은 어떻게 산출하나?	180
3. 임금 상승은 높을수록 좋을까?	183
임금은 노동생산성,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183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186

5부 돈과 금융 이해하기

열째 마당 돈이란?	189
1. 돈은 경제의 혈액	190
경제생활과 돈	190
돈의 세 가지 기능	191
2. 돈은 어떻게 생겨났나?	193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로	193
지폐와 법화제도	195
3.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202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공급	202
은행은 예금통화를 창출	203
부문별로는 민간, 정부, 해외 부문 등을 통해 돈이 공급	204
돈의 양은 어떻게 조절하나?	205



열한째 마당 금융과 신용	209
1. 금리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210
금융이란 무엇인가?	210
금리는 돈을 빌려 쓴(빌려 준) 대가	211
금리의 여러 종류	212
금리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214
2. 왜 금융시장은 다양하게 있을까?	218
금융시장이란?	218
단기금융시장	220
자본시장	221
3. 금융기관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226
금융기관의 개념과 역할	226
은행	227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227
보험회사 · 증권회사 · 기타 금융기관	228
금융기관의 겸업화	228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229
4.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	231
신용이란 무엇인가?	231
기업과 국가의 신용	232
개인의 신용	234
열두째 마당 재산 늘리기	237
1. 노후대책은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238
장기 생활설계의 필요성	238

투자과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240
재산 늘리기를 위한 기본 준비	242
2. 부자는 예금만 할까?	243
수익이 적으나 안전한 예금	243
고수익 고위험인 증권	246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247
또 하나의 투자상품, 부동산	248
3. 재산은 어떻게 늘릴까?	249
목적은 먼저 생각한 뒤 선택하라	249
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249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250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하라	251
돈 빌리기를 현명하게 활용하라	252
재산 늘리기 실천계획	255

6부 국제경제 이해하기

열셋째 마당 국제수지와 환율	261
1. 왜 국가 간에 거래가 일어날까?	262
무역의 이익 -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262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264
2.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나 바람직할까?	266
국제수지표는 외국과의 거래장부	266
경상수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68
3.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269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	269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272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275
4. 환율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79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는 개선, 물가는 상승	279
환율정책은 왜 중요한가?	280
외환보유액의 역할	281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282

7부 마무리하기

열넷째 마당 경제안정화정책	285
1. 왜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한가?	286
경제안정화정책의 의의	286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한 논쟁	288
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떻게 운용될까?	291
통화정책과 그 수단	291
통화정책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나?	292
통화정책은 어떻게 퍼나?	294
재정정책과 그 수단	298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	299
3.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하려면?	301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	301
정책의 조화	303
경제안정화정책 성공의 열쇠	305

열다섯째 마당 세계 속의 한국경제	307
1. 세계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는?	308
경제규모로 본 한국경제	308
국가경쟁력과 경제자유도	309
2.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	311
향후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	311
세계화와 지역블록화의 진전	315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재와 미래	317
3. 한국경제의 앞날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319
세계화의 파도에서 살아남기	319
각 경제주체의 역할 - 가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기계발	321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구현	322
정부는 시장기능의 보완자 역할에 충실	323



기초 다지기

첫째 마당

1

생활과 경제

- 1. 왜 경제상식이 중요한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경제와 연관
국민경제 운영 성과는 국민의 경제상식에 비례
- 2. 생활은 선택의 연속
경제활동은 선택의 연속 - 선택은 행복의 최대화 과정
선택과 포기는 언제나 함께 발생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잃는 기회비용
- 3. 기본개념 몇 개를 알면 경제공부는 끝
한계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와 공급은 모든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필수 개념
미시경제는 나무, 거시경제는 숲
교환의 이익과 가격의 신비한 힘
경제현상 분석과 처방의 어려움



첫째 마당 _ 생활과 경제



1. 왜 경제상식이 중요한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경제와 연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운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적절한 성취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도 행복한 삶의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물질문명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풍요가 행복의 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경제적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일반 채소를 살 것인지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 채소를 살 것인지를 비롯해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대학진학 여부, 직업 선택, 주택 구입 등 크고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정을 해야만 할 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상식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제적 사고방식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경제지식이 사람들을 곧바로 부유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 강의 첫 시간에 교수들이 강조하는 말은 “경제학이 부자가 될 수 있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과연 이 책을 읽기 위해 투자한 시간의 가치에 상당하는 결실이 돌아올까요? 경제상식이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곧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아니었던 것은 이것을 잘 대변해줍니다.

경제상식이나 지식이 우리를 한 순간에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사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행복을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지식이 단기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기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분산하고 경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 운영 성과는 국민의 경제상식에 비례

이러한 경제상식과 지식이 세계경제와 나라경제에서 여러 가지 경제현상의 흐름과 실태, 그 인과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데도 국내 경기가 왜 좋지 않다고 하는지, 환율이 매일 변동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경기가 나쁜 데도 물가는 왜 오르는지, 왜 농산물이나 영화시장의 개방을 늦추고자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많은 의문을 해소시켜 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보다 정부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



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치인이나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인은 매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국민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다소 좁은 시야를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의 정치권과 정부는 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비록 장기적으로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소위 인기 있는 정책을 채택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가 훌륭한 정치인과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포함한 양식을 갖춘 시민이 요구됩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경제운영 성과는 국민들의 경제상식 수준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경제상식과 지식을 갖는 것은 나라경제의 발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은 선택의 연속

경제활동은 선택의 연속 - 선택은 행복의 최대화 과정

경제활동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

일상생활은 **경제활동**의 연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옷과 음식, 냉장고와 자동차 같은 재화나 관광, 금융, 오락과 같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것을 모두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자급 자족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을 구입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이렇게 하여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을 통해 거래돼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되는데 이것이 모두 경제활동입니다.



|워|클|거|리|

진로와 직업 선택

직업의 선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점점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미국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미국 시민은 일생동안 평균 6가지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대로 미국의 추세를 따라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예상할 때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직업 선택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구조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성장 직업

● 향후 5년간 고용증가가 예상되는 직업 20가지

증권 중개인, 경영컨설턴트, 직업치료사(물리치료사), 전문비서, 텔레마케터, 법률 사무원, 선물거래 중개인, 변리사, 특수학교 교사, 보안서비스 종사자(청경·신변경호원 등), 직업상담원, 생명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전자/통신공학기술자, (전산)시스템엔지니어, 컴퓨터프로그래머, 웹마스터, (국내외)여행안내원, 번역사/통역사

● 21세기 예상 신종 직종

음악치료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보안서비스종사자, (국내외)여행안내원, 환경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전자/통신공학기술자, (전산)시스템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국제회의 기획진행자, 운동처방사(전문의와 함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지도업무), 학교사회사업가,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원, 여행설계사, 사이버기상캐스터, 캐릭터 엠디(수요자에 맞는 캐릭터 디자인), 조향사(항수 및 방향제 제조), 베타 테스터(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출시전 사전 점검), 게임시나리오작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정보제공자(인터넷상의 수많은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로 편집 제작하여 제공), 정보시스템 감사사(정보시스템 안정성 감사), 컴퓨터 중매인, 웹디자이너, 정보기술컨설턴트, 컴퓨터바이러스치료사, 보안 프로그램개발원

🔗 자료 : 한국은행 경제교실자료 - '나의진로 나의직업'



🔗 미국에서 졸업 후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공은 무엇일까?

전미 대학교용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공학 전공자의 초봉이 5만 달러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컴퓨터학도가 4만 달러대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경영·경제 관련 학과가 3만 달러 후반에서 4만 달러 초반으로 조사됐고 문과 전공은 2만 달러 후반에서 3만 달러 초반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자료 : CNN money, 2004년 9월 22일

경제활동은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소비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소득, 재산 등과 같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소성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을 뜻함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을 경제용어로 '희소성'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공기나 물을 희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재(free goods)로 구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맑은 공기나 오염되지 않은 물조차 더 이상 공짜로 가질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양질의 생수는 일반 청량음료 수준의 가격을 치르고 사 먹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었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힘들게 돈과 시간을 들여 휴양림을 찾아가는 것이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 읽 | 을 | 거 | 리 |

맑은 공기는 경제재?

공기도 **경제재*** 일까요? 그동안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공기조차도, 적어도 맑은 공기라는 차원에서는 더 이상 공짜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동네 주변의 하천을 잘 개발하고 있지요. 경관으로서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통해 좋은 수질과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맑은 공기를 향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민세 등으로 개발재원이 조달된다는 점에서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아래는 ○○산소 판매 광고입니다.

“○○(마시는 산소)는 산소의 효과적인 섭취를 위하여 식전 30분이나 식후 90분 후 공복 시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세 번 드시되, 한 번 드실 때마다 15 방울을 종이컵 한 컵 분량(150ml)에 타서 음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병(60ml)을 구입하시면 하루 세 번 드시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간 드실 수 있습니다.”

* 돈이나 노력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유형의 물건을 말하며 자유재의 반대개념

경제문제는 이렇게 이용 가능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즉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데에서 경제문제는 출발합니다. 경제문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과 포기는 언제나 함께 발생

우리는 경제생활에서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모든 선택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대가가 뒤따릅니다. 즉 선택과 선택의 대가인 포기는 언제나 함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려면 노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부가 생활비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에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돈을 더 쓰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나라경제 전체의 경우에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나치게 성장을 추구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

합니다. 반대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하여 너무 긴축하면 생산활동이 둔화 되어 실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잃는 기회비용

모든 경제적 결정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각각의 다른 선택 대안에 대하여 이득과 손실, 편익과 비용을 따져 보고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선택을 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 올바른 비용의 개념은 그 선택으로 직접 발생하는 명시적 또는 **회계적 비용**뿐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다른 선택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친한 친구와 생맥주 한잔을 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명시적인 비용은 술값이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하였을 선택, 예를 들어 집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독서하는 값어치를 추가하여 전체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또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와 같은 말이 있는데 이는 기회비용의 의미를 잘 말해 줍니다.

기회비용

무엇을 선택하려면 다른 것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포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아쉬운 것의 가치를 말함





| 읽 | 을 | 거 | 리 |

기회비용의 사례

희소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제현상을 분석할 때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기회비용은 보통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명시적 비용은 물론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회비용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도 이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육의 기회비용을 생각해볼까요? 우선 등록금, 책값, 하숙비, 잡비 등의 명시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기회비용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학을 다니지 않았을 경우 취직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장 운영을 위해 자신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자신의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직접 내는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공장 운영을 위해 포기한 셈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기한 임대료를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의 결과로 치르는 희생, 즉 기회비용이 그 선택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편익보다 적은 것을 선택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대안 가운데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그리고 편익이 같은 크기라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은 주어진 예산 제약 범위 내에서 만족을 최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의 기준을 나타내는 좋은 예입니다.

저축도 하나의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거나 목돈을 만들기 위한 저축은 결과적으로 미래 소비생활에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은 미래 소비와 현재 소비 사이의 선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읽 | 을 | 거 | 리 |

저축을 하는 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저축하는 이유가 (1) 주택마련(약 37%), (2) 노후생활 대비(약 28%), (3) 교육비(약 1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같은 노후생활 대비 보다는 교육비나 주거비에 저축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는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각 개인은 노후를 위한 저축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료 : ○○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의식 조사결과 보고서', 2003년 4월

3. 기본개념 몇 개를 알면 경제공부는 끝

한계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

앞에서 우리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덧붙여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 '한계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즉 한계적으로 생각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뷔페식당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먹어야 할지 그만 먹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싼 뷔페요금을 생각해서 배가 부르고 맛이 없더라도 더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먹든 안 먹든 요금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요금('매몰비용'이라고 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먹을 때 얼마나 더 행복감을 느낄지와 추가로 먹음에 따른 배탈의 가능성 등 불쾌감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몰비용
지불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항공사가 예약 없이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에게 항공료를 얼마 받아야 하는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300석의 비행기가 서울에서 목적지인 뉴욕까지 운항하는 데 3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면 좌석당 평균비용은 1,000달러가 됩니다. 만일 좌석의 여분은 많고 승객 한명이 600달러에 가겠다고 한다면 항공사는 이 사람을 태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승객 한 명을 더 태우면 추가적인 수입은 600달러이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기내식 비용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명확하겠지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선택에 따르는 추가적인 행복과 추가적인 희생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사고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인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효용을 가장 크게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행동이나 이윤을 최

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행동에서 이 한계의 원칙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 경제주체들이 편익과 비용 개념을 한계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 여건이 바뀌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여건의 변화를 ‘유인(인센티브 : incentive)’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유기농 채소의 값이 오르면 특별히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 채소로 대체할 것입니다. 농가의 입장에서 값이 올라 이윤이 증가하므로 유기 농지를 넓히고 인부를 더 고용하여 생산을 늘릴 것입니다.

나라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정부가 재정 균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율인상이 점차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근로 및 투자 의욕의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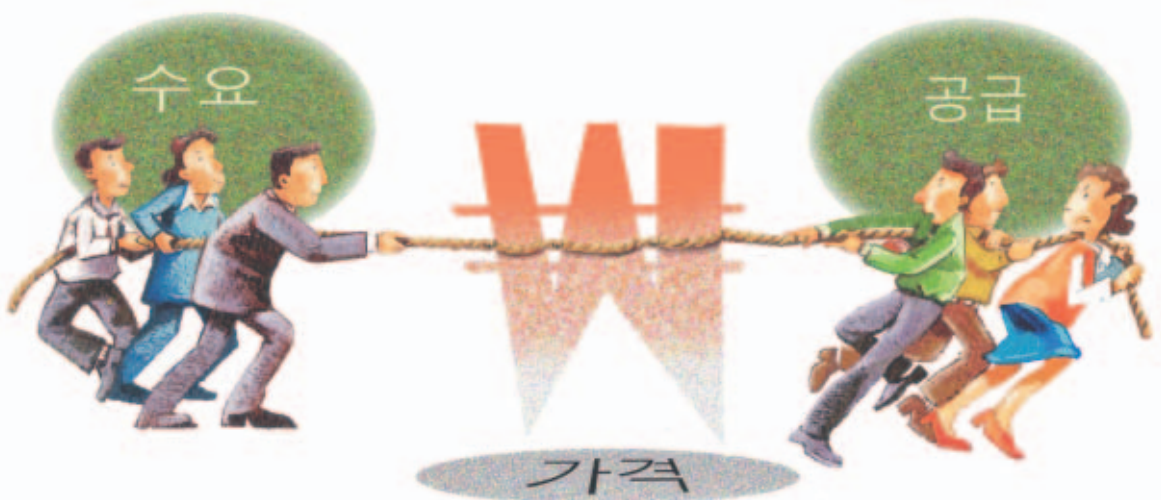


결국 세율인상은 나라의 총생산을 줄어둘게 함으로써 중국에는 오히려 세 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각종 규제, 조세제도 등의 유인을 변화시킬 때에는 이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담당자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유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러한 유인 제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로써 잘 발전시킨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모든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필수 개념

수요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일정한 가격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공급은 생산자가 어떤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수요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및 기호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은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이며 상품 가격과 생산비용 등의



움직임에 따라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균형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균형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과 판매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일치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물론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시장 전체의 수요 변동을 현실에서 관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명절 때 선물을 사려고 늘어난 손님의 줄을 보거나 판매 기업의 재고 수준 변화를 보면 시장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은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동시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분석수단입니다.

균형가격 · 거래량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말하며, 이때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균형거래량**이라 함

미시경제는 나무, 거시경제는 숲

경제문제는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두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 등과 같이 개별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경제행위를 분석하고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미시경제 분야라 하며 이는 나무 하나 하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민소득, 물가, 고용, 이자율, 환율과 같은 경제변수간의 상호관계나 경제정책의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거시경제 분야라고 합니다. 거시경제는 숲 전체의 모양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의 모습을 모두 알아야 하듯이 이 두 분야를 모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경제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시적 현상과 거시적 현상을 함께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환의 이익과 가격의 신비한 힘

시장경제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
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
지는 경제체제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한마디로 **시장경제**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감의 땅이 사과 재배에 적합한 데 비해 을의 땅은 쌀농사에 적합하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사과와 쌀 모두를 재배하기보다는 감은 사과에, 을은 쌀에 특화하면 전체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증가한 생산량을 교환하면 양쪽에 다 이득을 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은 전문화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우에도 각국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에 생산을 특화하여 교역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다만 국가 간의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화폐 간의 교환비율인 환율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국내거래보다 약간 복잡할 따름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

자원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자원을 사용하고,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을
최소로 하는 것

신호의 역할을 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면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통제하고 지시하는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상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은 어떠한 원리로 생산량을 결정할까요? 자기 회사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량 설문조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의 역할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을 예로 들어봅시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 휴대폰의 원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델의 가격이 타 모델 가격보다 높은 것은 바로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신호이며 제조업체는 이러한 신호에 따라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생산된 제품이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경제주체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가격이 오르면 일반 사람들은 사과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값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배와 같은 다른 과일을 더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도 사과 같이 과일을 소비해야만 행복감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를 경제문제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해결해 줍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시장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가격기구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은 시장참가자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어느 한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동일한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한다면 많은 고객들이 그 기업으로 몰려갑니다. 이 경우 다른 기업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질의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시장에 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되어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사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는 제품을 가장 싸게 생산되도록 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계획경제

한 나라의 경제운영이 국가의 통일된 의사 밑에서 계획적으로 시행되는 경제체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결부되어 있음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경제체제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있습니다. 구소련이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전의 중국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무엇을 얼마에 얼마만큼 생산 또는 판매하도록 정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의식주와 관련되는 상품의 가격을 국가가 무상 또는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분배 면에서 유리한 제도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유인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기술진보와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이 적체적소에 배분되지 않아 개인과 사회의 효용 및 후생극대화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순수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제가 완벽하지 않아서입니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소득분배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과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의 가격기능에만 맡기면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혼합경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정부가 공적개입을 통해 계획경제의 요소를 일부 혼합한 경제체제



중국식 자본주의

서방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통계 수치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통계의 편차는 정부의 수치 조작이라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지난 2004년 4월 28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경기 억제책이 한 달여 만에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의 통제력에 새삼 놀라면서 통계 수치의 이면에 있는 정부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중국은 시장경제라는 화려한 포장 덕에 자본주의 사회로 오인 받을 지경이지만, 엄연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공산주의 사회다.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라는 공식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다소 낯선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이러한 모순을 놓고 '중국식'이라는 한마디로 해석을 갈음한다. 중국은 현재 시장경제를 채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획경제의 역량이 상당하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어느 선에서 조절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러한 일이 그대로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지방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의 상품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가 상승으로 완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가격 인상을 억제할 경우 기업은 상품가격의 인상 대신 마진율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어 기업의 도산이 우려되면 또 다시 세제 혜택이나 은행을 통한 대출 증대 등으로 희생의 길을 마련해 주면서 조절 정책을 펴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통계 수치의 조절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이 현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제압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확실히 효과는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나 위안화 평가절상 역시 불가피한 요인이나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때까지 조절가능하다는 얘기다.

세계의 주요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한국의 경우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황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수치를 통해 행간의 의미를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한 시기다.

✦ 자료 : 파이낸셜뉴스, 2004년 6월 14일



경제현상 분석과 처방의 어려움

앞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 경제상식과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지식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문제가 모두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나라경제 전체와 관련 되는 경제정책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문에 이득이 되면 다른 부문에서 손실이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 10명이 모이면 11가지 해답이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크루그만(Paul Krugman)은 경제학이 물리학보다 어렵고 사회학보다 조금 쉽다고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현실 경제는 실험실과 달라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리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분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현상인 태풍은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그 양태가 거의 동일하지

만 경제현상인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은 역사적으로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해 그 결과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사회 현상을 단순한 모형에 의해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는 많은 오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설혹 현실성 있는 경제 분석을 통해서 현상을 잘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절히 처방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정책 유인이 변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도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자가 당초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당

2

시장경제의 기초

- 1.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
명절 귀성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남대문시장, 사이버시장
시장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
교환의 이득
- 2. 경쟁은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 전제
경쟁의 중요성
시장경제의 이상 - 완전경쟁시장
- 3. 시장경제에는 4인방이 뛰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주체
경제주체별 역할 분담



둘째 마당 _ 시장경제의 기초

1.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

명절 귀성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이나 추석 때가 되면 귀성열차표를 사려고 줄을 서는 것이 하나의 풍속처럼 되었습니다. 보는 사람이야 ‘아!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구나.’ 하겠지만 직접 표를 사야 하는 사람은 고생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예매가 가능해져 줄을 서는 사람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이것 역시 사이버 상에서 줄을 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터넷 구매가 선착순으로 이루어져, 양이 한정되어 있는 표를 사려면 정해진 시각에 남보다 먼저 클릭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컴퓨터를 접속해 놓고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도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명절 기차표를 사려는 수요자가 철도청에서 내놓는 공급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명절 기차표의 공급량과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한, 차표에 대한 수요는 공급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 한 예입니다.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추첨을 통해 수요자를 고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판매자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에게만 재화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격기구가 제대로

가격기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
며, 반대의 경우는 가격
이 하락하여 수요와 공
급의 균형을 달성함으로
써 경제 안의 생산 소비
분배가 조정되는 체계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시작



25일 오전 서울역, 많은 사람들이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설날 귀성표 예매를 하고 있다.

※ 자료 : 연합뉴스, 2003년 11월 25일

가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매우 낮게 정해진 가격의 자장면을 사먹기 위해서는 중국 집 개점시간에 맞추어 긴 줄을 서야 하거나, 추첩에서 떨어져 가고 싶은 해외여행을 몇 년 동안 못 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을 미리 구매한 압모 상에게 정상보다 엄청나게 높은 웃돈을 주고 사야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행히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는 시장경제 체제에 살고 있어 이러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기구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 수준에서 수요자는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고 기업은 그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균형가격은 경제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격은 우선 경제주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격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자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또한 생산을 통해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줍니다. 가격은 또한 경제활동의 동기를 제공하고 자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배추에 비해 무 값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무를 더 재배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여 배추 재배 농가가 무 재배로 바꾸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무 생산에 새롭게 참여하기도 합니다.

남대문시장, 사이버시장

우리는 흔히 시장을 남대문 의류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시장만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우리 주변의 조그만 구멍가게나 포장마차를 비롯하여 주유소, 노점상, 복덕방도 일종의 시장입니다. 증권거래소나 법률사무소도 주식이나 법률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므



| 읽 | 을 | 거 | 리 |

포로수용소의 가격제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에게 잡힌 독일군 포로나 독일군에게 잡힌 연합군 포로는 각각 수용소에서 독특한 경제생활을 경험하였다. 포로수용소 경제는 생산활동이 없는 아주 단순한 경제이다. 수용소를 운영하는 나라와 국제적십자사, 그리고 외부 독지가들이 수용소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였다. 각 포로는 통조림 우유, 통조림 쇠고기, 잼, 버터, 빵, 과자, 담배 등의 식료품을 똑같이 배급받았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경제문제는 포로수용소 경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포로수용소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포로들이 각자 배급받은 것을 자기가 소비하는 것으로 소비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전혀 딴판이었다. 처음에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이웃동료에게 담배를 거저 주는 호의를 보인다. 그러나 곧 무상증여가 바람직스럽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이 판명된다. 각자가 싫어하는 품목을 내놓고 좋아하는 품목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활동이 떳떳하고 쌍방의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용소 전체가 모든 배급품이 거래되는 자유시장이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 포로가 수용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배급품목의 상대가격*이 결정되었다. 각 품목의 가격은 담배개비 수로 표시되었다. 담배가 교환의 매개수단이자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로 등장하는 것이다. 모든 배급품의 담배개비 수로 표시한 가격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의 지배를 받는다. 각 배급품목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총배급량 수



준에서 수직인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결국 각 품목의 가격은 시장수요가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담배개비)에서 통조림 공급량이 과분족 없이 배분된다. 그만큼의 화폐(=담배개비)를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통조림을 소비한다. 포로끼리 서로 싸우거나 수용당국이 개입하지 않고서도 소비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배급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포로수용소의 시장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저절로 생성하여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아무도 “배급품들을 할당하기 위하여 가격제도를 채택하자”거나 “가격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에 부쳐 봅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온대지방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생성되었다.

※ 자료 : 안국신, '신경제학개론'

* 어떤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표시한 다른 상품의 가격. 이에 비해 화폐로 표시된 가격은 절대가격이라고 함

로 시장입니다.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천연자원, 노동과 자본도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므로 역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선수와 구단 사이에 연봉계약이 이루어지고 방송국에서는 연예인과의 사이에 출연계약을 맺으므로 그곳 역시 시장입니다.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도 각각 시장이 됩니다. 인터넷상에도 홈쇼핑 같은 여러 가지 사이버시장이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 압력, 교육시장 개방 대책마련 시급, 방송시장 개방 불가피’ 등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쌀시장은 물론이고 교육과 방송도 각각 하나의 시장이며 외국이 우리나라 자체를 한 시장으로 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시장을 종합해 보면 좀더 포괄적으로 시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매개체입니다. 전통적인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는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외환시장과 같이 네트워크에 의해 장소를 초월하여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장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시장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두 개의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공급)하려는 측과 구매(수요)하려는 측의 힘이 항상 겨루면서 공급자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요자는 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으로 상품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질서정연합니다. 또한 귀한 물건의 값은 비싸고 흔한 물건의 값은 싼 것을 보면, 누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품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고, 가격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는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

진지진능한 신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주체들의 이기심에 방임해 두어도 가격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손에 비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갑자기 귀해지면 시장에서는 그것의 가격이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상품의 소비를 줄입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귀해진 상품을 더욱 아껴 쓰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뿐, 남에게 이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쌀을 사는 사람은 없으며, 헐벗은 이웃을 걱정해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해서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얼핏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이익과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업|을|거리|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또는 농부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자기가 얼마나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다만 스스로의 안녕이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목적도 달성하게 된다. 즉 사리(私利)를 추구하는 가운데 공익(公益)도 저절로 증진된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공익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 전체 사회의 복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추구는 자연적으로, 아니 필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이끈다.

※ 자료 : 박원규 외 공역, '테일러 경제학'

교환의 이득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한 개에 800원 하는 사과 다섯 개를 샀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가 사과를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그가 지불한 금액 4,000원보다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찮음을 무릅쓰고 시간을 들여 시장까지 가서 사과를 사는 수고를 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언제나 그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 만족감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고 여기에서 지불한 금액을 빼면 바로 그 교환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교환에서 얻는 잉여(surplus)라는 뜻에서 **소비자잉여**라고 부릅니다.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 소비할 때 처음에는 매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컨대 사과 다섯 개를 먹는 소비자의 경우, 첫 번째 사과를 먹을 때의 만족감은 매우 크지만 두 번째 사과를 먹을 때의 만족감은 약간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한층 더 만족감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사과를 다섯 개를 산 소비자의 경우, 다섯 번째 사과를 소비할 때의 만족감이 사과의 가격(800원)과 똑같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네 번째까지는 가격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에 가서는 만족감이 실제 지불한 가격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다섯 번째 사과가 주는 만족감의 크기가 돈으로 따져 600원이라면 소비자는 그 다섯 번째 사과를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불한 가격보다 더 작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사과가 가격보다 더 큰 만족감, 예컨대 1,000원에 해당하는 만족감을 준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다섯 번째 사과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과를 사게 됩니다. 예컨대 여섯 번째 사과가 900원에 해당하는 만족감을 준다면 그것까지 사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어떤 상품의 마지막 단위에서 나오는 만족감이 가격과 똑같아지는 수준에서 구입량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의 거래에서도 소비자들만이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



방, 즉 생산자도 이득을 얻는데, 이를 **생산자잉여**라고 부릅니다. 생산자잉여는 물건을 팔고 얻은 수입이 그것에 대해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생산한 사람이 사과 하나 하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사과에 대해서는 400원, 두 번째는 500원, 세 번째는 600원, 네 번째는 700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8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지막 다섯 번째의 사과에 대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가격과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섯 개보다 덜 팔거나 아니면 더 많이 파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 따르면, 사과를 생산해 파는 사람은 다섯 개에 최소한 3,000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얻는 수입은 4,000원이 되므로, 1,000원의 생산자잉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사과의 거래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의 교환으로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교환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것에 해당하는

생산자잉여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수입과 그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수입과의 차이

'사회 후생의 증가'가 생깁니다. 이를 **사회적 잉여**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이 상품을 교환할 때 이것이 가장 커질 수 있습니다.

2. 경쟁은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 전제

경쟁의 중요성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임하면서 다양한 경쟁을 합니다. 가격경쟁을 비롯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 보다 앞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쟁, 보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경쟁 등 무수



히 많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시장의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기구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면 가격은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을 나타내주는 신호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과 산업이 번성하는 반면 유망한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경쟁은 나아가 기술진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쟁이 없고 독점이윤을 장기적으로 누리는 기업이나 산업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시장경쟁이 인력개발과 기술진보를 가져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경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이란, 자유로운 시장참여와 경쟁 그리고 자율적 의사에 의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인터넷 속도경쟁 불붙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초고속인터넷 업계에 속도경쟁이 재점화됐다. A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광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어 B사가 50Mbps급 초고속 인터넷을 기존보다 25%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나선 것. 이에 질세라 C사도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초고속 인터넷 업계의 속도경쟁이 다시 불붙게 됐다.

초고속 인터넷 업계의 속도경쟁을 유발한 것은 A사. 이 회사는 현재 서울 경기 충청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 아파트 단지에 양방향으로 100M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광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며 B사와 C사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속도는 기존 서비스보다 10배 정도 빠르다. 이 회사는 광랜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에 시내전화와 위성방송 등을 하나로 묶은 트리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신규 아파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건설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B사는 최근 600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 가입자 유출방지를 위해 기존 서비스보다 2.5배 빠른 50Mbps급 상품을 출시했다. 경쟁업체의 타 업체 인수에 따른 초고속인터넷 시장 구도 재편을 앞두고 자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높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선두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 자료 : 헤럴드경제, 2004년 12월 21일

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편 공정하다는 것은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에 있어 강매, 기만, 우월적 지위행사 등이 배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경제의 이상 -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

수많은 가격과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어떠한 생산요소나 기업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으며 누구나 완전한 시장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의 진공상태와 마찬가지로 완전경쟁시장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지만 이상적인 시장형태의 한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장조직을 평가하는 잣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완전경쟁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먼저, 생산과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질은 같아야 합니다. 품질에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달

리 형성됩니다. 둘째, 개별 경제주체가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즉 모든 시장참가자들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taker)입니다. 셋째, 모든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와 시장 여건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보수집과 이용에 따른 어떠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도 없어야 합니다. 끝으로,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은 물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 앞에 설명한 가격의 신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임|을|거|리|

완전경쟁시장 흥내내기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장의 예를 찾기는 무척 힘들다. 다른 조건은 고사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한 산업 안에 여러 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느 나라든 대부분의 산업에서 불과 몇 안 되는 기업들이 독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중략)

어떤 산업 안의 경쟁기업 수가 적더라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만 한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어떤 시장에서의 표면적 경쟁형태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해, 완전경쟁시장이 되지는 못해도 이를 흉내 낼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경합시장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없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경합시장이란 진입과 이탈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뜻한다. 따라서 이 시장 안의 기업은 잠재적인 진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 때문에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의 수준으로 올리지 못한다. 경합시장 이론은 이와 같은 근거에서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제거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은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진입과 이탈의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 '완전경쟁시장 흉내내기'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 자료 : 이준구 외, '경제학 들어가기'

시장 가격 수준에서 기업은 생산에 계속 참여할 것이고 수요자는 원하는 만큼 소비를 결정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잘 배분되어 경제문제가 해결됩니다.

3. 시장경제에는 4인방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주체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자를 **경제주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모든 경제주체가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생산은 주로 기업에 의해, 그리고 소비는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물품을 구입하

경제주체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4가지로 구분



고 공무원을 고용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되면서 우리의 경제활동은 국내 경제주체 사이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방경제에서는 해외부문을 별도의 한 경제주체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라는 운동장에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4인방이 선수로 뛰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각 경제주체는 시장경제에서 일정한 목표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계는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를 통해 얻는 욕망의 만족감, 즉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해외 부문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 2-1 경제주체

국 내		해 외 부 문	
〈민 간〉	〈공 공〉	〈민 간〉	〈공 공〉
가 계 (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	정 부 (사회 전체의 후생극대화)	가 계	정 부
기 업 (생산을 통한 이윤극대화)		기 업	



경제객체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을 말하는데, 보통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상 품	자 유 재		햇빛, 공기, 물, 바람 등
	경 제 재	생산재	원료, 재료 등
		소비재	식품, 가구, 의류 등
서 비 스			교육, 의료, 운송 등

경제주체별 역할 분담

가계는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각 자연인을 말합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소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말처럼 가계의 소비 선택은 결국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줍니다.

가계는 또한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정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되지 않고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가족을 위해 요리나 세탁을 하는 등 직접 생산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저축함으로써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한은 '2분기 가계소비지출' 보면….

가계의 소비지출이 팍팍해지면서 오락·문화비와 음식·숙박비뿐 아니라 교육비 지출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스트레스 지수를 반영하는 술·담배와 의료·보건비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2일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국내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은 83조 2,380억 원으로 전분기의 83조 9,681억 원보다 0.9% 줄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은 지난해 2분기 83조 7,727억 원에서 3분기 84조 7,479억 원, 4분기 87조 6,320억 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올 1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부 항목별 2분기 가계지출을 보면, 취미생활 등을 위한 오락·문화비가 6조 1,468억 원으로 1분기에 견주어 13.5% 줄었고, 외식과 장거리 여행 등에 쓴 음식·숙박비는 6조 1,016억 원으로 5.3% 감소했다. 휴대전화 이용 등 통신비도 5조 8,361억 원으로 4.9% 줄었다. 과외비 등 교육비는 4조 3,910억 원으로 1분기에 견주어 1.8% 축소됐다. 교육비는 지난해 4분기에 5조 2,726억 원에 이르렀지만, 올 1분기에 4조 4,724억 원으로 줄어든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다. 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며, 전년도 대비 하락률도 1분기 -0.5%에서 2분기에 -0.7%로 확대됐다.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놓고 즐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이어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도 점점 인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 자료 : 한겨레신문, 2004년 8월 23일

기업은 천연자원,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주체입니다. 즉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이러한 기업활동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를 막는 일 등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받은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즉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국방, 외교, 치안 등 공공재와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생산



합니다. 정부는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만 맡겨둔다면 사회구성원간의 소득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누진세제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해외부문은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및 정부를 말합니다.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관광, 외국인의 국내관광 등 역시 우리나라 가계, 기업 및 정부의 경제활동이면서

해외의 경제활동이기도 합니다. 해외는 원유나 커피, 바나나처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은 물론 우리나라에 부족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합니다. 또한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국내시장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수출시장의 역할도 합니다.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실미도 · 태극기, 해외서도 신기록 경쟁

한국영화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해외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끌면서 한국영화 본격 수출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영화의 배급사는 17일 일본에 미니멈 개런티 300만 달러 보장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 최고가 수출 기록이었던 '올드보이'의 220만 달러를 웃도는 최고의 수출 규모이다. 일본 수입사는 아무즈, 배급사는 도에이(東映)이며 아사히TV가 수입·배급에 공동 참여하게 된다. '실미도'도 그동안의 일본 수출계약 조건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항들을 보장받아 한국영화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배급사 측은 설명했다.

(이하 생략)

※ 자료 : 머니투데이, 2004년 2월 17일

시장 이해하기

셋째 마당

3

가격과 시장

- 1. 수요·공급과 재미있는 탄력성 개념
가격의 결정과 변동은 수요·공급 양자에 의해
수요와 탄력성
공급과 탄력성
- 2. 경쟁은 시장형태를 구분짓는 잣대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독과점시장
독과점시장에 대한 규제



셋째 마당 _ 가격과 시장

1. 수요 · 공급과 재미있는 탄력성 개념

가격의 결정과 변동은 수요 · 공급 양자에 의해

수요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가격 하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제외)

공급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가격 하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옛날에는 가격이 공급자의 생산비용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중세시대 성경책의 가격은 성경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같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의도가 동시에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가격수준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량을 모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때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현재의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좀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이 상품을 사려고 할 것이므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일정부분 포기하게 되어 수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많아지므로 생산을 늘릴 것이고, 새로운 기업이 더 생겨나기도 해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균형가격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균형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변동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어느 힘이 더 큰가에 따라 가격의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표 3-1 수요 및 공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공급 불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 불변	가격 불변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수요증가 < 공급증가) 가격 상승 (수요증가 > 공급증가)	가격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가격 하락	가격 하락 (수요감소 > 공급감소) 가격 상승 (수요감소 < 공급감소)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닭고기, 배추 값 수요증가로 강세

닭고기와 배추 값이 수요증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닭고기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수요량이 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서 이번 주 들어 마리당 100~400원이 오른 3,700~4,700원에 거래됐으며 이 중 부산이 가장 크게 올라 400원이 오른 4,700원으로 지난 주보다 9.3% 뛰었다. 배추는 장마 이후 고온 다습한 날씨로 출하량이 감소한 데다 수요까지 증가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서 포기당 100~800원이 오른 1,980~2,780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시금치는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작황이 부진해 한 단에 200~600원이 올랐으나 풋고추는 매기 부진으로 지난주보다 20~30% 가량 가격이 하락했다.

※ 자료 : 연합뉴스, 2004년 7월 22일



| 줌 | 더 | 알 | 아 | 보 | 기 |

경제를 알기 위한 분석도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앵무새에게 '수요'와 '공급'을 읊조리도록 가르치면 또 한명의 경제학자가 배출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머릿속에 금방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형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개념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수요곡선은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사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덜 사려 할 것이고 싸지면 많이 사려 할 것임은 일상생활에 비추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돼지고기 한 근의 가격이 5,000원일 때 사회 전체적으로 100근의 돼지고기를 수요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은데 가격만 1만 원으로 오르면 50근

을 수요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이으면 그림1과 같은 돼지고기 수요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공급곡선도 같은 방식에 의해 그릴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의 가격이 5,000원일 때 사회 전체적으로 50근의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1만 원일 때 100근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림2 와 같은 돼지고기 공급곡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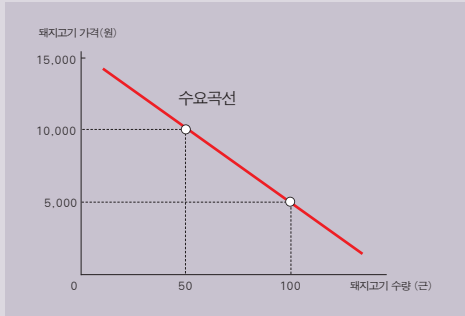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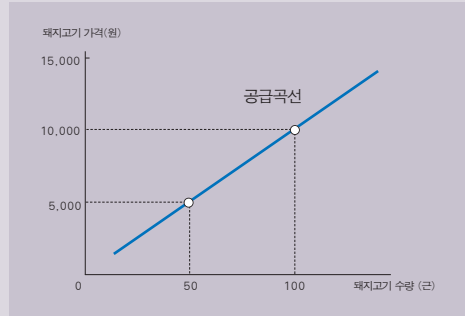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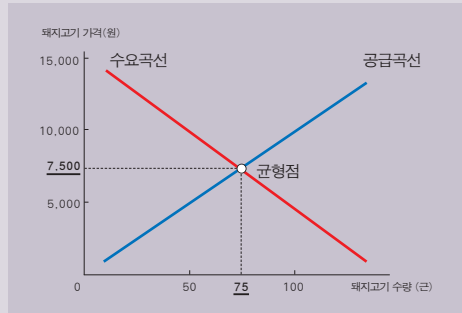


그림 2



이제 두개의 곡선을 합쳐서 보면 그림 3과 같이 돼지고기 한 근당 7,500원이라는 균형가격과 75근이라는 균형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



자!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수요와 탄력성

보통 탄력이라 하면 고무줄을 뒤로 당겼다 놓을 때 앞으로 튀어 나가는 것처럼 어떤 작용이 일어난 뒤에 다시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말합니다. 시장경제의 핵심 용어인 수요, 공급, 가격 등에 이 탄력의 개념을 적용하면 경제현상을 보다 재미있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탄력성은 '충격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위의 고무줄에 대한 예와는 달리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측정 단위를 변화율로 통일하여 계산합니다. 어떤 종류의 충격이 왔느냐에 따라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대상에 따라 '수요 또는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말을 붙여 사용합니다.

$$\text{탄력성} = \frac{\text{반응을 하는 쪽의 변화율(\%)}}{\text{충격을 주는 쪽의 변화율(\%)}}$$

탄력성은 반응하는 방향에도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응의 크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같은 경우를 단위탄력적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의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의 소득탄력성입니다. 소득이 늘면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정상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의 보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보리밥보다는 맛 좋은 쌀밥을 많이 먹게 되어 자연히 보리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상재는 다시 **필수재**와 **사치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율보다 수요의 증가율이 낮은 경우, 즉 비탄력적인 경우 이를 필수재라고 합니다. 소득이 두 배로 늘었다고 밥을 두 배로 먹지는 않습니다. 보통 필수재는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일정량을 넘어 너무 많이 수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치재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치재는 소득이 줄어들 때 수요가 소득의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합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입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가격증가율보다 수요의 감소율이 큰지 작은지의 반응 정도가 주요 관심대상입니다. 그래서 부호는 생

필수재
소득의 증가(감소)율보다 수요의 증가(감소)율이 낮은 재화

사치재
소득의 증가(감소)율보다 수요의 증가(감소)율이 높은 재화



|워|을|거|리|

불황 땐 신사복 매출이 가장 먼저 준다?

‘불황기에 신사복 매출이 가장 먼저 줄어든다.’, ‘불황에는 립스틱 매출이 호조를 보인다.’ 이처럼 경기와 패션제품 매출과 관련한 각종 속설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런 속설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이런 속설과 반대되는 통계자료들이 나오기도 한다.

‘불황에는 신사복 매출이 가장 먼저 줄어든다.’는 속설은 경기가 나빠지면 일반 가정에서는 여성에 비해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는 남성의 옷 소비부터 가장 먼저 줄이기 때문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사복 매출은 주가와 연동한다는 백화점 측의 매출 자료가 나온 적도 있다. 하지만 전체 신사복 시장 규모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이런 속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섬유컨설팅 전문 업체인 ○○는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종은 여성복이며 신사복의 민감도는 5개 복종 중 4위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6.7%에서 10.9%로 급격하게 변동했던 지난 1998년과 1999년 여성복 시장의 성장률은 -33.3%에서 22.6%로 급변, 55.9%포인트의 변동 폭을 기록했다. 이어 캐주얼, 스포츠 의류와 내의가 각각 48.6%포인트, 36.7%포인트의 변동 폭으로 뒤를 이었고, 신사복은 35.3%포인트를 기록해 앞의 세 복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여성복은 사치재로의 성격이 강해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남성복은 필수재 성격이 강해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최근 발간한 ‘2003년도 상반기 의류소비실태’ 자료에서도 불경기였던 올 상반기 여성복 시장은 작년 동기에 비해 18.7% 감소한 반면 남성복의 경우 35.9%나 증가해 속설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남성들 사이에 꽃미남 열풍과 함께 옷차림 등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복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자료 : 새한 전자사보 19호

락하고 절대값만을 따집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엇보다 기업의 수입과 직결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상승시키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커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정확히 1(단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변해도 수입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미용실에서 5,000원 하던 커트요금을 10% 올렸을 때 한 달에 200명이던 수요가 10%만큼 줄어든다면 미용실 수입은 가격을 올리기 전이나 올린 후나 별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5,000 \times 200 \approx 5,525 \times 181$). 이 경우가 단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똑같이 커트요금을 10% 올렸을 때 이번에는 수요가 10%보다 적게 줄어든다면 수입은 처음보다 증가할 것이고 수요가 10%보다 많이 줄어든다면 수입은 감소할 것입니다.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습니다. 생활필수품은 가격이 웬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담뱃값 인상, 경제효과도 높다

담배 가격을 올리면 담배의 수요가 줄어든다. 모든 재화는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는 줄어들고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는 늘어나게 된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가이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다. 우리나라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에서 0.7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담배 가격을 10% 인상할 경우 담배 소비량은 3%에서 7%까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과학적 근거이다.

(중략)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담배회사의 판매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소의 비율이 담배 가격 인 소비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담배 가격의 인상은 담배 소비의 감소를 유발시키며 그 결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또 담배 가격 인상이 조세부과를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의 조세수입을 증대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담배를 공급 판매하는 담배인삼공사 및 수입담배 회사들의 판매수입도 증대시킨다.

✦ 자료 : 한국경제신문, 2004년 8월 3일

만큼 오르더라도 꼭 소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용실의 커트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필수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가격을 올린다면 대체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원래 상품의 수요는 많이 줄게 됩니다. 즉 한 미용실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주변에 경쟁 미용실이 많이 있다면 커트요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 되어 가격을 올릴 경우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 상품의 수요는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에 관련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특정한 다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가격이 많이 오르면 커피에 첨가하는 설탕의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즉, 커피 가격에 대한 설탕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부호를 갖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완재**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대체재**는 교차탄력성이 양(+)인 경우인데 꿩고기 가격이 올라갈 경우 이를 대체하는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상품군들이 있는 반면, 배추와 낫싧대, 운동화와 칠판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 즉 교차탄력성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독립재라고 합니다.

보완재

커피와 설탕, 카메라와 필름처럼 한 상품씩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

대체재

그 용도가 비슷하여 한 상품 대신에 다른 상품을 소비해도 얻는 만족에는 별 차이가 없는 상품들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조류독감 이후 엇갈린 운명

올해 초 조류독감 파동 이후 닭고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오리고기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14일 농협중앙회와 계육협회, 오리협회 등에 따르면 닭고기는 불황에 따른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대체수요로 급격한 소비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오리고기는 소비 위축으로 물량이 넘쳐나 가격이 폭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략)

이처럼 닭고기 값은 오르고 오리고기 가격은 폭락하는 원인은 축산 농가들의 수급조절 실패도 크지만 장기불황에 다른 소비지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리고기협회 관계자는 “불황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오리고기보다는 닭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대체수요도 닭 쪽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자료 : 매일경제, 2004년 12월 15일

공급과 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같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주로 가격이 올랐을 때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얼마나 신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이번 달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도 새로운 쌀을 공급하려면 1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어 비탄력적입니다. 반면에 반도체나 TV같은 공산품은 가격이 오를 경우 바로 공장가동률을 높여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입니다.

어떤 재화에 대해 상품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와 생산자 가운데 누가 실제로 세금을 내게 될 것인가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탄력적인 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충격에 대한 운신의 여지가 적다는 의미이므로 세금이라는 외부 충격에 대해 앓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상품의 가격이 1만 원이고 정부가 여기에 세금을 100원 붙인다고 합시다.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큰 반면 공급은 가격탄력성이 전혀 없다면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수요가



| 읽 | 을 | 거 | 리 |

발렌타인데이의 꽃 가격

매해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면 연인들 못지않게 즐거움에 들뜨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꽃가게 주인과 초콜릿가게 주인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날 장미꽃 값은 크게 뛰는 데 반해 초콜릿의 가격 상승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장미꽃과 초콜릿이라는 상품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초콜릿과 같은 공산품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큰 폭으로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초콜릿의 공급은 탄력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미꽃의 공급량은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여도 단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장미꽃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두 상품의 수요가 엇비슷하게 증가하여도 초콜릿 가격보다 꽃 값이 훨씬 크게 오르는 것이다.

✦ 자료 : 김준원, '포인트경제학'

많이 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1만 원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1만 원 가운데 1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전보다 100원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가 전혀 탄력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세금 100원 만큼을 수요자에 전가하여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전과 같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고, 세금만큼 가격을 올렸으므로 이윤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일 | 을 | 거 | 리 |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1990년 미국 의회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보석, 고급승용차 등에 대해 부과하는 사치세를 채택하였다. 이 세금의 목적은 부담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데 있었다. 앞에 열거한 사치품은 부자들만이 살 수 있으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에 대해 과세하는 논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여 나타난 결과는 의회의 의도와는 판이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요트 시장을 생각해 보자. 요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다. 백만장자들은 요트를 사는 대신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사거나 유럽 여행을 하거나 자손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트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요트 공장을 다른 재화의

생산 공장으로 쉽게 변환할 수도 없고 요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시장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조세의 귀착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세금부담은 주로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즉 요트에 대한 세금은 주로 요트 제조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부담하여 실제로는 세금만큼 요트 판매로 얻는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요트 제조업 근로자들은 부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에게 전가된 것이다.

사치세가 시행된 이후 이 세금의 귀착에 대한 가정이 옳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사치품 공급업체들은 의회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납득시켰고 그 결과 의회는 1993년 대부분의 사치세를 폐지하였다.

※ 자료 : 맨큐, 김경환 외 공역, '맨큐의 경제학'



2. 경쟁은 시장형태를 구분짓는 잣대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앞에서 완전경쟁시장을 알아보았지만, 시장은 경쟁 정도에 따라 보통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공급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경쟁시장에는 공급자 수가 다수, 독점시장에는 하나, 과점시장에는 소수입니다. 수요독점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품의 경우 수요자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보통 공급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을 구분합니다. 수많은 공급자가 있는 주식시장은 경쟁시장이며, KT&G(구 한

국담배인삼공사)처럼 한 개의 기업이 국산담배라는 한 상품의 전부를 생산하는 경우는 독점시장입니다. 자동차시장처럼 몇 개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은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또한 진입장벽에 의해 구분하기도 합니다. **진입장벽**이란 특정 상품 시장에 새로운 공급자가 참여하는 데 방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참여할 의사와 생산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의 전략에 의해서건 제도에 의해서건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새로운 기업의 진입 기회가 전혀 없으며, 과점시장에서는 두 시장 중간 정도의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진입장벽

특정 상품시장에 새로운 공급자가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

다음으로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시장가격보다 가격을 높이면 상품이 팔리지 않고 가격을 낮추면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윤을 최대로 하기 위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생산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경쟁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 3-2 경쟁에 따른 시장별 비교 (1)

구 분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
공급자 수	다 수	소 수	1 개
진입장벽	없 음	높 음	매우 높음
기업의 가격 통제력	없 음	있 음	절 대적

독과점시장

완전경쟁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시장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독과점시장**이 많이 존재합니다. 시장에 독과점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이 크게 생기는 것을 다른 경제주체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 시장에 새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시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독점이 생성되고 유지되게 하는 진입장벽은 보통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시장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수요량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성되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 부릅니다. 자연독점은 전력, 전화, 수도 등과 같이 설비투자에 거액이 소요되는 산업의 초기 육성단계

독과점시장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



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둘째, 정부가 특허권, 판매권, 인허가 등을 한 기업에만 내줌으로써 법적으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명가에게 몇 년간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특허권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새로운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과거 나라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소금을 전매한 것이나 담배와 홍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독점하여 전매하였던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넷째,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를 독점으로 소유하면 알루미늄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독점기업

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의 시장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점시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구미가 당기는 일입니다.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볼 것 없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독점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기업이 도산할 정도나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가격전략을 일시적으로 편다거나 또는 독점기업이 되기 위해 경쟁기업을 합병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어 있는 독점기업 체제는 경영자나 근로자 어느 누구도 구태여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독점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쌓는 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것도 비효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공급량은 완전경쟁시장의 공급량보다 적으며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과점시장은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장 형태입니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사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등에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과열경쟁은 개별 기업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의 기업이 힘을 합해 마치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원유가격의 상승을 위해 담합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점기업 역시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점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은 기업 간 담합이나 기업 간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독점시장보다 낮고 경쟁시장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급량은 독점에 비해 많지만 경쟁시장보다는 적

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독점시장보다 높지만 경쟁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 3-3 경쟁에 따른 시장별 비교 (2)

구 분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
가 격	경쟁가격	<	과점가격	<	독점가격
생 산 량	경쟁생산량	>	과점생산량	>	독점생산량
개별 업체 이익	경쟁이익	<	과점이익	<	독점이익
사회 전체 후생	경쟁후생	>	과점후생	>	독점이익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독점적 경쟁시장

현실에서는 독점시장의 성격과 경쟁시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옷가게, 극장, 식당, 미용실 등은 똑같은 상품을 파는 것 같지만 품질과 서비스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독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시장진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경쟁시장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경쟁시장은 과점시장처럼 독점과 완전경쟁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 시장구조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독과점시장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하여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큰 독과점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그들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과점화로 해당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는 기준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3개 이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들 독과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남용, 출고조절, 신규진입 방해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격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범위반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



카르텔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을 **카르텔(cartel)**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는 물론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눈치보기식’ 수수료 인상도 담합

카드사들의 ‘눈치보기식’ 수수료 인상은 담합행위이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4개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을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 4사는 1998년 1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올렸다”며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 카드 4사는 시장점유율 2~5위의 회사로 시장점유율이 11.4~20.1%에 달하고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진입장벽이 있는 과점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동시 인상은 가격을 통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개 카드사는 1998년 초 비슷한 시기에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카드사별로 35~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자료 : 문화일보, 2004년 2월 20일

넷째 마당

4

소비자와 기업

- 1. 가계는 경제를 지휘하는 '지휘자'
소비의 힘
소비활동과 효용
합리적인 소비
- 2. 기업은 경제의 '엔진'
기업의 힘
생산활동과 비용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기업가정신과 기업윤리



넷째 마당 _ 소비자_와 기업

1. 가계는 경제를 지휘하는 ‘지휘자’

소비의 힘



| 읽 | 을 | 거 | 리 |

박제가의 ‘우물론’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은 퍼서 쓸수록 자꾸 채워지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리고 마는 것이다. 비단옷을 입지 않으니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여공(女工)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비뿔어진 그릇을 닦하지 않으니 일에 기교가 없고, 나라에 공장(工匠)과 도야(陶冶 : 질그릇을 굽고 연장을 버리는 장소)가 없어지게 되며 나아가서는 기술과 재주가 없어질 것이다.

※ 자료 : 김상규, ‘박제가의 우물론과 균형소비교육’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제가는 일찍이 ‘북학의’라는 저서에서 소비의 중요성을 위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물물은 적절하게 퍼서 사용하면 다시 신선한 물로 계속 채워집니다. 경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이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는 또 다시 생산을 유도하는 경제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물에 있는 물을 아깝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이 말라 버리고 결국에는 우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산된 물건도 아깝다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재고로 쌓이고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비단옷과 기교 있는 질그릇 예는 소비주체인 가계가 품질 좋은 상품을 꾸준히 소비함으로써 생산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

처럼 경제에 있어서 소비의 역할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지속하게 할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기술발전을 유도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뜻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생산을 확대하라는 신호를 주며 나아가 그 기업이 포함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산을 축소하라는 신호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을|거|리|

올 소비 키워드는 3S

2005년 히트상품이 되려면 싱글족과 안전의식, 20대 중심의 나르시스트를 공략하라.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2005년 소비 키워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싱글(single)과 안전(safety), 자기만족(self-satisfaction) 등 '3S'가 올해 강세를 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 테마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 명이 1가구를 구성하는 1인 가구 수가 올해 270만에 이르는 등 싱글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싱글족이 선호하는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글족 상품의 대표적인 특징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복합 다기능'. 모바일 서비스업체의 통합카드나 신차 판매 종합서비스(중고차 처리, 폐차 등의 일괄처리) 등의 할인형 패키지 상품, 결혼정보 업체, 파티 관련업체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보안상품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폐쇄회로TV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휴대폰, 인터넷 안전사고 감시 시스템, 이민, 홈스쿨링(home schooling) 등이 주목 받을 상품.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든 상관 없으면서 흥미가 있는 것에 철저히 집착하는 형태를 보이는 20대 중심의 나르시스트도 공략 대상이다. 자기 노출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서비스가 3년 만에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 자료 : 매일경제, 2005년 1월 5일

소비활동과 효용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의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효용이 추가로 증가한 분을 **한계효용**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소비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효용은 증가하지만 한계효용은 감소합니다. 무더운 날, 청량음료를 마시는

효용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소비자의 만족감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첫잔의 경우 시원함의 효용은 매우 크지만 그 다음부터 한 잔이 주는 추가적인 만족감은 잔을 더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성질을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뷔페식당입니다. 뷔페식당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먹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계속 먹게 되면 그 음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여 다른 음식이 주는 한계효용보다 작아지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계효용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거나 일정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뷔페식당의 예를 계속 들어보면, 여러 가지 메뉴 중 갈비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에 갈비부터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비를 아무리 먹어도 한계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음식보다 여전히 갈비의 한계효용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갈비 먹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하나의 재화만 소비하고 다른 재화는 소비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계효용이 감소한다고 해서 모든 재화가 일정한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화는 상당량을 소비할 때까지 한계효용이 별로 감소하지 않지만, 어떤 재화는 한계효용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더운 여름 끝에 오는 시원한 가을 날씨가 이틀 연속 지속된다고 해서 둘째 날의 한계효용이 첫째 날의 한계효용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스포츠 신문이나 영화는 한계효용이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날에 두 부의 스포츠 신문을 구입하거나 같은 영화를 끝까지 두 번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가계는 효용을 크게 만들기 위해 소비를 합니다. 효용이란 것이 상품 소비에 따라 얻게 되는 만족이므로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전체 효용은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소득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예산제약**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효용이 가장 커지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예산제약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지출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

합리적인 소비

소비활동은 각자의 효용을 크게 해 주지만 동시에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자주권**의 철저한 실천을 통해 불량품이나 부당 영업행위 등이 발붙이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소비자주권
최소한 자원의 배분에 소비자의 선호가 존중되고 반영되는 현상



| 좀 더 알아보기 |

효용 극대화 방법

어떻게 소비선택을 해야 전체 효용이 가장 큰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000원을 가지고 갈비와 초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두 상품은 모두 한 개에 1,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밥보다 갈비를 더 좋아하지만 갈비의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폭이 초밥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갈비와 초밥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을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갈비와 초밥의 한계효용

수량(번째)	갈비(한계효용)	초밥(한계효용)
1	16	5
2	8	4
3	4	3
4	2	2
5	1	1

이 사람은 예산제약인 5,000원으로 갈비만 5개를 먹을 수도 있고 초밥만 5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갈비 2개, 초밥 3개와 같이 섞어서 5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뷔페식당의 예에서 본 것처럼 갈비를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만 5개를 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갈비를 먹을수록 그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까요?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전체 효용을 계산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는 갈비 3개와 초밥 2개를 먹으면 전체 효용의 크기가 3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갈비와 초밥 소비에 따른 전체 효용

갈비(개)	초밥(개)	전체효용
5	0	31
4	1	35
3	2	37
2	3	36
1	4	30
0	5	15

갈비(한계효용)	초밥(한계효용)	수량(번째)
16	5	1
8	4	2
4		3

그런데 이렇게 각 소비선택이 주는 효용의 크기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서는 효용이 가장 큰 상품묶음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이라는 것입니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란 예산제약에 맞추어 전체 효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각 상품에 마지막으로 지출한 돈의 효용이 같아지도록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는 원리입니다. 만약 각 상품에 대한 마지막 1원의 효용이 서로 다르게 소비하고 있다면 소비선택을 달리하여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서도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묶음에서 3번째 갈비의 한계효용과 2번째 초밥의 한계효용이 모두 4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소비활동은 위의 예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설사 간단하다 하더라도 한계효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가면서 소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뿐 이미 상품을 실제 구입할 때마다 각 상품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을 같게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각 상품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균등하여, 주어진 소득으로 한 상품을 덜 소비하고 다른 상품을 더 소비해도 전체효용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 소비자는 최대의 효용을 얻게 됨

익도 사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행위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가장 무서운 상대는 그 나라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곧 시장경제의 지휘자이자 시장경제 최후의 감시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소비를 할 때의 판단 기준인 효용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칫 개인의 소비선택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한다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자신의 효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여 주는 소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기업윤리가 필요하듯이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생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획적인 소비생활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구매계획을 세운 후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장보기에 앞서 사야 할 품목을 적어 보는 것이 충동구매와 시간의 낭비를 막아 줍니다. 일생주기를 고려하여 장기 생활설계를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우리나라의 소비자 8대 권리

소비자권리는 사회·경제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 알 권리 등을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으며,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1980년에는 세계 각국 소비자 단체들의 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이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안전할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권리 ④ 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⑥ 교육을 받을 권리
- ⑦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자료 :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www.cpb.or.kr)



| 좀 더 알아보기 |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 **과 소비** : 자신의 현재 및 미래 소득수준이나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생활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소비
- **과시소비** : 효용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금전력이나 지위를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하는 소비
- **모방소비** : 꼭 필요하지 않으나 소비자들의 상위향적 욕망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주위 사람 또는 상위계층을 따라 하는 소비
- **충동소비** : 사전 구매계획 없이 구매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매자극을 받아 충동적으로 하는 소비

세워 놓은 다음 가능하면 그 안에서 지출과 저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기에는 지출이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이 늘어나므로 미래 지출에 대비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격과 품질에 근거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대형이나 외제를 선호하기보다는 가격과 품질과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개인의 생활여건과 편리성을 따져 물건을 고르고 가격과 품질, 실용성 등을 고루 살펴보고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합니다. 소비자정보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만족스러운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정보와 소비자단체 등의 상품 테스트 결과와 생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소비활동이 필요합니다. 생산적인 소비는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유흥비 지출과 같은 일회성 소비를 자제하고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는 소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기업은 경제의 ‘엔진’

기업의 힘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생산을 전



문으로 하는 경제주체는 기업입니다. 무슨 일이든 전문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높은 비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은 기업의 이러한 생산증가로 얻어지는 소득증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 즉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지역경제의 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광역시 일부 구의 주민은 대부분 두 회사의 임직원 및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

치단체나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경쟁적으로 공업단지나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이 지역 주민이나 국민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우리 기업은 해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생산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상위를권을 유지하면서 세계로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세계 26위, 국민총소득은 11위이지만 이들 산업의 생산은 세계 5위권 내외를 기록하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크게 높여 주고 있습니다.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기업 1개 늘면 취업자 73명, 산업생산액 77억 원 증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자리 수와 산업생산액이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간한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각 지역에서 기업 1개가 늘어나면 전체 취업자 수는 73명, 생산액은 77억 원, 지역내총생산(GRDP)은 58억 원이 늘어났다.

대한상회의는 IMF 이후 5년간(1998~2002년) 전국 각 지역의 사업체 수와 해당 지역 전체의 산업생산액, 취업자 수, GRDP 통계를 분석했다. GRDP는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수치다.

대한상회의는 지난 5년간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취업자 수, 생산액, GRDP,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 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반면, 사업체 수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과거 5년간 사업체 수 증가율이 10% 이상인 울산, 광주, 인천, 경기의 경우 평균적으로 취업자 수, 생산액, GRDP는 각각 4.3%, 10.5%, 9.1% 증가한 반면 사업체 수 증가율이 5% 이하인 전남, 전북, 부산, 대구의 경우 각각 1.3%, 7.0%, 6.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상위 지역에서 기업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해당 지역 산업생산의 GRDP에 대한 기여도)는 14.8%인 반면, 하위 지역에서는 6.4%에 그쳤다. 한편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기업체 수 증가율이 14.5%로 가장 높은 울산지역이 취업자 수, 생산액, GRDP 증가율이 공통적으로 높았으며 지역경제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24.6%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은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활발한 기업활동"이라며 "기업체 수 증가에 따라 고용, 생산이 확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신설이나 유치가 필수적이며 그 대책으로 기업설립관련 각종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 외국인기업의 적극적 유치 등을 제시했다.

※ 자료 : 이데일리, 2004년 9월 7일

생산활동과 비용

기업의 목적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윤이란 판매수입에서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것이므로 이윤을 크게 한다는 것은 판매수입과 생산비용의 차이가 가장 크게 되는 수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판매수입이 증가하지만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이윤을 늘리는 데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은 새로운 한 단위를 더 생산하여 판매한 수입과 그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많으면 생산을 계속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수입과 생산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실제 지불한 비용뿐만 아니라 직접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포함한 기회비용으로 해



| 좀 더 알아보기 |

과자 생산에 따르는 기회비용

과자공장을 운영하는 '갑'의 과자 생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알아보시다. '갑'이 밀가루, 설탕, 버터 등 원재료 값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하면 이 1,000만 원은 기회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200만 원의 월급을 준다면 이것도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비용은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입니다. 그러나 기회비용은 회계비용 외에 암묵적인 비용도 함께 생각하여야 합니다. 만일 '갑'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돈을 기회비용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갑'이 과자공장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저축금액 2억 원을 사용했다면, 이 2억 원을 그대로 저축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도 과자 생산의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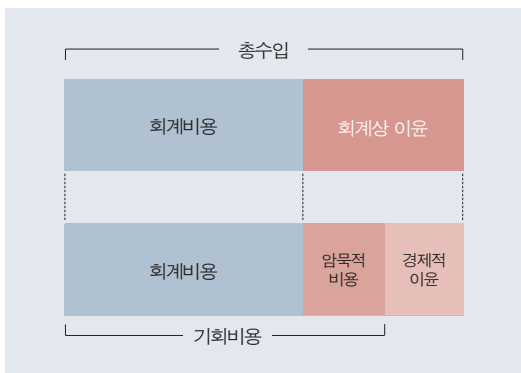
야 합니다. 기업의 회계장부에는 인건비, 물건비, 임대료, 지급이자 등 실제로 경비가 지출된 것만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비용만을 생산비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실제 지출된 비용을 회계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지출한 회계비용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비용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만 비로소 진정한 비용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과정의 기회비용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를 고려하여 기회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암묵적 비용**이라 부르는데, 기업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와 비슷하게 기업이 얻는 이윤도 회계상 이윤과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이윤은 총수입에서 회계비용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빼서 구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윤은 회계상 이윤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적 이윤과 회계상 이윤의 차이는 이윤을 계산할 때 암묵적 비용까지도 고려했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경제적 이윤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나머지를 뜻하며 암
묵적 비용 만큼의 차이
가 있음

그림 4-1 회계상 이윤과 경제적 이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얼핏 생각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단가가 높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들은 오히려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이 산업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생산기술 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질 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물당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생산규모가 커지면서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가능한 데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핀 만드는 공장의 예를 들어 분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얼마나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루 몇 십 개의 핀을 만들 정도인 작은 생산규모에서는 한 사람이 철사를 만들고 자르고 뾰족하게 만드는 일을 모두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핀 하나의 생산단가가 무척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면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가능해지는 데서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학에서는 어떤 시설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소위 '0.6규칙'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규칙은 시설용량을 k 배로 증가시키려고 할 때 이에 드는 비용은 $k^{0.6}$ 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의 생산능력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원래 비용의 두 배가 아니라 $2^{0.6}$ 배, 즉 1.52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생산능력이 세 배가 되려면 비용이 1.93배, 네 배로 되려면 2.30배라는 식으로 변해 갑니다. 이는 수돗물 1톤당의 생산단가가 점차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것임을 뜻합니다.

규모의 경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산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와 트럭을 각각 하나씩의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이 두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비용



범위의 경제
 생산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기업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 상의 이점이 생길 때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어떤 기업이 승용차 5천 대를 생산하는 데 500억 원의 비용이 들고, 다른 기업이 트럭 2천 대를 생산하는 데 300억 원이 든다고 합시다. 만약 이 중 어느 한 기업이 승용차 5천 대와 트럭 2천 대를 동시에 생산할 경우 800억 원보다 더 적은 비용, 예컨대 7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면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위의 경제는 상품의 성격이 유사한 결합생산물의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구두와 핸드백, 쇠고기와 소가죽, 닭고기와 달걀 등과 같은 상품은 그 성격상 같은 기업에 의해 함께 생산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결합생산물의 예들입니다. 또한 생산시설이나 유통망을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위의 경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가치 있는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가정신과 기업윤리

기업가정신이란 일반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혁신하는 의지와 능력'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로 천연자원, 노동, 자본의 3가지를 꼽고 있

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여 기업가정신을 제4의 생산요소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릅니다. 원료나 종업원, 생산기술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계획하였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에 의해 선택될지 알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활동을 합니다.

기업가정신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기업가정신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새롭게 제공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생산 기술이나 방법을 혁신하는 일입니다.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보다 저렴한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기업가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시장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늘어날 수요가 없는 시장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가운데 하나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생겨난 경제주체입니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는 소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개발시대 주역 도전정신 부활

… 경제 1세대, 드라마 · 소설로 재조명

○○○ TV는 지난 5일부터 고 정주영 회장과 고 이병철 회장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영웅시대'를 방영하고 있다. '영웅시대'는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과 이병철 전 삼성그룹회장이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대기업을 일구어온 과정을 그린 기업 드라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방송과 문화계에서 경제개발의 주역 1세대이면서 창업주들인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고 이병철 삼성 회장 등을 재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종된 기업경영 의지를 되찾기 위해 불굴의 기업정신으로 대그룹을 일군 이들의 기업가정신을 배우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자료 : 파이낸셜뉴스, 2004년 7월 9일



득을 창출시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자신은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자에게 봉급을 제때에 지급 함은 물론 국가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 하는 것으로도 사회적 책무를 충분히 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업윤리가 강조되는 것일까요? 기업 들이 대형화되면서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 되고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

한 점을 인식하여 많은 기업들은 '정도경영' 이나 '열린경영'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경영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을|거|리|

윤리경영 도입 기업, 큰 폭으로 증가

전경련 기업윤리 정기실태조사 결과

전경련이 최근 상장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리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자 지정, 내부고발제도 도입, 윤리경영 교육실시 등 기업윤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천해가고 있어 도입초기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윤리 경영 수준이 실천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이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500대 기업 중 309개(61.8%) 기업이 조사에 응해 이중 185개(59.9%)의 기업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30대 기업의 경우 91개 사가 조사에 응해 이중 79개 기업, 86.8%가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해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기업(98.7%)이 매우 필요하거나(68.0%), 어느 정도 필요하다(30.7%)고 응답했으며, 필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원수(62.7%)에 이어 수익성 및 생존전략(36.0%)이라고 응답해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영전략의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전경련 보도자료, 2003년 12월 1일

경제주체 이해하기

다섯째 마당

5

시장과 정부

- 1.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
정부의 수입과 지출
- 2.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가?
시장의 한계
시장실패의 원인
- 3.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나?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실패
- 4. 조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의 행위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다섯째 마당 _ 시장과 정부



1.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생산·공급되어져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이지만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과 관련된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의 공공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총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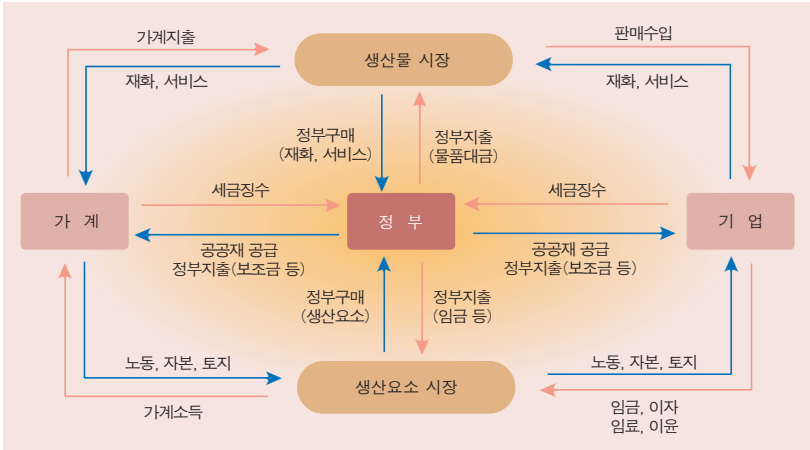
정부는 공공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가계와 기업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고용하고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그리고 거대한 고용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과거 주로 국방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공기업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국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지출 행위를 통틀어 **재정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재정활동
정부가 나라의 살림을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수입·지출 행위

그림 5-1 정부의 경제활동



정부의 수입과 지출

정부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통해 마련합니다. **조세수입**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인데 정부의 수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우 조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80%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얻거나 소비할 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기업은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예금자는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상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세외수입**은 조세 이외의 수입으로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을 팔거나 빌려주었을 때 얻는

재정경제부
www.mofe.go.kr



수입과 수수료, 입장료, 과태료, 벌금 등의 수입을 말합니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민간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이 돈을 씁니다. 정부가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도 이 돈으로 지급합니다. 또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조금 등으로 가계나 기업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한 지출을 통틀어 경상지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을 사기도 하는데 이때 드는 돈이 자본지출에 해당합니다.

표 5-1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100억 원, %)

구 분	1995		2003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I. 경 상 수 입	7,086.3	98.3	16,850.3	99.2
• 조 세 수 입	6,221.0	86.3	13,536.7	79.7
(소득세)	1,361.8	18.9	2,078.7	12.2
(법인세)	869.1	12.1	2,563.3	15.1
(부가가치세)	1,463.7	20.3	3,344.7	19.7
(특별소비세)	261.7	3.6	473.3	2.8
(관 세)	463.3	6.4	684.7	4.0
• 세 외 수 입	865.3	12.0	3,313.6	19.5
II. 자 본 수 입	122.5	1.7	139.4	0.8
재정수입 합계(I + II)	7,208.7	100.0	16,989.7	100.0
I. 경 상 지 출	4,986.4	70.2	13,290.0	84.8
• 재화와 서비스 구입	1,746.9	24.6	2,981.2	19.0
• 이자 지급	215.6	3.0	659.4	4.2
• 보조금 및 경상이전	3,023.9	42.6	9,649.4	61.5
II. 자 본 지 출	1,245.5	17.5	2,661.4	17.0
III. 순 용 자	873.2	12.3	-270.3	-1.7
재정지출 합계(I + II + III)	7,105.2	100.0	15,68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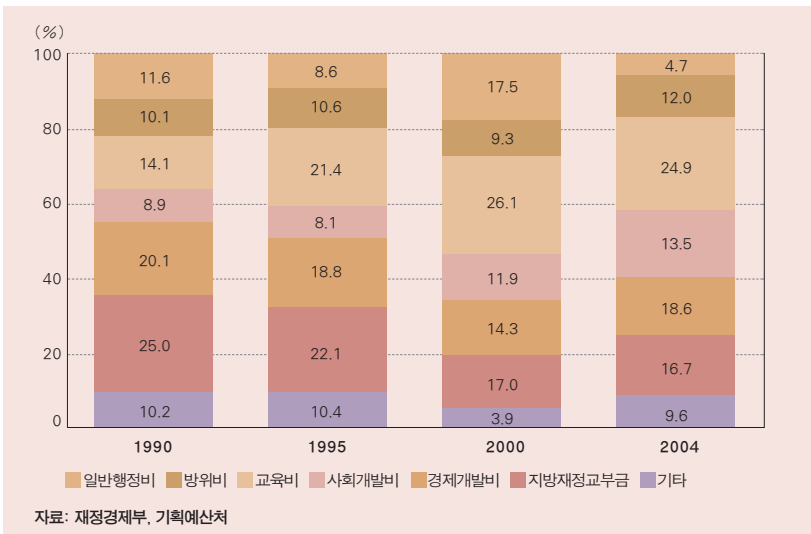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2004

재정지출의 규모와 내용은 시대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영역이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물론 사회복지 확충, 환경 보호, 과학기술 지원 등으로 더욱 넓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개발비로, 이는 산업의 지원과 육성, 과학기술 지원, 도로·항만·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이나 사회보장시설의 확충, 문화·관광 개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회개발비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5-2 중앙정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구조



2.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가?

시장의 한계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보면 누구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이 매우 무질서해 보이고 번잡스럽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경제활동이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를 받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절되는 질서,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적당히 절충되는 조화가 때로는 신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연출하는 그 무엇인가가 시장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아담 스미스(A. Smith)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시장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가격기구를 뜻합니다.

시장실패

시장여건의 불완전성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그러나 시장여건의 불완전성이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 같은 경우를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

시장실패가 왜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불완전한 경쟁 상태에 있게 되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독과점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하기 쉽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 기업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적은 공급량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시장을 몇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보다

시장지배력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담합**을 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할 때에 비해 상품의 가격은 높아지는 반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불량품으로 소비자를 속인다거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독과점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도 시장실패를 야기합니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외부효과에는 해로운

담합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의 경쟁을 피하고 각각의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합의해서 정하는 행위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가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할 때 다른 경제주체에게 손해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함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재화의 유형

재화와 서비스는 두 가지 기준 - ① 경합성이 있는가? 즉 어떤 사람이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영향을 받는가?
② 배제성이 있는가? 즉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 에 의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옷처럼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를 '사용재'라 합니다. 누군가가 이들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사용재입니다.

사용재와는 달리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순수 공공재'라 합니다. 순수 공공재의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의 경우 어떤 사람이 국가안보로부터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이면 모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재이지만 소비과정에서 경합성 또는 배제성이 나타나는 재화와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에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를 생각해 봅시다. 바닷속 물고기는 배제성이 없습니다. 어부들에게 일일이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큼 다른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듭니다. 즉 바닷속 물고기는 경합성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자연독점'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연독점이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기는 독점으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합니다. 좋은 예로 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평균비용이 줄어듭니다. 전기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전기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비가 영향을 받을 만큼 전기의 양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전기의 소비에는 경합성이 없습니다.

경 합 성	배 제 성	
	없 다	있 다
없 다	순수 공공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치안, 외교 ● 화재경보 ● 한산한 무료도로 	자연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 유선방송 ● 한산한 유료도로
있 다	공유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속 물고기 ● 혼합한 시민공원 ● 혼합한 무료도로 	사 용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크림 ● 옷 ● 혼합한 유료도로

것과 이로운 것이 있습니다. 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불경제**라 부릅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경제**라고 하며 새로운 첨단기술 개발, 꽃길 가꾸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외부불경제 :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



▶ 외부경제 : 잘 조성된 꽃길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로운 외부효과를 가져다주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해로운 외부효과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로운 외부효과는 적정 양보다 적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공공재의 존재 역시 시장실패를 초래합니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먼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사용재(私用財)와 달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인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어렵습니다. 국방, 치안, 외교, 소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은 **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를 일으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란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재의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도 일단 생산되면 사

무임승차자 문제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는 문제

람들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을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어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3.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나?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첫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합니다.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과 같은 공동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상호간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구를 두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와 같은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오염물질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외부경제 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맡길 경우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한 생산이 어려운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하여 생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서 물가안정, 고용증대 등 경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정부개입의 근거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지위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9조 제1항).”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사유재산제도를 보장(제23조 제1항)하고 국방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6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자유시장경제의 폐해를 제거하고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가운데 다른 하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가 바람직하다면 시장경제는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 의해 분배되도록 놓아둘 경우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소득 불균형이 커질 수 있으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은 자기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소득 격차의 확대와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실업·질병·사고·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갑작스런 변동은 사회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물론 사회 활력이 낮아지게 되고, 나아가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관련하여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정부의 기능

시장경제에서 시장과 정부의 기능은 상호 보완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기능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시장개입의 목적이 시장실패의 보완과 형평의 개선에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평의 개선을 시장실패의 보완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도 합니다.

	시장실패의 보완			형평의 개선
최 소 기 능	공공재 공급 · 국방 · 사유재산권 보호		· 법과 질서 확립 · 거시경제안정 유지 · 공중보건	빈곤층 보호 · 빈곤 퇴치 · 재난 구호
중 간 기 능	외부효과 개선 · 의무교육 제공 · 환경 보호	독점 규제 · 공익사업 관리 · 반독점정책	불완전 정보 극복 · 보험(의료·생명·연금) · 금융규제 · 소비자보호	사회보험 제공 · 연금을 통한 소득분배 · 빈곤층을 위한 공적부조 · 실업보험
적극적 기 능	민간경제활동 조정 · 시장기능 활성화(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 · 유인 제공			소득 재분배

자료 :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

정부실패

오늘날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마을에 다리를 놓아 달라,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을 지어 달라, 교육 예산을 늘려 달라 등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고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시장개입을 정당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나 지나친 개입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빗대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실패는 왜 발생할까요? 정부는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업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비용을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민간기업처럼 망할 염려가 없으며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제도**(incentive system)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소홀해지고 조직이 방만해지기 쉬워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실패는 상당부분 이러한 정부 부문의 속성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투표표로 선출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이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타협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명되거나 고용된 관리들도 항상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정책이 실체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

유인제도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주체들의 바람직한 행위나 선택을 유도할 목적으로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 등 유무형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선 각종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정부 부문 운영에도 경쟁원리와 적절한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법부와 감사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의한 예산감시 활동도 정부의 실패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예산, 기구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조직을 일컫는 말로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도 함



| 읽 | 을 | 거 | 리 |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선책일까?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실패가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보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과 같은 해로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행위도 사회구성원의 고발정신으로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독과점기업의 횡포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비판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충분한 공공재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무임승차 유혹에서 벗어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때 정부의 개입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 또는 단체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모두의 '쉼터'(공공재)로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에 활용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운동(National Trust)*** 같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실패가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식이 항상 최선은 아닌 것입니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무분한 개발로부터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시민환경운동

4. 조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앞에서 조세는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음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조세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조세는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층간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기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요즘에는 정부의 경제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큰 정부, 다시 말해 정부가 다양한 일을 해줄 것을 바라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조세부담률

오늘날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져 왔습니다. 조세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수입/명목 GDP)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는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 정부가 얼마 정도를 가져다 쓰는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로 스웨덴(35.3%), 영국(29.7%), 프랑스(27.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

한 국 (2004)	OECD평균 (2001)	스웨덴 (2000)	영 국 (2002)	프랑스 (2002)	미 국 (2001)	일 본 (2001)
19.8	27.5	35.3	29.7	27.7	21.8	17.0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3

는 사람들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현재의 세금도 너무 무거운 부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교육 등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아직 많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의 행위

세금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물건을 사도, 예금자를 받아도, 계약서를 작성해도 세금을 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둬들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하지만 국민들은 가능하다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는 크게 절세와 탈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행위의 목적은 같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탈세가 됩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용카드복권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도입,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등을 통해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절세와 탈세 이외에 조세회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미





비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어떤 의미에서 합법적인 탈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세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와 탈세 행위를 막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절세와 탈세의 차이

절세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총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려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상황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 자료 :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효율성과 공정성**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가능한 한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의도하건 하지 않건 조세의 부과는 개인과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유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게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부과한 세금도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조세 부과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가품목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품목을 덜 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한다거나 저축을 줄이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의 부과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각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덜 왜곡시키는 조세제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조세제도에서 효율성만이 유일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세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평성**의 확보일 것입니다. 조세부담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에 비례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편익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편익원칙**에 의할 경우 가난한 사람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부유한 사람은 오히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세자 자신이 받는 혜택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편익원칙

각 납세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



명단공개 고액 체납자, 네티즌 비난 '붓물'



국세청이 10월 22일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101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1월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이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C씨는 “우리 서민은 세금고지서만 나오면 과태료 물지 않으려고 인간힘을 써가며 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면서 “교묘히 세금을 피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을 잘 색출해 거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디어가 ‘불쌍한 직장인’인 시민은 “불쌍한 봉급쟁이들만 원천징수 정확히 해서 세금 징수에 혹시 연말정산 잘못하면 수정신고에 가산세까지...”라고 꾸짖었다.

(중략)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한 동산·부동산 등 모든 재산으로, 인터넷 신고 외에 지방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무고성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 자료 : 연합뉴스, 2004년 11월 2일

능력원칙

납세자 자신이 정부 서비스로부터 받는 혜택과는 관계없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

견해를 **능력원칙** 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능력원칙을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의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의 확립’이라는 말입니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이야기 할 때 자주 문제 삼는 것은 일부 고소득자들의 탈세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스스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소득 크기를 알아내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신용카드 거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데다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묘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평과세의 원칙 확립은 한낱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개선해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과세당국 스스로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걷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면에서 소득세 이외에 다른 대안을 통하여 보다 공평한 조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을 재는 데 재산이 소득보다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마당

6

정보, 환경문제와 경제

- 1. 정보는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생활에서 정보의 역할
역 부근 식당과 기사식당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
- 2.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경제생활과 전략적 상황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지속되는 이유
가격파괴의 허실
- 3. 이젠 환경도 생각할 때
경제발전의 두 얼굴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 왜 불행할까?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여섯째 마당 _ 정보, 환경문제와 경제



1. 정보는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생활에서 정보의 역할

지금까지는 각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를 **탐색행위**라고 합니다. 여러 가게를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 보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 싸게 파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탐색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려면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탐색행위에는 비용 역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탐색

탐색행위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소비자가 좀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위

행위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들일 것인가를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더 탐색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면 탐색을 할 것이고 비용보다 작다면 탐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탐색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는 해당 경제주체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편익의 크기는 우선 상품 구입량이 많을수록 커질 것입니다.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 해도 구입량이 적으면 그로 인한 이득은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탐색행위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이득은 커질 것입니다. 한편 탐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므로 탐색하는 사람의 임금이 높을수록 탐색비용은 커집니다. 시간당 임금이 높은 대기업 사장과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이 똑같은 시간을 탐색하더라도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클|거|리|

꽃 선물 저렴하게 하는 요령

‘성년의 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장미꽃이다. 요즘은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일단 꽃은 기본. 그런데 꽃값이 장난이 아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꽃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사실 꽃 값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다. 꽃의 신선도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장미 한 송이의 경우 평상시는 1,000~1,500원 선이고 성년의 날 당일엔 2~3배 정도 값이 뛰어나고 보면 된다. 하지만 바구니나 포장, 배송 등에 따르는 인건비만 줄여도 최소 2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동 화훼공판장이나 ○○꽃 도매상가, ○○화훼센터 등에 가서 발품을 조금 팔다 보면 싱싱한 생화를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재래시장의 특성상 주인과 흥정하기에 따라 값을 깎을 수 있는 재미가 있고 포장이나 바구니 등을 직접 골라 자신의 정성이 듬뿍 담긴 꽃을 선물할 수 있다.

간편한 게 좋다면 인터넷을 통해 주문과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 대체로 성년의 날 당일 기준으로 20송이 한 단에 5만~8만 원선. 일반 꽃집보다 1~2만 원 정도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큰 수고 들이지 않으면서 깔끔하고 보기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가에 있는 꽃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최근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종류는 보라계열의 투툰칼라 장미 ‘쿨 워터’ 송이당 가격이 2,700~3,500원 선으로 보통 장미보다 훨씬 비싸지만 심플하게 한 송이만 선물할 때 좋다. 하지만 노란 장미는 절대 금물이다. 노란 장미의 꽃말이 ‘이별’이기 때문이다.

※ 자료 : 쇼핑인포넷

역 부근 식당과 기사식당

여행을 다니다 보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음식점들 중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는 여행객은 역이나 터미널 근처보다는 시내에 들어가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역 바로 앞의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맛있는 음식점을 찾기 위한 탐색행위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기차 혹은 버스를 놓치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식당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예 단념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음식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 올까말까 한 지역에서 그런 음식점을 찾아봤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보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여행객들은 좋은 음식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행위를 벌일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음식을 만들어내도 찾는 손님이 있게 마련이라서 음식점 주인들은 구태여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기사식당은 값에 비해 질이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식당에 가보면 기사 아닌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식당의 음식 맛이 좋은 이유 역시 탐색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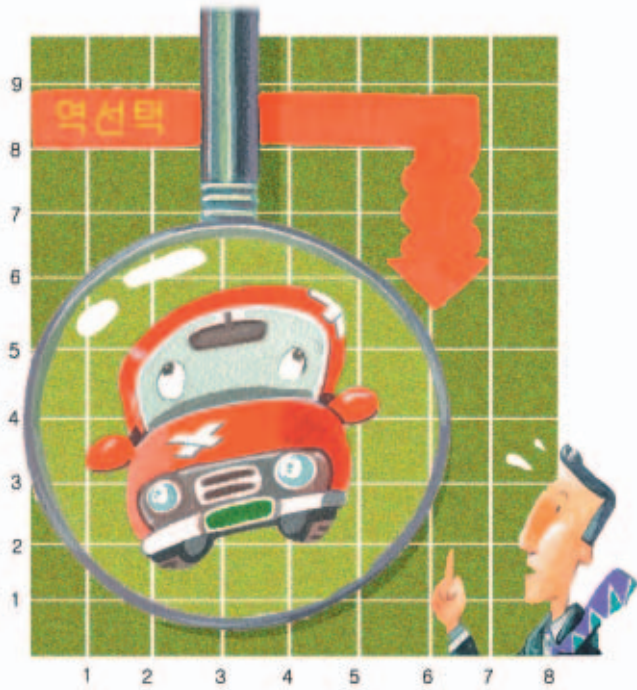
기사들은 기동성이 좋고 어차피 승객을 태우고 거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탐색행위의 성과로 좋은 곳을 발견하면 쓸모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알아두고 있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작은 반면 이로 인한 혜택은 크기 때문에 기사들은 열심히 탐색행위를 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기사식당들이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

중고차시장에 나온 차들은 사고경력이 있거나 고장이 잦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이 맞기도 합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차를 사려는 사람이 겉모양만 보고는 그 차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 좋은 차인지, 아니면 겉만 멀쩡하고 속으로는 골병 든 차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고차를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그 차의 품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고차시장에는 상품의 유형에 대해 두 거래당사자 중 한쪽에만 정확한 정보가 있고 다른 쪽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고차시장에서는 겉과 속이 모두 좋은 차들도 있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형편없는 차들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모두 좋은 차를 '참살구', 그리고 겉만 좋고 속은 형편없는 차를 '개살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차를 사는 사람이 참살구인지 개살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당연히 참살구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살구에 대해서는 300만 원, 참살구인 경우에는 500만 원



까지 낼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본인의 차가 참살구인지 개살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참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최소한 450만 원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250만 원만 받을 수 있으면 기꺼이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고차시장에서 정보가 완전하여 두 가지 유형의 차가 확연하게 구별된다면 중고차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참살구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

이에서, 개살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차를 사러 나온 사람은 두 유형의 차가 섞여 있다는 사실만 알 뿐 겉모습만 보고 그 차가 어느 쪽인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어떤 차를 놓고 흥정을 벌일 때, 확률이 반반이라는 생각에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의 평균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살구인 차를 내놓은 사람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차를 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주저 없이 그 차를 넘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 참살구는 중고차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개살구만 득실거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시장에서 산 차가 알고 보니 형편없는 것이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양만으로는 상품의 내용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개살구가 판치는 시장을 **개살구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개살구시장에서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거래상대

개살구시장

거래 상품에 대한 유형을 거개 당사자중 한 쪽만 알고 있어 겉보기에 그럴듯한 상품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

는 참살구를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인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큼니다. 중고차시장뿐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이면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개살구시장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리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여 역선택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참살구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팔아봤자 손해가 나기 때문에 판매를 포기할 것이고 사고자 했던 사람들은 혹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은 물건을 잘못 살까봐 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시장을 통한 거래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역선택 현상으로 인한 거래 위축은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우선 정보를 가진 쪽에서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중고차가 참살구라는 일종의 신호를 정보가 없는 쪽을 향해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있는 쪽에서 '내가 판매한 중고차가 향후 몇 달 안에 고장이 날 경우 무상수리를 한다.'는 보증서를 발행할 경우 이것은 물건의 품질이 좋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품질이 좋지 않으면서 보증서를 남발할 경우에는 몇 달 동안에 수리비가 많이 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없는 쪽에서는 이러한 보증서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 강제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참살구인 건강한 사람과 개살구인 허약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회사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의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은 보험 가입을 꺼릴 것이고 허약한 사람만 가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회사의 의료비 지급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더 이상 건강보험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이라는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의 가입을 의무화 한다면 건강한 사람이 허약한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강제행위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유지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 읽 | 을 | 거 | 리 |

자연산 납치는 다 어디로 갔을까?

최근 양식기술의 발전으로 납치의 양식이 보편화되어 싼 값에 납치를 즐기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그 맛이나 영양가는 자연산 납치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한동안 자연산 납치는 양식 납치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자연산 납치를 찾아보기 어렵고, 심지어 바닷가 횡집에서도 자연산 납치는 없다고 한다. 자연산 납치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양식 납치가격의 두 배에 거래되는 자연산 납치,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양식 납치와 자연산 납치를 구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이 조성됨으로써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양식 납치를 자연산 납치로 속여 팔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변창함에 따라 이러한 눈속임은 곧 수산시장의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상인들이 주장하는 명목상의 자연산 납치와 양식 납치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주고 가짜일지도 모르는 자연산 납치를 사느니보다 오히려 좋은 양식 납치를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명목상 자연산 납치의 가격과 양식 납치의 유통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중에서는 점차 진짜 자연산 납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진짜 자연산 납치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싶어 할 터이고 일부 소비자는 진짜임만 확인하면 품질에 대해 비싼 값을 지불할 용의도 있을 것이다.

(이하 생략)

✦ 자료 : 강태진 외, '미시적 경제분석'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

상품의 유형과 달리 거래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영자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이 많이 날수록 좋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윤이 많이 나면 배당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자는 이윤이 많이 나는 것보다 매출액이 커지는 쪽을 더욱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명성이나 위신 같은 것이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자가 이윤보다 매출액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주와 소작인, 사장과 근로자, 용역의뢰인과 용역회사 사이 등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공통적인 점은 자신이 직접 하기 힘든 일을 남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것이 맺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작인에게 경작을 부탁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주처럼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본인, 그리고 소작인처럼 부탁을 받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대리계약이 맺어짐에 따라 이 둘 사이에는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이윤이 아닌 매출액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소작인이 별 성의 없이 농사일을 하는 것, 용역회사가 적당히 일하고 대가를 챙기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해 스스로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행동



도덕적 해이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
하는 현상

을 할 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계약을 맺을 때 그 속에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적절한 장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리인의 노력이 스스로의 보수와 직결되도록 만들면 도덕적 해이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주가 땅을 대신 경작해 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를 봅시다. 만약 수확한 것을 모두 땅주인이 갖고 경작한 사람에게는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경작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고정된 월급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확한 것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확이 많아지면 경작자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보수지급의 방법에는 이와 같은 논리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매장의 종업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판매한 금액에 비례

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고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비슷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문경영인에게 보수의 일부로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스톡옵션을 주는 것 또한 경영자 스스로 주식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만듭니다.

2.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경제생활과 전략적 상황

전략적 상황이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상대방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택의 대안이 여러 가지 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짝 짓느냐에 따라 수없이 많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략적 상황에 있는 경제주체는 가능한 결과들을 모두 고려하고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가격을 낮추려 할 때는 경쟁기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 미리 예측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쟁기업이 예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쪽에서도 함께 가격을 낮춘다면 아무 이득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기업이 더 큰 폭으로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연히 벌집만 건드린 상황이 됩니다. 상대 기업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하고 그래도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SW시장 ‘가격인하 전쟁 중’

중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갑작스레 가격인하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정가 1만 위안(150만 원)짜리 제품이 원래 가격의 5%에 불과한 500위안(7만 5,000원)에 판매되는가 하면 인터넷 판은 10위안(1,500원)에 까지 서비스되는 등 가격을 둘러싼 업체들의 이진투구가 격렬하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업체들의 공멸 가능성도 없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인하 전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백신 업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장민(江民). 바이러스 백신 시리즈 ‘KV장민’을 겨우 5%의 가격에 고객들에게 내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업체들도 이에 신경을 써야 할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경쟁업체 역시 야심작인 백신 ‘두바(獨霸)’ 인터넷 판을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등 행여 뒤질세라 경쟁 국면으로 동반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경쟁업체들 역시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가격인하 경쟁이 가져올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가격 경쟁이 진정될 기미는 별로 없어 보인다.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 중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자료 : 디지털타임스, 2003년 3월 12일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지속되는 이유

용의자의 딜레마

두 사람이 각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게임이론은 뉴스나 신문 기사에도 가끔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전략적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이 게임에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못 흥미를 자아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여러 경제문제가 이 게임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그 분석결과의 활용범위가 무척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으리라고 생각되는 두 용의자가 검거되어 검사의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심문하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아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따로 떼어놓아 독방에 가둔 다음 한 사람씩 불러 심문을 진행시킵니다. 심문할 때 검사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각 용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고, 여차피 진상은 밝혀질 테니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거요. 당신 친구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당신은 범행을 부인하고 끝내 버틴다면 당신에게 법정 최고형

인 15년을 구형하겠소. 그 대신 당신의 친구는 수사에 협조한 공을 인정해 방면해 주려고 하오. 반면에 당신의 친구가 범행을 부인하고 버티는데 당신이 자백한다면 그는 1년형, 당신은 방면이오. 당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둘 다 자백한다면 법정 최저형인 5년을 구형하게 될 것이오. 만약 두 사람 모두 부인하고 버틴다면 이번 일로 벌을 줄 수 없겠지만, 얼마 전에 당신들이 저지른 게 분명한 범죄를 다시 수사해 1년형을 받도록 만들겠소.” 이와 같은 검사의 제의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6-1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용의자 김씨	
		혐의 부인	혐의 자백
용의자 박씨	혐의 부인	(둘다 1년형)	(박씨: 15년형, 김씨: 방면)
	혐의 자백	(박씨: 방면, 김씨: 15년형)	(둘다 5년형)

우리가 김씨의 입장이 되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그의 머리 속에는 “우리 둘 다 범행을 부인하고 버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박씨도 같은 생각일 테니 한번 버텨볼까?”라는 생각이 얼핏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박씨가 자기만 살자고 자백을 해버린다면 자신은 15년형을 받는 끔찍한 처지가 됩니다. 아예 자백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둘 다 자백하면 5년형을 받을 테니, 둘 다 부인함으로써 1년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김씨와 박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각자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박씨가 자백했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김씨의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박씨가 자백했는데 김씨가 부인하고 버틴다면 15년형을 받게 되므로 함께 자백해 5년형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박씨가 자백했다면 김씨에게도 자백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이번에는 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버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역시 김씨로 보아서 자백하는 쪽이

더욱 유리합니다. 부인하면 1년형을 받게 되는데 자백하면 방면되는 행운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박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건 간에 김씨로 보아서는 언제나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씨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역시 자백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김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박씨로 보아서는 자백하는 쪽이 더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이 카르텔에 속해 있는 기업은 카르텔협정을 준수하는 전략과 위반하는 전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협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혼자만 몰래 가격을 낮추어 손님을 끌려는 행동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카르텔을 둘러싼 상황이 바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협정을 준수하는데 자신만 위반하면 이윤이 매우 커지고 상대방의 이윤은 아주 작아진다고거나, 모두 위반할 때에 비해 모두 준수할 때의 이윤이 더 크다는 점 등에서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A社와 B社)이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시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괄호 안의 숫자들은 각 기업의 이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카르텔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이 모두 유리한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머지않아 카르텔 자체가 와해될 것입니다. 이처럼 ‘용의자 딜레마’ 라는 게임의 틀을 빌어 카르텔이 지속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 6-2 협정을 둘러싼 게임

		B社	
		협정 준수	협정 위반
A社	협정 준수	(둘 다 8)	(A社:1, B社:10)
	협정 위반	(A社:10, B社:1)	(둘 다 4)

(억 원)



공정위 조사 “이젠 게임이론”

“먼저 배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2004년 9월 중순 A 배터리 본사 사무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를 포함, 4개 배터리 제조회사의 담합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미리 입수한 증거로 2003년 한 차례 담합이 있었음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요원이 제안을 했다. “추가 담합을 자백하면 다른



사업자만 처벌하고, A사 잘못은 묻지 않겠다.” 그는 “나머지 회사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다. 가장 먼저 자백해야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사는 게임이론의 하나인 ‘용의자의 딜레마’에 빠졌다. 4개 회사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은 2003년 1건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백하면, 공정위가 밝혀내지 못한 2004년 1월과 4월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A사는 자백을 선택했고,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 18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터리 담합’은 자백으로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가 됐다. 게임이론이 공정위 조사기법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다. 게임이론은 ‘사람은 최선책보다는 경쟁자를 이기는 현실적 선택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이론에 따라 사업자 간의 경쟁관계를 이용하면 ‘배터리 담합’ 처럼 과거에는 밝혀내지 못할 불법도 잡아낼 여지가 많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로 불법 입증자료를 확보해온 전통적인 기법을 버리고, 관련 규정을 게임이론에 맞게 고쳐가고 있다. 담합 제보자 포상금을 최고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것이나, 신문고시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대표 사례이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올 4월 S전자와 L전자의 납품 담합을 내부 제보로 적발했고, 홈페이지에는 ‘우리 회사 담합 자료를 확보했다’며 포상금 규모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게임이론을 역이용하고 있다. ‘시멘트 담합’ 판결은 업계가 게임이론을 내세워 승리한 대표 사례이다. 공정위는 1998년 12월 국내 7개 시멘트 제조업체에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담합 인상했다’며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최근 법원 소송에서 패했다. 공정위는 7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평균 14% 비율로 가격을 올린 것은 담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멘트 회사측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비율의 가격 인상은 게임이론에 따른 자연스런 사례”라고 반박했다. 경쟁업체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게 당연하므로, 가장 큰 업체가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후발업체가 자연스레 반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기업체들은 직원들의 배신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용의자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고 동업자와의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인 정유와 신용카드업계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직과 동업자를 배신케 하는 게임이론에 근거해 불법 담합의 90%를 ‘용의자의 딜레마’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 자료 : 한국일보, 2004년 11월 30일

반복 게임

용의자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여 진행한 후 각 게임의 이득을 더하여 전체게임의 이득으로 삼는 게임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담합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도 반복해서 행해지면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담합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하므로 담합에 속한 기업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닌 일종의 **반복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카르텔협정을 위반해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곧 상대 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 기업이 카르텔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격파괴의 허실

외국 유명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서너 개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내리는 바람에 지난 한 해만도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와중에서 A회사가 주요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어 최후의 승부수를 띄운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한 저희 회사는 어느 경쟁회사보다 더 싼 가격에 여러분을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차를 사신 후 다른 회사가 더 싼 값에 파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회사의 가격이 적혀 있는 광고지를 저희들에게 가져오시면 그 차액의 두 배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 문안을 보면 엄청난 가격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예를 들어 A회사가 이 자동차에 5,000만 원의 가격을 붙였다고 합시다. 이것을 보고 경쟁회사인 B회사가 4,8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인다면 고객들이 모두 그리로 몰릴까요?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B회사를 찾지 않고 A회사에서 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일단 A회사에서 5,0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B회사의 광고지를 보여주고 차액의 두 배인 400만 원을 환불받으면 4,600만 원에 구입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고객들은 A회사로 몰릴 것이고 B회사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쟁회사라 할지라도 5,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표를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A회사는 이 전략을 통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가격을 그대로 따라오게끔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A회사는 이윤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시장 안의 모든 기업들은 똑같은 가격에 수입차를 판매하여 짝짤한 이윤을 얻게 됩니다. 가격파괴의 절정같이 보이던 광고가 사실은 서로 협조하여 잘 해보자는 암묵적 담합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전략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광고를 낸다면 즉각 공정거래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발한 전략을 짜낼 수 있었던 기업가의 아이디어만은 칭찬할 만합니다.

3. 이젠 환경도 생각할 때

경제발전의 두 얼굴

환경문제는 사람들이 문명사회를 이루어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제국에서 물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라는 주제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원의 고갈, 수질과 대기의 오염, 삼림의 훼손 등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혜택을 누리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환경의 훼손이 견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을 자제하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0의 성장' 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산업화를 아직 이루지 못한 국가들, 즉 제3세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이들 국가들에게 '0의 성장' 이란 산업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세계적인 산업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란 역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커멓게 오염된 하천, 유해물질로 가득 찬 대도시 공기 등이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 중상류에

제3세계

세계2차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지속되던 중 유고슬라비아가 미국과 소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면서 생겨난 개념. 최근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과 같이 개발도상국 대열에 끼지 못한, 경제적으로 뒤진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 하천의 오염 (사진 출처 : 환경운동연합) ▶ 남산에서 본 서울 도심의 대기오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설된 댐,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수많은 송전탑, 핵폐기물저장소의 건설과 같은 것들은 에너지시설 확충의 산물들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항상 뒤따르게 마련인 환경문제를 더 이상 못 본 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환경문제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 잘 해결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해로운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사람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하천이나 대기에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시설 확충이나 자원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환경보호라는 말을 귀찮게 여길 것이며, 오히려 개발관련 각종 환경규제를 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오염은 원인과 결과에 있어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약간의 불쾌감만을 주는 정도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염의 정도가 심해진 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하다면 좀더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환경오염의 인과관계 파악을 힘들게 하고, 그 결과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개인의 힘으로 해



공유자원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바닷속 물고기나 깨끗한 물처럼 소비에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

공유자원의 비극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

결하기 어려우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 왜 불행할까?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확보된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물건의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를 하기 위해 물건을 잘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혼잡한 도로,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야생동물이 그 예에 속합니다. 이를 **공유자원** 이라고 하는데, 원하면 누구나 공짜로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유자원을 먼저 소비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환경에 손을 대게 하였으며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최대한 아끼고 보호하려 합니다. 이에 반해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이러한 유인이 없습니다. 공유자원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원칙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이를 어기면 자기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남획되고 공기와 물이 쉽게 오염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이 처한 비극적인 운명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나 강을 개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폐수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쓰레기로 뒤덮이면 이를 치우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고, 강물이 오염되면 식수로 쓰이는 커녕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하는 등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속도로나 강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의 공유 자원이라는 막연한 소유권만 있을 뿐입니다.

환경부
www.me.go.kr

국립공원관리공단
www.npa.or.kr



|업|을|거|리|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존하기

지난 1996년 가을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생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밀렵꾼이 설치한 울무에 걸려 죽어가는 노루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그 후 2000년 11월에는 몸무게가 200kg에 이르는 야생 반달가슴곰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야생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1983년 설악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총을 맞은 채 발견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 나무 위에서 휴식 중인 장군이



▶ 자연적응 훈련 중인 러시아산 반달가슴곰
(사진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2001년 9월에는 민가에서 사육된 장군·반돌·막내·반순, 이렇게 야기 반달가슴곰 4마리가 자연적응 실험을 위해 지리산에 방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등산객에 자주 접근하는 등 야생성을 잃었던 '막내'는 2001년 말 바로 회수되었으며, '반순'은 2002년 6월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장군'과 '반돌'은 지리산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농가의 꿀통을 건드리는 소동을 벌이다가 2004년 5월 이후부터 지리산 인근보호 시설에서 '막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지리산 토종 반달가슴곰은 5마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마저도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대로 가다간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서 영영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2004년 10월 야기 반달가슴곰 6마리를 러시아에서 도입하여 지리산에 방사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6마리씩 2008년까지 러시아산 반달가슴곰을 들여와 지리산에 풀어 놓을 계획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는 경제개발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환경보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까.

정부는 수년 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풀어주고 추적 장치를 달아 야생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동물원에 있을 때 사유재산이지만 산 속에 있을 때는 공유자원이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반달가슴곰은 산 속에서 살 때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속의 반달가슴곰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노리는 밀렵꾼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여기저기 놓인 울무가 언제 그의 발을 조여 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동물원에 있는 반달가슴곰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자원의 비극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정부가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개입하는 방식은 직접규제와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생산공정 채택, 특정 정화장치 사용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운용상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규제는 그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 기준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 간에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크건 작건, 도시지역에 있건 농촌지역에 있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기업이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부담금

직접규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환경정책

가격기구 활용방법

경제주체들에게 부담금 또는 환경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방식의 환경정책

또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오염 유발자가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



습니다.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는 이유는 오염물질을 내버리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매겨진 가격이 '0'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붙여진 가격을 통해 신호를 받습니다.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의 가격이 0이라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만 오염물질을 버리라는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려면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등 여러 가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오염배출권**이라는 것을 발급해 이를 가진 기업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

도도 있습니다. 오염배출권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용되면 이 시장 역시 가격기구에 의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배출권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입니다. 낮은 비용으로도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자신의 오염배출권을 비싸게 팔 것입니다. 반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높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기업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 배출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오염배출권의 거래 허용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어떤 기업이 자신의 배출허용총량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일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읽 | 을 | 거 | 리 |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색 상품 - 오염배출권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밀, 콩, 원유, 석탄 등 갖가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가운데 '오염배출권(pollution permits)'이라는 매우 이색적인 것이 끼어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배출권을 산 사람이나 기업은 아황산가스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가 공급하는 이 배출권의 주요한 수요자는 화력발전을 위해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력회사들이라고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사고판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비할 때 만족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는 오염물질이 상품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상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으레 쌀이나 옷 혹은 자동차 같은 것들을 연상하는데, 오염물질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하면 이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물질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이에 대한 거래를 원하는 이상 상품이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시장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으로 사고파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환경보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몇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오염배출권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것에 비해 한층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자료 : 이준구, '새 열린경제학'

나라경제 이해하기

일곱째 마당

7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 1. 한 나라의 경제성적표, '국민소득'이란?
국민소득 통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하나?
국민소득에서 3면 등가란?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
국민소득 통계는 어떻게 이용되나?
- 2. '1인당 국민소득'이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정확한 잣대인가?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
국민소득 통계의 허실
- 3. 경제성장 나무는 무얼 먹고 자랄까?
경제성장은 어떻게 측정되나?
경제를 키지게 하는 요인은?



일곱째 마당 _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1. 한 나라의 경제성적표, ‘국민소득’이란?

국민소득 통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알아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좋은 주택과 고급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등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판단하려면, 그 나라의 각 경제주체의 소득을 합한 국민소득을 살펴봅니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운송량과 철강 생산량,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개별 경제지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경제의 한 면만을 나타낼 뿐이며 나라 전체의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독일보다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경제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거나, 대만의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보다 경제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민경제의 활동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국민소득이라는 경제지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하나?

어떤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이며 손익이 얼마인지는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성자의 정직성을 담보로 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 경제의 종합적인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국민소득 통계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는 유엔이 각국에 권고한 국제기준인 '1993년판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국민소득은 국민 각 개인별로 얼마의 소득을 버는지 알아낸 다음 이를 모두 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국민소득을 구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므로 실제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생산물의 가치를 더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라는 것입니다.



| 읽 | 을 | 거 | 리 |

왜 미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높게 평가할까?

그린스펀(Alan Greenspan) 연준의장은 1999년 12월 당시 데일리(William M. Daley) 상무장관과 베일리(Martin Bailey) 백악관 경제제문위원회 의장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편제하는 일을 미국 상무부의 20세기 최대 업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 통계는 1930년대 초 경제학자 쿠즈네츠(Simon Kuznets)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쿠즈네츠는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통계가 개발되기 전이었던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은 철도 운송량, 철강 생산량 등과 같은 개별 경제지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전체 경제 상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통계를 사용한 이후에는 이 통계가 종합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쉬워졌습니다.

국내총생산

통상 1년 동안에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

국내총생산이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모두 더한 것'입니다. 국내총생산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몇 구절로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우선 '일정기간 동안'이란 통상 1년을 말합니다. 어떤 한 해의 국내총생산에는 그 해에 새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만이 포함되며 그 이전에 만들어져 존재하는 상품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국내총생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A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A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A국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란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가치, 즉 부가가치를 말합니다. 상품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그 상품을 만드는 데 원재료로 사용된 중간투입물의 가치가 중복 계산됩니다. 따라서 새로 생산한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투입물의 가치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철강, 가죽, 유리 등 원재료 비용을 1,000만 원 들여 2,000만 원짜리 승용차 1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공장의 산출액은 2,000만 원, 중간투입액은 1,000만 원이므로 이 공장에서 새로 생산한 가치는 산출액(2,000만 원)에서 중간투입액(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원재료로 사용된 철강, 가죽, 유리 등도 어떤 원재료를 투입하여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것을 만들 때 새로 생산한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 새로 생산한 가치를 합산하면 결국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와 같게 됩니다. 즉 위의 단순한 예에서 국내총생산은 최종재인 승용차의 가치인 2,000만 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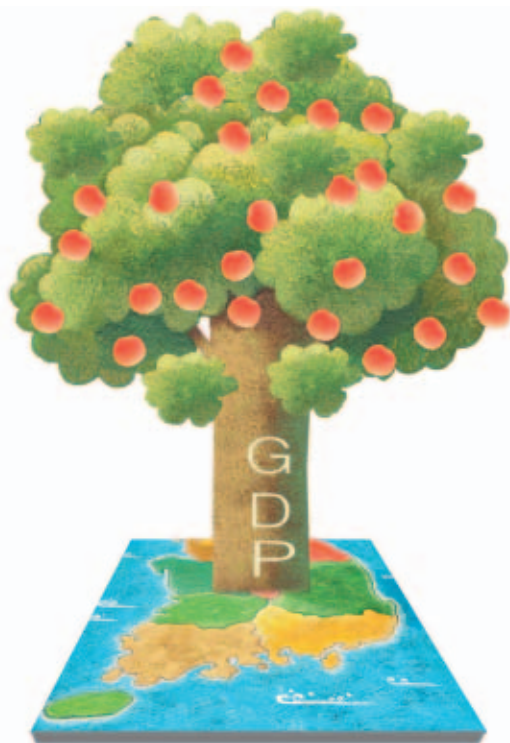
국내총생산과 함께 국민소득의 개념으로 **국민총소득**(GNI: Gross

국민총소득

통상 1년 동안에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한 것

National Income)이라는 것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를 뜻하는 데 비해 국민총소득은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나타낸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국내총생산은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생산의 주체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반면에 국민총소득은 누구의 소득인지, 즉 생산주체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국내와 국민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국가 간에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활발해진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흔히 두 지표는 목적이 다소 다르게 이용됩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개념이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외국에 진출하여 현지인을 고용하는 다국적기업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이 실제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고용과 경기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총소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에서 3면 등가란?

앞에서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의 두 가지 용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용어에서 국내와 국민을 빼면 총생산과 총소득이 남습니다. 이는 생산과 소득이라고 각각 달리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그 소득을 다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등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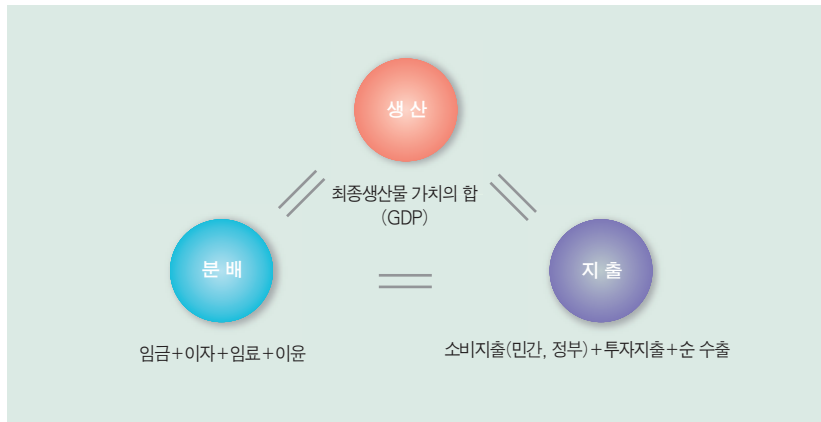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돈과 토지를 빌려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를 총생산, 즉 '생산 국

민소득'이라 합니다. 이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 기업이 벌린 돈에 대한 이자, 토지에 대한 임료 그리고 기업 자신의 몫인 이윤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생산요소 투입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자·임료·이윤을 모두 합하여 '분배 국민소득'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분배된 소득은 물건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조세로 납부되어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축되어 기업이 건물을 짓거나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의 투자행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득은 가계와 정부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등으로 모두 지출되는데 이를 '지출 국민소득'이라 합니다. 이러한 국민소득의 세 가지 얼굴인 생산, 분배, 지출은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等價)의 법칙'이라 합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의 세 가지 얼굴인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갖고(분배), 쓰는(지출) 양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것

이처럼 국민소득 통계는 세 가지 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보통은 생산지표와 소득지표의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총생산과 같은 생산지표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최근 들어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GNI)과 같은 소득지표의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엔 등이 각국의 구매력 수준을 비교하면서 소득지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민소득을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하였던 생산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새로운 소득지표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1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

국민소득은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장가격이 당해연도 가격인지, 특정연도 가격인지에 따라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목국민소득은 생산물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실질국민소득은 가격을 고정시켜 놓았으므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커집니다. 가령 실질국민소득이 전혀 변동하지 않고 물가가 100% 오른 경우라도 명목국민소득은 2배로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을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목국민소득은 전체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 경제구조 등을 알아보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반면 실질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거나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때 주로 이용됩니다.



| 읽 | 을 | 거 | 리 |

지난 4년 동안 농부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나?

농부가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사과를 생산하여 생산량이 2000년 1만 개에서 2004년 1만 2천 개로 늘었고 1개당 가격은 2000년 400원에서 2004년 5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명목소득은 생산량에 당해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서 2000년은 사과 1만 개에 1개당 가격 400원을 곱한 400만 원, 2004년은 사과 1만 2천 개에 1개당 가격 500원을 곱한 6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농부의 명목소득은 지난 4년 동안 50%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실질소득은 생산량에 특정연도(여기서는 2000년)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2000년에는 사과 1만 개에 400원을 곱한 400만 원, 2004년에는 사과 1만 2천 개에 2000년 가격인 400원을 곱한 48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농부의 실질소득은 2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실질소득의 증가가 오로지 생산량의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가격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좀 더 알아보기 |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어떻게 다른가?

유엔의 국민계정체계는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생산지표와 소득지표로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총생산(GDP)이란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품의 가치'입니다. 반면 국내총소득(GDI)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지표는 당해연도 가격으로 평가할 때에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년 가격으로 평가할 때에는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합하여 실질 GDI를 구합니다. 양 지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크기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실질 GDP는 662조 4,744억 원인데 비해 실질 GDI는 644조 6,171억 원입니다. 이처럼 실질지표에 있어서 두 지표가 서로 다른 것은 수출품과 수입품 가격 사이의 상대적 비율, 즉 교역조건에 변화가 오면 그 나라 국민의 실질 구매력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2004년에 반도체를 20만 개 생산해 1개당 10달러에 전량 수출하고 배럴당 40달러의 가격으로 원유 4만 배럴을 수입하였는데, 2005년 들어 반도체 수출가격이 1개당 5달러로 떨어진 반면 원유의 수입가격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렇게 되면 2005년에 반도체 20만 개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원유가 2만 배럴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두 기간 중 국내총생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교역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문에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에 괴리가 크다는 보도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실질 GDP 성장률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 GDI 증가율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통계는 어떻게 이용되나?

우리는 저축률과 투자율, 경제구조와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소득 통계의 부산물인 셈입니다. 이들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경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먼저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한 나라 국민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총소득에다 교포송금 등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을 더하고 무상원조 등의 외국에 지급한 이전소득은 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사용됩니다. 저축은 바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서 투자자금의 원천이 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저축의 비중을 저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70년 18%에서 1980년 24%로 높아져 1988년에는 41%로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 1990년대 부터는 30% 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한 나라 국민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소득

한편 투자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저축은 국내투자를 충당하고도 남은 경우 외국에 빌려주게 되며 반대로 모자라면 투자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해 와야 합니다. 이 때 외국에 빌려준 자금은 우리나라 저축이 외국에 투자되었다는 의미에서 국외투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를 합한 총투자는 총저축과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이들을 각각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을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총투자율, 총저

그림 7-2 저축률과 투자율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올림픽 메달 성적이 경제 지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주요 외신들이 금메달과 경제의 관계를 분석해 봤다. 부자나라일수록,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금메달을 많이 딴다는 결론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2004. 8.30일자)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의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이번 올림픽에서 눈에 띄게 선전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경기가 좋을 때 올림픽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다. 고도 성장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시작해 미국마저 체질 기세였던 1980년대 중반 올림픽(1984년 미 로스앤젤레스) 성적이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 '10년 불황'에 접어든 후 올림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4년 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선 금메달 수가 5개에 그쳤다. 일본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시점에 열린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은 금메달 15개로 대단한 성적을 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올림픽 메달 수가 한나라의 경제력에 비례하며 그런 경향은 갈수록 심해졌다고 전했다.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상위 10대 부국이 전체 메달의 35%를 가져간 데 비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선 그 비율이 42%로 커졌다는 것이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앤드류 버나드(경영학)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메달 수를 좌우하는 최대 요인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올림픽 성적의 60%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아테네에서 미국을 턱밀까지 쫓아온 것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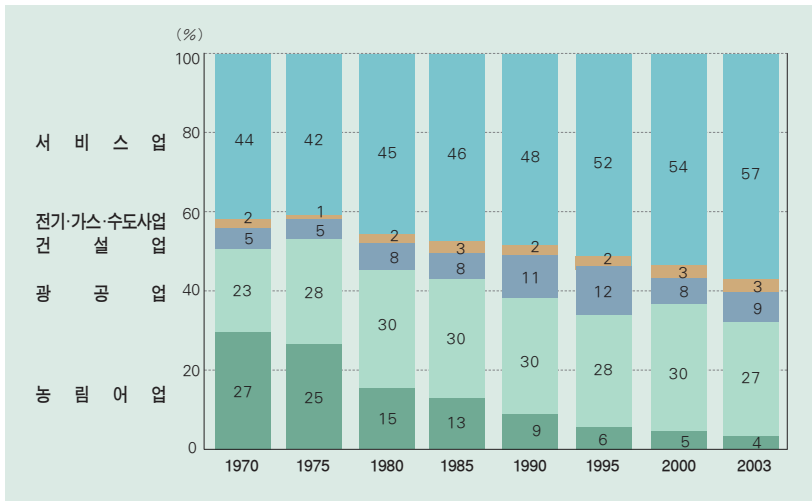
✦ 자료 : 중앙일보, 2004년 8월 31일



축률이라고 하는데 이들 간에는 그림 7-2와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구조란 경제의 각 부문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한 나라 경제활동의 각 부문은 크게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이 1970년의 27%에서 2003년에는 4%로 크게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중 광공업은 23%에서 27%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44%에서 57%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공업화와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경제구조는 GDP비중 외에 고용비중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림 7-3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 추이 (각 산업의 부가가치 / 명목 GDP)



2. ‘1인당 국민소득’ 이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정확한 잣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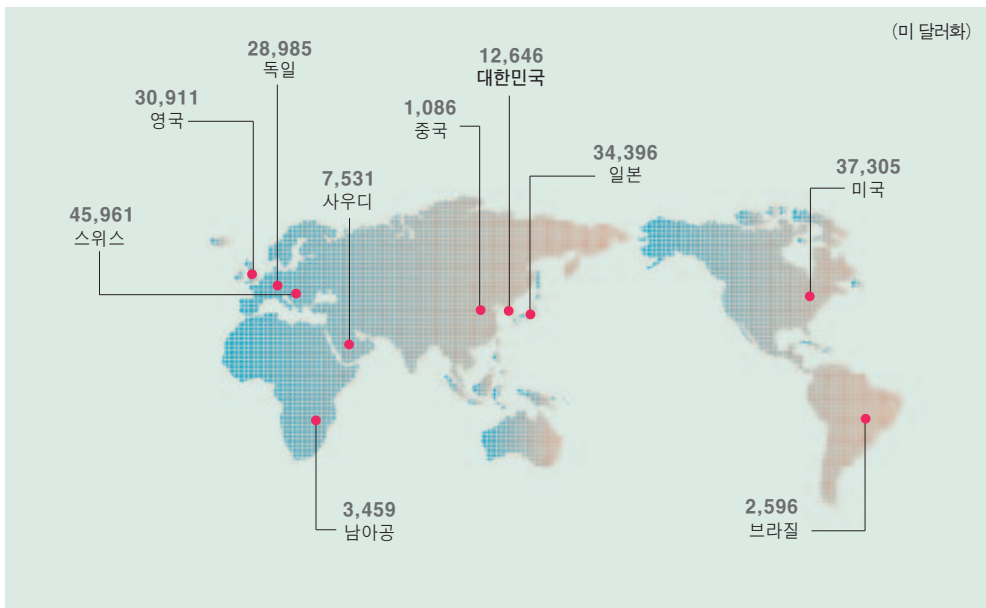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경제규모는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내지 후생수

준을 비교하는 데는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총소득이 같은 규모의 국가라 하더라도 인구수에 따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큰 차이가 있으며, 국민들의 복지 상태는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각국 간 비교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이 발표한 2003년 중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6,061억 달러로 스위스 3,295억 달러의 약 2배이지만 인구는 스위스의 6배이기 때문에 1인당 GNI는 1만 2,646달러로 스위스 4만 5,961달러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960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70년 이후 고도 성장에 힘입어 대폭 늘어나 1995년에 1만 1,432달러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던 1998~1999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만~1만 2,0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7-4 주요국의 1인당 GNI (200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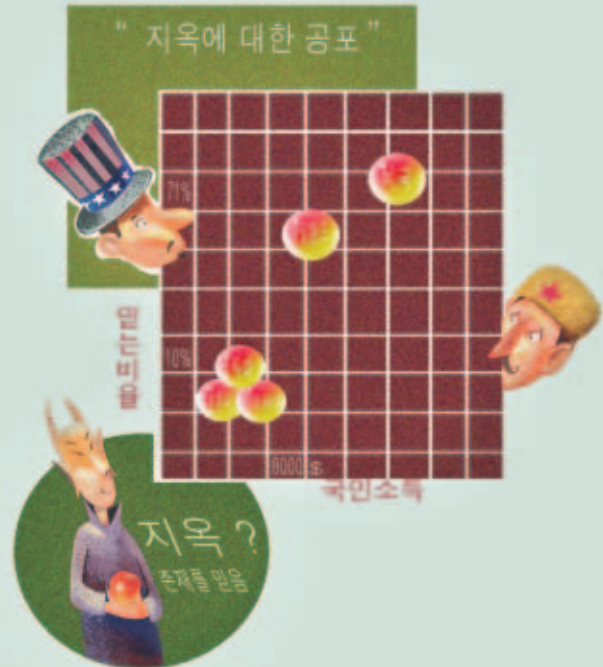
| 읽 | 을 | 거 | 리 |

지옥의 존재를 믿는 국가일수록 부유한 나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2004년 7월 세계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옥의 존재를 믿는 비율과 1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연구한 '지옥에 공포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Fear of hell might fire up the economy)'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1%로 높게 나타난 미국은 2001년 중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4,320달러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미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아일랜드(3만 2,410달러)도 지옥을 믿는 비율이 53%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한편 지옥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한 러시아, 불가리아, 벨로루시, 라트

비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옥의 존재를 믿는 경우 부정부패가 그만큼 줄어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민소득 통계의 허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지수준을 정확히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국민소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만을 계산하고 거래되지 않는 서비스의 가치는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제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국민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요리나 빨래, 육아 등을 하는 경우 국민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라도 음식점이나 세탁소,

비관측경제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 포착하기가 어려워 빠진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와 같은 지하경제 등을 말함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국민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와 같은 지하경제 등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도 당연히 국민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 포착이 어려워 빠지게 됩니다. 또한 국민소득에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여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가는 물질적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지만 여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경우 삶의 질이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경제의 모든 사람들이 휴일도 없이 일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야 늘어나겠지만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복지수준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경제활동과 더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오염물질이 늘어나 환경이 파괴되어 복지수준을 저하시키지만 국민소득에는 이런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촌의 황폐화와 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 혼잡, 공해, 범죄 증가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실제의 복지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소득을 국가 간 비교할 때 적용하는 시장 환율이 한 나라 통화의 대외적인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복지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여가와 비관측경제의 가치를 더하고 환경오염 관련비용을 공제하는 NEW(Net Economic Welfare)가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도 여가와 비관측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기존의 국민소득 통계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기존의 국민소득 통계에서 환경손실분을 공제하는 **녹색(green) GDP**를 편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 GDP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이를 생산하는데 발생한 환경손실분을 제거한 후의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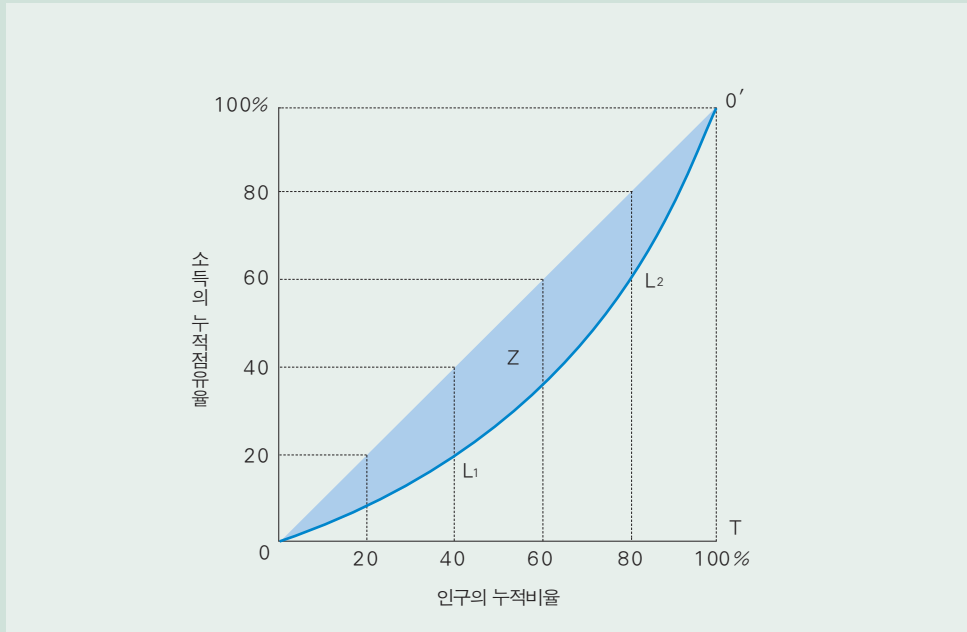


소득분배도 1인당 국민소득처럼 중요

한 나라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1인당 국민소득 못지않게 구성원 간 소득격차에 따라서도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 국민들 사이에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격차의 축소를 통해 삶을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통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를 이용합니다. 로렌츠곡선은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분배 상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로렌츠곡선은 O, L₁, L₂, O'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OO' 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같게 되어 완전균등분배, OTO' 선은 그와 반대로 완전불균등 소득분배가 됩니다.

로렌츠곡선



한편 지니계수($\frac{Z\text{의 면적}}{\triangle OTO' \text{의 면적}}$)는 로렌츠곡선과 소득의 완전 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OO') 사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적은 것을, '1'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큰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기준)는 1990년 0.295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0.320으로 높아져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가 심화되었으나 2003년에는 0.306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니계수 수준은 일본(0.301, 1999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0.448, 2002년), 영국(0.380, 2001년)에 비해서는 낮아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근로자는 월급봉투가 2개?



러시아 근로자들은 대부분 '진짜 월급봉투'와 소득을 줄인 '세금신고용 월급봉투'의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이처럼 탈세가 만연해 있어 1998년 **모라토리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 정부에 세금을 걷으라고 조언했을 정도다.

러시아의 비관측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0~40% 수준에 이른다. 장롱예금이 200~400억 달러, 기업들의 서방은행 예치금액이 수백억 달러로 추정된다. 또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마피아 조직이 국영기업체 1,500여 개, 은행 400여 개, 기업체 수만 개를 지배하여 일부에서는 마피아가 러시아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 자료 : 매일경제, 2004년 1월 7일

* 우리나라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직면했을 때처럼, 한 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일정기간 채무이행을 연기해 주는 것

3. 경제성장 나무는 무얼 먹고 자랄까?

경제성장은 어떻게 측정되나?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어렵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경제에서 두 마리 토끼란 '경제성장' 과 '물가안정' 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경제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국민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후생이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경제내의 각 활동부문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로 흔히 경제성장률을 사용합니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장률에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내에 주어진 노동 자본 등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합니다. 대체로 수년간의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며 실제성장률의 장기 추세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의 경제성장률은 호경기에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불경기에 하회하는 등 잠재성장률의 주위를 맴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한 경제

경제성장률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총수요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의 공공지출, 해외의 순수출(수출-수입)을 합한 것

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는 상태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총수요**(aggregate demand)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잠재성장률보다 실제성장률이 높으면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수요란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총계로서 가계부문의 소비지출, 기업부문의 투자지출, 정부부문의 공공지출, 해외부문의 순수출(수출-수입)을 합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성장 속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잠재성장률은 경제내의 소득이 흐르는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관이 크고 튼튼해야 그 안을 흐르는 소득의 양이 늘어나도 물가상승 압력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을|거|리|

한강의 기적과 70 법칙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7%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도성장 성과에 대해 외국에서는 독일의 '라인강 기적'에 빗대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많이 칭찬하였습니다.

어떤 변수의 값이 2배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아는 방법으로 70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70을 연평균 증가율로 나누어 보면 두 배로 되기까지의 소요연수가 계산됩니다. 우리나라는 1970~2003년간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3.3% 성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10년마다 실질 국내총생산이 2배씩 증가해 온 반면 미국은 2배 증가하는 데 21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한 국가는 경제규모가 커지는 데 그만큼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경제를 커지게 하는 요인은?

경제성장은 나라 전체의 수요와 공급 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실제생산이 잠재생산력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요 증가가 곧바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수요 가운데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 투자 등 국내 수요가 부진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면 총수요 증가가 적어 경제성장은 크지 않게 됩니다. 한편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즉 장기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가 일어남으로써 가능합니다.

생산요소 가운데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노력하여도 생산을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산요소로 노동과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본과 노동의 투입 역시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경제성장에 한계를 보입니다.

장기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기술진보가 있습니다. 전 기나 반도체의 발명처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혁신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거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직관리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넓은 의미의 기술진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진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기술진보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구 증가나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과 달리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선진국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술진보 때문입니다.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노동이나 자본의 양이 늘어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중 어느 요인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전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25년간(1948~1972년) 미국의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의 42%를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고도 성장기였던 25년간(1966~1990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미국의 절반 이하인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요소 투입의 증가에 따라 일어난 것으

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 크루그만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동아시아의 기적이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땀에 의한 결과라고 비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를 거쳐 기술진보가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도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의하면 미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1991년과 2001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험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01년 이후가 더욱 심각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뀐 데다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의 향상으로 노동수요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노동비용이 의료보조, 연금급여 등 간접경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이 수익감소에 대응하여 고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용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총원하는 적시(just-in-time) 고용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인력수요의 국외 외주(global outsourcing)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과잉투자 등으로 구조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미국의 고용증가를 주도하였던 18개 산업 중 전자장비업, 통신서비스업, 기업서비스업, 항공수송업, 주식·상품중개업 등 7개 산업이 2001년 고용감소 산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밖에 IT 혁명에 힘입은 생산성의 향상 역시 기업들이 고용 증대보다 IT 투자를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부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실질GDP 성장률이 3.1%를 기록한 반면 취업자 수가 3만 명 감소한 것을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덟째 마당

8

물가와 인플레이션

- 1. 물가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나?
경제생활과 물가
물가지수에는 어떤 것이 있나?
물가지수는 어떻게 활용되나?
- 2. 왜 물가는 안정되어야 하나?
물가는 왜 오르나?
인플레이션, 왜 막아야 하나?
- 3. 왜 장바구니물가가 지수물가와 다르게 느껴질까?
주관적 · 심리적 요인
물가지수 작성방법상의 한계



여덟째 마당 _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물가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나?

경제생활과 물가

우리는 과일, 야채 등의 가격이 너무 올라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기도 하고 휘발유 값, 지하철 요금, 대학등록금 등이 잇달아 올라 가게에 주름살이 늘었다고 하는 등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물가처럼 모든 경제주체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물가의 움직임은 가게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지불하는 돈의 액수를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품목에는 쌀, 과일, 세탁서비스 등과 같이 수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냉장고나 이사서비스의 경우처럼 가끔 사거나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정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내리는 상품도 있는 등 상품가격은 매우 다양하게 변동합니다. 따라서 개별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서는 전반적인 상품가격의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들을 종합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가격수준을 **물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물가지수(price index)라고 합니다. 보통 기준연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어떤 시점의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보면 물가의 변동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느 해의 물가지수가 105라면 기준연도에 비해 평균적인 물가수준이 5% 상승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상품별로 중요한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평균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하고 있는데, 가중치는 보통 상품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
들을 종합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한
평균적인 가격수준

물가지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흔히 물가지수라 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합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우리의 소비생활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격을 조사한 것입니다. 가계의 생계비 평균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면에서 일반인은 물론 정책당국과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등 기업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출하되어 1차 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다른 물가지수에 비해 조사대상 범위가 넓고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동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가수준을 잘 나타낸다고 할





| 읽 | 을 | 거 | 리 |

물가수준이 높다는 것과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요?

물가수준이 높은 것과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크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아무리 높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물가상승률은 0%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장기불황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매우 낮았지만 물가수준은 전 세계와 비교하여 매우 높았습니다.



수 있습니다. 생산자물가의 보조지표로서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도 작성합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국산품 이외에 수입품을 포함시켜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상품을 원재료·중간재·최종재 등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거래가격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물가의 파급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지수 이외에도 쓰임새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수출입물가지수, 농협중앙회에서 작성하는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등이 있습니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계약 가격의 변동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 지수는 수출입 업체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을 파악하고 대외 교역조건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가격

을 조사한 물가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농가 교역조건의 산출을 통하여 농촌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지표로 이용하는 **근원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 또는 core inflation)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의 변동 중에서 식료품과 에너지처럼 이상기후 석유파동 등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해 가격이 급변동하는 품목들의 물가변동을 제외한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근원인플레이션은 2000년 기준 현재 516개 소비자물가 조사대상품목 중에서 채소류나 과일류 등의 농산물(42개, 단 곡물은 제외)과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7개) 품목들을 제외한 467개 품목들의 가격변동을 집계한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를 말하며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명목과 실질이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목은 물가상승분도 포함된 것이며, 실질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러한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물가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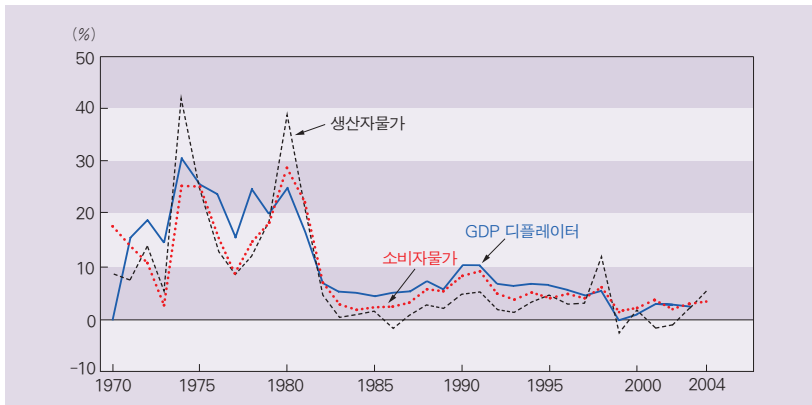
근원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서 식료품이나 에너지처럼 가격이 급변동하는 품목들을 제외한 후 구한 물가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얻은 값에 100을 곱한 것

그림 8-1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물가지수는 어떻게 활용되나?

물가지수가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물가지수는 돈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물가가 오를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줄어들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이전에 비해 돈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른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또한 경기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몸이 아플 경우 처방에 앞서 일반적으로 몸의 온도를 먼저 재봅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체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는 물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린다면 국민경제의 안정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경기지표와 함께 경제안정을 진단하는 체온계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물가지수는 전체 지수 외에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의 경우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지수 등과 같이 상품성질별 분류 지수도 작성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재화의 수급동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상황



| 좀 더 알아보기 |

갑의 연봉이 2000년 4,000만 원에서 2003년 5,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실질소득(구매력)도 이와 같이 높아졌을까요?

갑의 연봉이 2000년 4,000만 원에서 2003년 5,0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3년 동안 금액으로는 1,000만 원, 상승률로는 25% 오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에서 110.7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때 갑의 2003년 연봉 5,000만 원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0년 기준 실질 구매력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즉 2003년 5,000만 원을 두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비율 1.107 (2003년 소비자물가지수 $110.7 \div 2000$ 년 소비자물가지수 100.0)로 나누어 보면 4,516만 7,118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봉은 3년 동안 1,000만 원이나 올랐지만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구매력은 500만 원 조금 넘게 오른 데 불과합니다.

에서 공업제품 지수가 안정적인 데 비해 농축수산물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면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를 보고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2. 왜 물가는 안정되어야 하나?

물가는 왜 오르나?

물건값은 어떻게 결정되며 왜 오를까요? 가격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이 때 팔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내려가는 것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란 앞 장에서 보았듯이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반면 총공급(aggregate supply)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생산·판매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즉 한 나라에 있는 생산요소와 기술수준을 가지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를 말합니다. 총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나 총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물가상승을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총공급 측면에서 원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총수요의 증가는 그 구성요소인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 각 부문의 지출이 늘어날 때 발생합니다. 경제 각 부문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돈의 양, 소득, 인플레이션기대심리 등이 있습

인플레이션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디플레이션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

니다. 먼저 돈의 양이 늘어나면 가계소비나 기업투자 등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만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소득은 가계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통상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준도 높아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 밖에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기대심리 역시 물건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구입 수요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사회 전체의 총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한편 총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생산원가 상승 등이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주로 원자재가격, 환율, 임금, 세금, 이자, 부동산 임차료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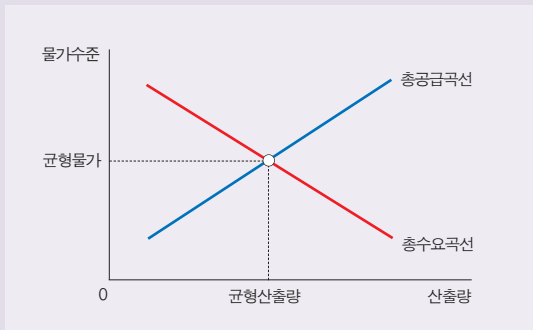


| 읽 | 을 | 거 | 리 |

총수요(곡선)와 총공급(곡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앞의 셋째 마당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본 골격은 나라경제 전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시장이 아니라 나라의 전체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상품을 함께 모아 전체 생산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제 내에는 하나의 '대표상품'만 있으며 이것이 나라 전체의 모든 상품을 대표한다고 가정하여 설명합니다.

아래 그림의 수요곡선은 개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나라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총수요곡선이라 부릅니다. 공급곡선의 경우도 나라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공급을 뜻하기 때문에 총공급곡선이라 부릅니다. 수평축은 나라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양을 뜻하므로 산출량 또는 국내총생산이라 볼 수 있으며 수직축은 전반적인 가격수준, 즉 물가를 대표한다는 뜻이 됩니다.



개별 상품들의 균형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서의 균형도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각각 국민경제의 균형물가와 균형산출량이 되는 것입니다.

※ 자료 : 이준구 외, 『경제학 들어가기』

부족하여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가격과 환율의 상승이 국내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직후 국내 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은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임금도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데 그 정도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 상승하더라도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이 20% 올랐다면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원가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기업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10% 인상되었는데 1인당 생산성이 5% 증가에 그친다면 상품 한 단위당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기업은 생산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이외에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등의 경우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여러 번의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그 가격이 크게 높아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에서는 기업이 가격이나 판매물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시장의 개방과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 등으로 시장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유통단계가 줄어들어 비용이 경감되므로 물가상승이 억제됩니다.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스태그플레이션: 불경기속의 물가상승

1970년대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가격 대폭 인상으로 제1차 석유파동이 초래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불경기(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의 합성어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 의해 유발된다고 합니다. 원유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 등 여러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적절한 대응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읽 | 을 | 거 | 리 |

물가가 연간 6천조 퍼센트 상승한 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인가?



우리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인플레이션 하에서는 1년 후면 물가수준이 100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물가가 심하게 오르는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빵 하나를 사기 위해 손수레에 돈을 싣고 시장에 갔었는데 빵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돈은 그대로 두고 손수레만 훔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100년이 채 넘지 않은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초인플레이션은 유고슬라비아에서 1993년 내전 중에 발생했던 연간 6천조 퍼센트의 물가상승률입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전비조달을 위해 조폐국을 24시간 내내 가동시켜 화폐를 발행하였으며 화폐개혁도 20차례나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헝가리로 1945년 8월에서 1946년 7월의 1년 동안에 물가가 4,200조 퍼센트나 올랐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1920년대 초인플레이션 동안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돈을 땔감으로 사용하고 어린이들이 딱지 대신에 돈 다발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가격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992년 한 해 동안에 소비자물가가 무려 17배 이상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 자료: 싱가포르 통화청 '인플레이션', 오영수 '31가지 테마가 있는 경제여행' 일부 발췌

인플레이션, 왜 막아야 하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예상 여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상할 경우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명목임금을 올려 주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기업은 실질이윤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려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경제의 모든 부문이 일시에 조정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명목임금 등과 같은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월급생활자나 연금수령자들의 생활을 전보다 어려워지게 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물가는 왜 안정되어야 하는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물가가 오르게 되면 봉급이나 연금 생활자와 같이 일정액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계는 급여나 연금이 뒤따라 오를 때까지 소득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올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봉급 생활자들은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전보다 적어지게 되고 씹씹이를 줄이지 않고는 이전만큼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그동안 애써 모은 저축의 실제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나아가 부의 분배를 왜곡시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이 오를 것으

인플레이션의 비용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월급생활자나 연금수령자들의 생활을 전보다 어렵게 하고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며 국제수지도 악화시킴



| 읽 | 을 | 거 | 리 |

인플레이션 조세,

그리고 메뉴비용과 구두창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치안, 국방,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과 같은 국가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금을 화폐공급을 늘려서도 충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여 시중에 풀린 돈을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돈의 양을 늘리면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우리의 지갑 속에 있는 화폐의 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정부문에서 거두는 일반 세금과 달리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완전하게 예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메뉴비용(menu cost)이나 가계의 구두창비용(shoe leather cost)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발생합니다. 메뉴비용이란 가격이 달라지면 기업이 변경된 가격으로 카탈로그 등을 바꾸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사람들은 되도록 현금보유를 줄이고 예금하기 위해 은행을 자주 찾게 됩니다. 구두창비용이란 은행에 발걸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간이나 교통비 등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주 다니면 구두창이 빨리 닳는다는 데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로 기대되는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실물자산을 사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소유한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은 더 불어나는 반면 집 없는 서민이나 봉급 생활자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되어 실물자산 보유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빈부차이가 커지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금융자산 보유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반면 채무자는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됩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대체로 가계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기업과 정부는 빚을 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부를 기업과 정부로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저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어렵게 합니다. 또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도 직접 생산활동에 투자하기보다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부동산

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게 되어 생산능력이 저하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국내 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잘 안됩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외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물가상승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림으로써 경상수지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3. 왜 장바구니물가가 지수물가와 다르게 느껴질까?

우리는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부는 채소나 과일을 사는 시장바구니에서, 직장인은 점심 값과 교통비에서, 학생들은 책과 학용품 값 등에서 주로 물가의 움직임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보다 물가지수 작성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주관적 · 심리적 요인

그렇다면 왜 체감물가가 지수물가와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먼저 집집마다 소비하는 품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대학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나 기술발전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 읽 | 을 | 거 | 리 |

지난 30~40년 동안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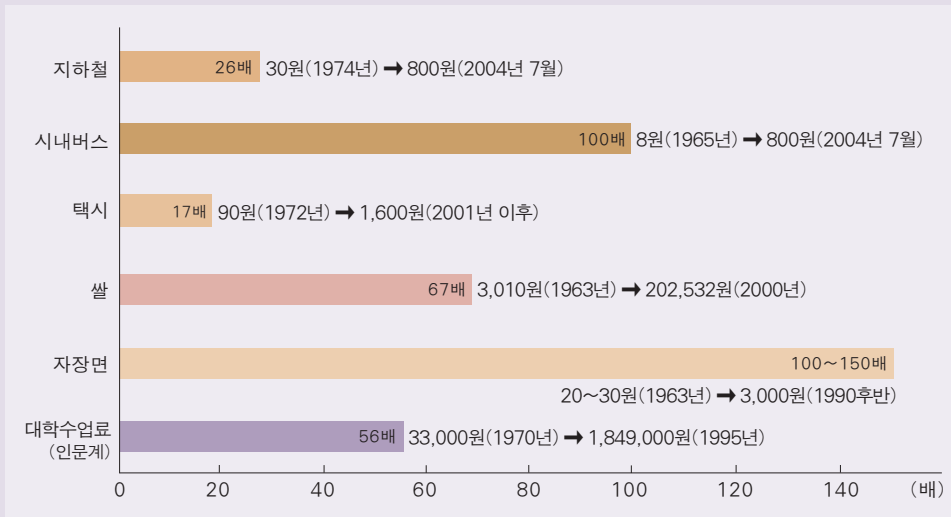
어느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만원으로 1주일 버티기'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1만 원은 지난 30~4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1960년대 중반 기준으로 자장면 330~500 그릇을 먹을 수 있고 시내버스 1,250번을 탈 수 있는 돈이랍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1964년부터 2003년까지 40년 동안 31배 정

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0~40여 년 동안 자장면 가격과 시내버스 요금은 각각 100배 이상 오르고 쌀값과 대학수업료는 60~70배, 택시비와 지하철요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보다 낮은 20~30배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체감물가상승률은 재화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의 가격변화 비교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년 8월

등 가전제품 가격은 하락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변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비의 부담 증가로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 반면 전자제품을 구입한 가게에서는 물가가 내렸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지수물가가 여러 가지 상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나타낸 반면 체감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했던 상품가격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므로 서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지수물가는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고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체감물가는 코끼리의 일부만 만져 보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자녀의 성장 등에 따라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을 물가가 오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가령 소득이 높아져서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대형으로, 차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꾼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때 아파트 관리비, 가전제품 구입비와 전기료, 자동차 보험료, 기름 값 등의 지출이 늘어난 것을 물가상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원비와 식비, 용돈 등 생활비가 늘어난 것을 물가상승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게 오르거나 하락한 품목보다 많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변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물가가 거의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승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물가가 안정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나 증권시세가 급격하게 오른 경우 심리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물가지수 작성방법상의 한계

우리가 알아 본 주관적·심리적 요인 이외에 물가지수 작성방법상의 구조적인 한계에 의해서도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상 물가지수는 5년마다 기준 년을 개편하고 가중치를 조정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의 소비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경우 이를 제때에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웰빙(well-being) 붐으로 가정의 소비지출 중에서 문화오락서비스와 건강관련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식 지수물가에서는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러한 것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감물가와 지수물가 사이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체감물가와 지수물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장바구니물가에 보다 근접한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를 보조지표로 함께 만들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읽 | 을 | 거 | 리 |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어떤 품목을 조사하나?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조사대상품목(2000년 기준)은 두부·라면·돼지고기 등과 같이 월 1회 이상 구입하는 품목, 쌀·닭고기 등 소득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출하면서 분기 1회 이상 구입하는 품목, 한우쇠고기·납입금 등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 기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품목 등 15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선식품지수는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등 생선류와 무, 배추, 파,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 그리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 과실류와 같이 국민들의 실생활 필수품이고 신선도 유지가 가격수준에 직결되며 기상조건 계절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47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라경제 이해하기

아홉째 마당

9

경기변동과 실업

- 1. 경기는 인체에 비유하면 체온과 같다
경기는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활동 상태
경기를 판단하는 잣대는?
경기의 연착륙과 경착륙 - 경기가 비행기라도 되나?
- 2. 실업은 왜 생기나?
완전고용은 실업률 0%를 말할까?
실업률은 어떻게 산출하나?
- 3. 임금 상승은 높을수록 좋을까?
임금은 노동생산성,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아홉째 마당 _ 경기변동과 실업



1. 경기는 인체에 비유하면 체온과 같다

경기는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활동 상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기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보통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거나 수익성이 나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개인들은 소득이 높아지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집의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경기는 각자 처한 여건과 판단기준에 따라 서로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개별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지고 여러 부문과 다양한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기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왜 경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경기 판단

과 예측이 어떤 경제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그 정확성 여부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성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구입 시기를 결정하거나 기업이 수요를 전망하여 이에 적합한 생산과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여건에 알맞은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하여 경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부문 활동과 돈의 양,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금융부문 활동, 그리고 수출입 등 해외부문 활동을 망라하는 여러 가지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는 인체에 비유하면 체온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침체되면 국민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면 경기가 상승하여 정점에 이르게 되고 이후 경제활동이 부진해지면 경기가 하강하여 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변동은 민간기업의 투지지출을 비롯한 수요충격, 통화량 변동과 같은 화폐적 충격, 불완전 정보에 의한 기대,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동 등 경제내의 여러 가지 실물 및 화폐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기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또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합니다. 경기의 순환과정은 보통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상승국면과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하강국면의 2국면으로 나누는데 이를 다시 상승국면은 회복기와 확장기로, 하강국면은 후퇴기와 수축기로 나누어 4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추세를 기준으로 하여 윗부분 즉 경기정점을 전후한 기간을 호경기로, 아랫부분 즉 경기저점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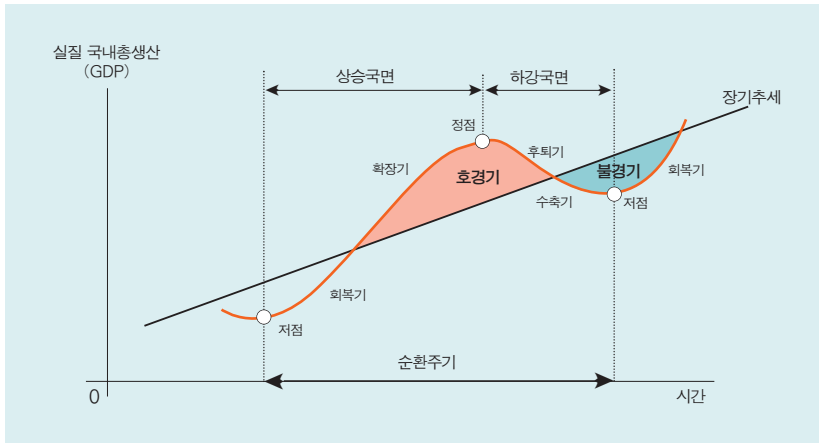
경기변동(경기순환)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순환주기
경기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또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

후한 기간을 불경기 또는 침체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경기순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기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비대칭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에서 가장 긴 주기는 67개월, 가장 짧은 주기는 39개월로서 차이가 컸으며 한 주기 내에서 상승국면의 지속기간은 평균 33개월, 하강국면의 지속기간은 평균 19개월로 차이가 컸습니다. 또한 대체로 경기 상승국면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반면 하강국면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제2차대전 이후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림 9-1 경기의 순환과정



경기를 판단하는 잣대는?

조종사는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행경로를 어떻게 찾을까요? 비행기에는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 과 '인공수평의' 라는 계기판이 있는데 나침반으로는 비행기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인공수평의로는 비행기가 수평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에 있어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진단하거나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방법에는 크게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과 계량모형에 의한 방

경기판단 방법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계량모형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음

법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면, 대표적인 경제지표로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국민소득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통계는 해당 연도나 분기 후 약 2~3개월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신속하게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경기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매월 발표되는 산업생산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수출입통계 등의 개별지표를 이용하여 이들 지표들이 과거 경기순환과정에서 움직여 온 경험적 사실로부터 얻은 규칙성이나 유사성 등을 가지고 경기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지표들은 각 부문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유용하나 전체 경기의 움직임은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문의 경제동향을 잘 반영해 주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종합 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여 경기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경기종합지수와 경기동향지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경기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후행지수를 만들어 경기판단과 예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 경기 국면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환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경우 경기지표의 대응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구성지표나 그 합성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비자나 기업가와 같은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이들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생산 투자 소비계획 등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으로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경기조사(BSI: Business Survey Index)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태도조사(CSI: Consumer Surve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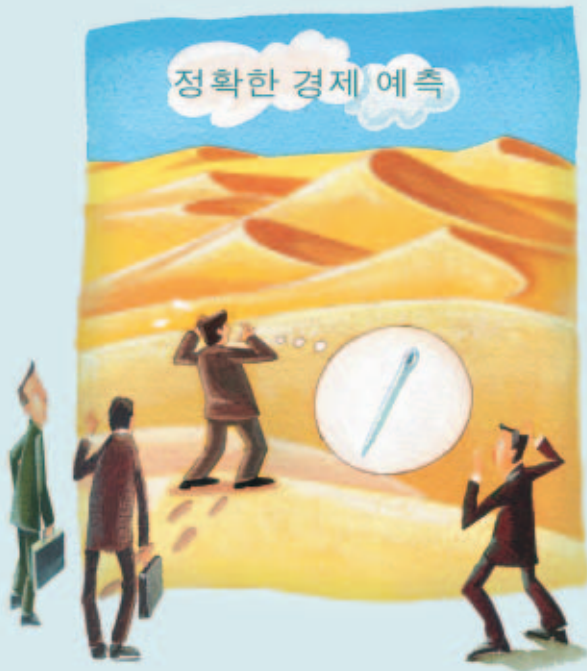
정확한 경제예측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일:

景氣展望 = 景氣占(?)望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앞날을 알아보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가는 등 많은 노력을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예측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지표를 기초로 계량모형을 만든 후 동 모형에 주요국의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환율, 국제유가, 반도체 가격 등 대내외 변수의 전망치를 집어넣어 경제성장률 등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다는 지적을 자주 합니다. 어느 전문가는 이처럼 예측능력을 문제 삼자 '예측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 주역 공부를 할 수 없는 일이고...'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제예측을 할 때 왜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울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 교역신장률, 환율, 국제유가 등에 대한 해외기관의 예측치가 국내 경제예측을 할 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전문예측기관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지표의 전망치를 수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경제예측을 할 때 해외기관의 예측치가 빛나가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기초한 경제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내외건의 변화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 환경 변화, 기상이변, 노사관계 불안 등 사전에 고려하기 어려운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예측치의 오차를 크게 합니다. 다음으로 예측기법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때 활용하는 계량모형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제변수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데 경제구조가 크게 달라질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포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측에는 수많은 전제가 필요한 대규모 거시계량모형을 사용하기 어려워 소수의 외생변수로 된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은 계량모형의 예측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경제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경제예측기관들은 국내의 경제여건과 구조가 급격히 변할 때마다 기초 자료가 되는 해외예측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하거나 그 모형구조를 바꾸어 예측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수예측기관들은 당초 예측치를 자주 수정하고 있으며 보다 정교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비교적 손쉽게 경기변동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응답자의 주관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히 경기상황을 판단하고 경기 전환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를 판단·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변수의 상관관계를 계량모형을 통해 알아내어 경기를 예측하거나 경제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입차를 합한 것이고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함수, 투자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라는 식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정교하고 치밀한 통계기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여건과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변하게 되어 기존모형에 의한 예측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각각의 단점도 있으므로 현실 경제를 분석할 때에는 어느 한 가지 방식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연착륙과 경착륙 - 경기가 비행기라도 되나?

우리는 각종 신문이나 뉴스에서 경기가 '연착륙' 할 것인지 '경착륙' 할 것인지와 같은 말을 수시로 보고 듣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승객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비행기가 활주로에 거칠게 착륙하는 것이 **경착륙**이고, 이와 반대로 **연착륙**은 예상 하강경로를 염두에 두면서 미리 고도와 속도를 적절히 낮추어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고 안전하게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와 같이 경착륙은 경기의 하강속도가 매우 급격한 것을, 연착륙은 경기가 서서히 하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2. 실업은 왜 생기나?

경기의 경착륙과 연착륙
경착륙은 경기의 하강속도가 매우 급격한 것을, 연착륙은 경기가 서서히 하강하는 것을 나타냄



| 읽 | 을 | 거 | 리 |

비공식적으로 경기변동을 판단하는 재미있는 방법들

경기하면 왠지 어렵게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통계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기변동을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상황을 나름대로 손쉽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상황에 따라 거리의 옷 색깔이 달라지는데 경기가 좋을 때에는 밝고 깨끗한 색깔의 옷이 많이 눈에 띄는 반면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어둡고 우중충한 색깔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독특한 현상도 나타나는데 경기나 나빠지면 길거리의 담배꽂초의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위스키나 맥주보다는 소주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경기가 좋을 때에는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나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신경정신과는 더욱 붐비게 되는데 이는 불황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상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뉴욕 타임스(1999년)는 유수한 경제학자들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달리 아주 사소한 일상 현상을 보고 경기 호·불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MIT대 크루그만 교수는 TV광고에서 코믹광고가 많이 등장할 때에는 경기를 호황으로 판단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TV광고에서 상품이름이 15번이나 반복된다고 합니다. 메거릿 백비는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의 커피 농도로 경기를 진단하는데 경기가 나빠질 것을 예상하면 스타벅스가 비용절감을 위해 커피의 농도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메리카 스칸디아 생명보험의 로렌스 커드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집을 고치기 위해 배관기술자나 에어컨 설치기술자를 불렀을 때 얼마나 빨리 응답이 오느냐로 경기의 호황 내지 불황을 판단하는데, 응답이 빠르면 경기 가 하락하는 증거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월스트리트(2000년)는 일반인들이 경기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피부경제지표 12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① 일요일자 신문의 부피: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기업의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 주말판 신문의 두께가 두툼해짐 ② 자동차 광고문구: 호경기에는 호사스러운 문구, 불경기에는 할인판매와 저금리 할부금을 강조 ③ 미 연준의장의 위상: 호경기에는 만인의 위상, 불경기에는 인기저하 ④ 화물열차의 행렬: 차량숫자와 경기가 비례 ⑤ 주택시장: 경기가 좋을 때에는 매물이 즉시 처분되는 경향 ⑥ 달러화의 위력: 호경기에는 달러화 가치 상승 ⑦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둔화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는 역전현상 발생 가능 ⑧ 목수 등 잡역부 수요: 경기가 나쁠 때는 이들을 부르기가 쉬움 ⑨ 범죄율: 경기가 좋아지면 범죄율이 하락 ⑩ 신기술제품 소비: 소비가 늘면 호경기, 줄면 불경기 ⑪ 출산율: 호경기에는 가계사정이 나아져 출산율이 높아짐 ⑫ 주식투자: 경기호황은 증시활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자료 : 이준구 '열린 경제학', 한국경제신문 2000년 6월 27일 수정 발췌

2. 실업은 왜 생기나?

경기가 나빠지면 왜 실업이 증가할까요? 경기 후퇴기에는 기업의 생산물이 잘 안 팔려 재고가 쌓이고 경영자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조업을 단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

법 중 하나는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경기후퇴는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즉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경기후퇴가 장기화된다면 대량 실업으로 이어져 한 나라 경제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경기후퇴가 시작되면 우선 실업을 걱정합니다.

대량실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 등에서 발생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2~3% 수준에서 8%가 넘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취업형태도 크게 바뀌어 종래의 종신고용제가 상당히 줄어들고 단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근로



|임|을|거|리|

경기를 판단할 때 V, U, L, W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나라의 경기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며 회복될까를 설명하면서 자주 V, U, L, W자 등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기순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 모양에 따라 경기회복이 빠르면 V자, 다소 느리면 U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과 같이 장기불황의 경우에는 L자,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바닥을 두 번 친 경우를 W자 또는 더블딥



(double dip)이라 합니다. 또한 장기불황의 유형을 표현할 때 '일본형' 과 '아르헨티나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본형' 이란 1990년대 초반의 주가 지가 등 자산가격버블의 붕괴(1980년대 자산가격이 약 4배 폭등한 후 1990년대에는 동 가격이 1/4로 폭락)에다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세하여 발생한 경우이고, '아르헨티나형' 은 반시장 인기영합주의(populism) 경제정책에 따른 방만한 재정운용과 만성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구조조정의 실패와 정치불안정에 의해 경기침체가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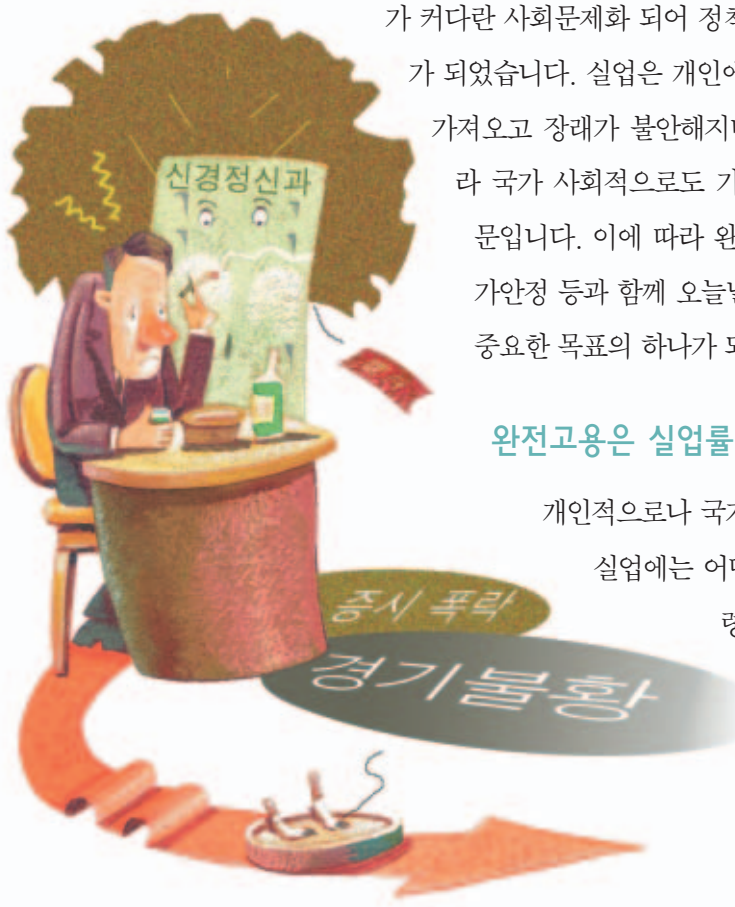
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실업률은 경기회복으로 다시 낮아지기는 했지만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사람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업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왜 많은 나라에서 높은 관심을 가질까요? 농민들이 근대적 산업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았고 또 임금근로자의 성격도 대가족제도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품앗이 정도의 고용수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근로자 계층이 분화되고 임금근로자수가 전체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실업문제는 점차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 때에는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어 정책당국자들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업은 개인에게 물질적 생존기반의 상실을 가져오고 장래가 불안해지며 자존심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가용자원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완전고용의 달성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과 함께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고용은 실업률 0%를 말할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인 실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가령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4%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실업자도



있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시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도 있으며, 기술혁신 등으로 어떤 산업이 사양화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경기순환 과정에서 불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보통 호경기에는 고용이 늘어나고 불경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져 실업이 늘어납니다. 수요가 줄어들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단기 경제안정화정책은 이러한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으레 있기 마련이므로 호경기가 계속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만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찰적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직장탐색과정을 단축시키는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으로 종래의 기술이 아무 쓸모없거나 어떤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은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지난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효자종목이었던 섬유, 신발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그 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일할 곳을 잃은 경우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생기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만일 사양사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이 사양사업에서 해고된 실업자를 모두 흡수할 수 있으면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령 30~40년 동안 가위로 재단하는 데 익숙했던 섬유 기술자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새로운 재단기술을 바로 습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원활하게

완전고용실업률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있을 때의 실업률

추진되도록 인력 재훈련을 지원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든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며, 이때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구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사람들은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전고용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완전고용상태란 한 나라 안의 모든 근로자가 완전히 고용되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실업률 0%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다고 해도 실업률이 0%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산출하나?

이제 실업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인

구를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가능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와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



도대, 외국인 등은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합니다. 이때 경제활동인구가 노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부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상태인지 실업상태인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합니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일요일~토요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급료 없이 1주일당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과, 그 밖에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업자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실업자**라 하면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직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인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를 말하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뉨

통계청

www.nso.go.kr



실업자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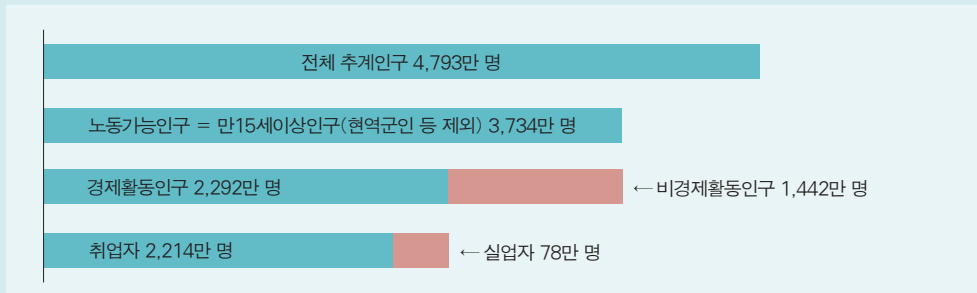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3년 중 우리나라 전체 추계인구는 4,793만 명이고 현역군인 등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는 3,734만 명입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292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442만 명입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는 2,214만 명, 실업자는 78만 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003년 중 실업률은 3.4%(실업자 78만 명 ÷ 경제활동인구 2,292만 명 × 100), 경제활동참가율은 61.4%(경제활동인구 2,292만 명 ÷ 15세 이상 인구 3,734만 명 × 100)로 계산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2003년 기준)



것이 아니고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일할 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분류기준이 되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대부분 65세 이상),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공식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보다 낮다고 생각될까요? 이는 현행 실업률통계를 산출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을 보다 정확히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지만 조사대상기간 중에 구직의사가 없었던 구직단념자를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날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체감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높게 느껴지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임시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면서 상용직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준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직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공식적인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업|을|거|리|

경제고통지수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실업률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해보는 한 지표로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rthur Okun)이 날씨의 '볼쾌지수'에 착안하여 고안한 것으로서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입니다. 동 수치가 클수록 피부로 느끼는 삶의 고통이 가중되고 작을수록 삶의 고통이 완화됨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타임즈(2004년 6월)가 경제고통지수를 활용해 지난 반세기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경제성적을 평가한 것을 보면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 때 임기 말의 경제고통지수가 전임자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 중에서 재임기간 중 가장 크게 줄어든 때는 카터 시절의 17.9에서 10.1로 하락한 레이건 시절이라고 합니다.

3. 임금 상승은 높을수록 좋을까?

임금은 노동생산성,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임금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가계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원천이며, 사용자에게는 공장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재료비 등과 함께 생산비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또한 임금수준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노동투입을 대신하여 기계설비 투자를 늘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가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즉 근로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도 적정선을 제시하여 일정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사 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타협을 보지 못하고 갈등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가 수긍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생계비,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을 결정하는 데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 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투입비용, 즉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



|업|을|거|리|

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다른 나라보다 낮을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제1·2차 석유파동기와 외환위기 이후 몇 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3%대로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실업통

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나라들도 같은 기준을 사용해 실업률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통계작성 방법상의 차이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이 외국과 상당히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작성방법상의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하고 있어 구직등록통계를 이용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실업상태를 적극적으로 밝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구직등록통계를 이용할 경우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업자 수를 실제와 비슷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실업자 여부 판정기준의 하나인 구직활동기간을 일본 대만 등과 같이 조사대상 1주일 간만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한 과거 4주간으로 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OECD국가에 비해 실업자 수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을 보면 외국에 비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은 점입니다. 농림어업 부문은 제조업 등 비농림어업 부문에 비해 실업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구멍가게 등과 같은 자영업주와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일을 거들어 주는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실업률을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에는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가급적 현재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고도 기사노동에 전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크게 높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나요?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가 만들어내는 산출량을 말합니다. 산출량을 산업생산지수와 부가가치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각 물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합니다.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산출량(산업생산지수 또는 실질부가가치)}}{\text{노동투입량(노동투입인원 \times 근로시간)}}$$

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말하는데 이는 노동 1단위 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text{단위노동비용} = \frac{\text{노동비용}}{\text{노동투입량}} \div \frac{\text{산출량}}{\text{노동투입량}} = \frac{\text{노동1단위비용(시간당 임금)}}{\text{노동생산성}}$$

문입니다. 이 경우 향후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다시 고임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실업을 유발하게 됩니다. 생계비도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입니다.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통해 생계비 상승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임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이나 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보통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임금협상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법으로 근로자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앞의 국민소득에서 명목과 실질이 있었듯이 임금의 경우에도 명목과 실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목임금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명목임금이 아닌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임금입니다. 즉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증가율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2004년 9월에서 2005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2,840원, 일당(8시간 기준) 2만 2,720원, 월당(226시간 기준) 64만 1,84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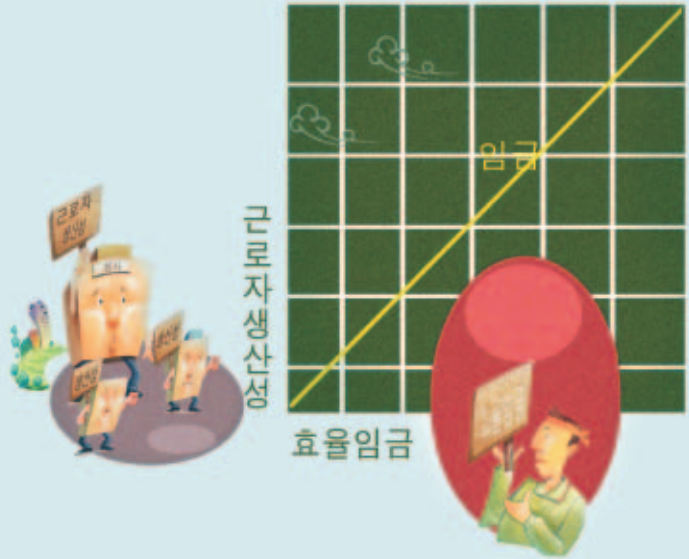
이 제도는 전산업의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2,556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을|거|리|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어떤 사람은 달걀이 먼저다, 다른 사람은 닭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등 우리는 이와 유사한 논쟁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경제이론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고 설명하나 '효율임금이론'에서는 임금의 높고 낮음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율임금이론은 임금과 근로자들의 건강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 보다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져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나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건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높은 임금은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을 그 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의 자질을 판단하기 곤란한데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보다 우수한 지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임금이 낮아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도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빈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을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직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의 작업태도를 감시하여 직무에 태만한 근로자는 해고합니다. 임금이 높으면 근로자들은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임금이론이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나 동 이론이 현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평균수준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을 보인다는지 하는 것은 효율임금이론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자료: 이준구의 '경제학원론', 맨큐·김경환 외 공역 '맨큐의 핵심경제학' 일부 발췌

물가연동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물가상승에 연결시킨 것

보다 높을 경우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물가상승에 연결시키는 **물가연동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실질임금을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의 신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과 어떤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할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째 마당

10

돈이란?

- 1. 돈은 경제의 혈액
경제생활과 돈
돈의 세 가지 기능
- 2. 돈은 어떻게 생겨났나?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로
지폐와 법화제도
- 3.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공급
은행은 예금통화를 창출
부문별로는 민간, 정부, 해외 부문 등을 통해 돈이 공급
돈의 양은 어떻게 조절하나?



열째 마당 _ 돈이란?



1. 돈은 경제의 혈액

경제생활과 돈

오늘날 돈이 없는 경제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은 일상생활을 매개하고 있어 의식주와 같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빚어지는 우려곡절도 많으며 돈으로 행복이나 권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불행과 최악의 근원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돈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돈이 그 기능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적건 많건 돈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점심을 먹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등에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소득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금융기관에 저축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은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빌려줍니다. 기업은 그 빌린 돈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씁니다. 이처럼 돈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기 때문에 흔히 인체에 있어 혈액의 역할에 비유됩니다.

돈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용되어 '돈을 많이 번다.' 라고 할 때의 돈은 소득이나 매출액을 뜻합니다. 또 '그는 돈이 많다' 라고 할 경우의 돈은 재산이나 부(富)로서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갖고 있는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돈**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형태의 자산을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 경우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은 돈이지만 주식은 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점심 값이나 휴대폰 사용료로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경제에서는 이러한 돈을 **화폐**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에서 돈과 화폐는 순수한 우리말과 한자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의미가 같다고 보고 혼용하기로 합니다. 또 엄밀한 의미로 현재 사용 가능한 현금, 예금 등의 지불수단을 뜻하는 통화도 돈과 화폐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같이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제 돈, 즉 화폐의 기능과 역사를 알아보고 돈의 공급과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세 가지 기능

돈은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물로서 지불수단의 기능을 합니다. 돈이 갖는 **교환매개 기능**의 중요성은 돈 없이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던 물물교환 경제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가지고 생선과 교환하려고 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사람은 쌀을

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

교환매개 기능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



필요로 하면서 그 대가로 생선을 지불하려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운 좋게 만날 수 있다면 쌀과 생선을 교환함으로써 각자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거래하려는 두 사람의 욕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교환한다면 거래 상대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돈의 사용이 탐색비용 등 여러 가지 거래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저렴하고 질 좋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전문



| 읽 | 을 | 거 | 리 |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것. 보통 통용되는 모든 지폐와 동전의 액면을 1,000 대 1 또는 100 대 1 등과 같이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현행 화폐를 1,000 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100만 원으로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변동하거나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은 돈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치척도 기능인 표시 단위를 변경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때 화폐의 호칭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생활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화폐의 호칭도 함께 변경합니다.

2004년 1월 터키 의회는 터키 정부가 제출한 화폐단위 변경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여 2005년 1월부터 100만 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2004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23년의 독일 이후 2002년의 아프가니스탄까지 모두 49개 국가에서 화폐단위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랑스와 핀란드가 각각 1960년과 1963년에 100 대 1로, 러시아가 1998년에 1,000 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53년 2월 화폐단위를 100 대 1로 낮추면서 호칭을 원(圓)에서 환(圓)으로 변경하고, 1962년 6월에는 화폐단위를 10 대 1로 낮추면서 호칭을 환(圓)에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왜 실시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큰 편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거나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지면 화폐단위로 표현하는 거래단위 숫자가 너무 커져서 거래나 계산·회계처리 등 경제생활에서의 불편이 많아지는데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국 화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한편 리디노미네이션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화폐단위가 낮아진 데 따른 착각 때문에 소비증가와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새 화폐의 제조, 현금입출금기와 자동판매기의 교체, 각종 전산 프로그램의 수정 등에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 통용되는 모든 지폐와 동전의 액면을 1,000 대 1 또는 100 대 1 등과 같이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것

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로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여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돈에는 **가치척도 기능**이 있습니다. 각 상품의 경제적 가치는 돈, 즉 화폐의 단위로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을 10만 원, 노트북 컴퓨터의 가격을 100만 원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카메라 1대의 가격을 노트북 컴퓨터 10분의 1대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물건 값을 모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불편과 비용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돈을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고 계산과 회계를 하는 단위로 사용합니다.

돈은 **가치저장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가치저장 기능이란 시간이 지나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을 보관해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물론 돈만이 유일한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나 귀금속, 건물, 쌀 등 실물자산도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농민은 가을에 거둔 쌀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해에 팔아 생활비, 자녀 학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을 가을에 바로 팔아 돈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편이 편리할 것입니다. 쌀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지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돈을 보관하는 데는 조그만 금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금융 자산은 단기에도 경제여건에 따라 그 자체의 가격변동이 큰 반면 돈은 물가가 안정된 정상적인 경우 가치변동이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치척도 기능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고 계산과 회계의 단위가 되는 기능

가치저장 기능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기능

2. 돈은 어떻게 생겨났나?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로

흔히 돈 하면 위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사각형의 지폐나 동그란 금속 주화를 연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현재와 같은 돈의 모양과 화폐제도가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

다. 돈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환동기에 의한 자연발생적 학습과정에 의해 생겨나 발달되어 온 하나의 사회제도인 것입니다. 오래되었다는 주화의 경우에도 고작 몇 천 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며 지폐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용한 것은 소금, 쌀, 배, 가축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이었습니다. 이를 **상품화폐**(commodity money)라고 부르는데 물물교환에 비하면 발달된 형태였지만 이것을 돈으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상품화폐를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금 은 등과 같은 **금속화폐**입니다. 금속은 일반 상품에 비해 휴대하기 편리하고 변질되지도 않기 때문에 화폐로서 널리 쓰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금속 조각 대신 일정한 형태의 주조화폐를 유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조화폐는 사람들이 주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주조의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 점차 금속의 함량을 줄임으로써 명목가치에 비해 소재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대로 시중에 양화가 사라지고 귀금속 함유량이 적은 악화만 유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지폐와 법화제도

금속화폐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은 18세기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종이 돈, 즉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폐는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았으나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금액의 금이나 은을 기초로 발행됨으로써 유통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폐를 **태환지폐**(convertible money)라고 부르는데 누구나 요구하면 지폐를 금이나 은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지폐는 제조비용이 적고 휴대가 간편해서 금속화폐 대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지폐의 사용이 일반화되자 은행들은 신용상태만 좋으면 실제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불환지폐**(unconvertible money)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불환지폐는 그 자체가 하등의 상품가치를 가지지 않아 명목화폐라고도 합니다.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불환지폐가 돈, 즉 화폐로서 지불수단과 가치저장 등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지폐에 표시된 액수의 가치를 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를 **법화**(法貨, legal tender)라고 부릅니다. 법화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위조를 막는 등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의 루블화는 여전히 법화임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사람들은 루블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거래수단으로 더 선호했습니다. 이는 자국 화폐인 루블화보다 달러화가 장래에도 실질가치의 하락 없이 통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 더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제47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제48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환지폐
요구가 있으면 즉각 금
이나 은으로 바꿔 줄 수
있는 지폐

법화
국가 법적으로 그 가
치를 보장하는 화폐

한편 법화제도도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중앙은행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통화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리통화제도는 금속 화폐 시대에 없던 지폐발행 남발의 위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돈의 발행과 그 양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남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동서고금에 그 사례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말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경비 조달을 위해 당백전(當百錢)을 남발함으로써 물가가 폭등하고 국민의 생활이 파폐해졌던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은행이 발달하고 공신력이 커지면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는 화폐와 같이 지불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도 교환의 매개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환의 매개수단이 어떤 형태로 진화해 갈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임|을|거|리|

돈 이야기(1) - 세계는 지금 위조지폐와 전쟁 중

컬러프린터, 스캐너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성능이 날이 갈수록 향상되면서 이를 이용한 정교한 위조지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지폐의 위조 방지를 위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폐 위조 방지를 위해 2003년 10월에 20달러 지폐를, 2004년 9월에는 50달러 지폐를 새로 발행하였으며 100달러 새 지폐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럽 12개국은 2002년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하였으나 전문위조단 등에 의한 위조지폐가 증가함에 따라 새 지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위조지폐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04년 11월 20년 만에 지폐를 새로 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하여 2000년 6월에 만 원 권을, 2002년 6월에는 5,000원 권을 새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위조지폐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사용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여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만 원 권(2000년 6월 이후 발행 분)에 적용된 위조방지장치



- ① 빛에 비춰보면 나타나는 초상화의 숨은 그림 : 위조지폐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폐면의 초상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 ② 볼록하게 인쇄된 문자와 숫자 : 위조지폐는 이러한 볼록한 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 ③ 앞·뒤 문양이 일치하도록 인쇄 : 위조지폐의 경우 이 부분의 앞·뒤 문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④ 볼록하게 인쇄된 시각장애이용 점자 : 위조지폐는 이러한 볼록한 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 ⑤ 점선 형태의 은색선 : 위조지폐의 경우 이 부분이 검거나 은빛 물감 등으로 덧칠해져 있습니다.
- ⑥ “한국은행”이라는 아주 작은 글자 : 위조지폐에는 이 작은 글자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⑦ 기울여 보면 나타나는 숨은 숫자 “10000” : 위조지폐에는 숨은 숫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읽 | 을 | 거 | 리 |

돈 이야기(2) - 땡전 한 푼의 유래를 찾아서

돈과 언어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가 있기에 이를 매개로 서로 의사전달을 하여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안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 있기에 복잡한 거래가 단순화되어 누구든지 교환의 편익을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은 모든 경제거래에서의 언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변했어도 우리가 즐겨 쓰는 돈에 관한 언어 표현은 쉽게 바뀌지 않아 언어를 통해 돈의 옛 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진 돈이 전혀 없음을 강조할 때 흔히 '땡전 한 푼' 없다고 말한다든지 저축을 홍보할 때 '푼돈 모아 목돈 마련' 등이라는 표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땡전은 무엇이고 푼은 무엇일까요? 먼저 '푼'은 우리나라에 근대화폐, 즉 신식화폐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조선통보 상평통보 등을 일컫는 엽전을 말하는 것으로 엽전 1개는 1푼, 10푼은 1전(錢)이며 10전(錢)은 1량이니 1량이 100푼이었습니다. 또한 땡전은 고종 3년(1866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에 막대한 경비조달 등을 위해 당백전(當百錢)을 주조 유통시킨 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당백전은 실질가치(소재가치)가 상평통보의 5~6배에 불과한 반면 그 명목가치는 100배에 달하여 발행 초기에 쌀값을 6배로 폭등케 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을 극도로 피폐하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이 당백전에서의 당전을 거세게 발음하여 땡전으로, 다시 땡전을 땡전으로 더 격하게 발음하게 되어 그 땡전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실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외시키고 제조·유통된 화폐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가 언어 속에 오래도록 간직되어 왔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자료 : 이정식·이정욱, '돈을 다루는 사람의 돈 이야기'



당백전(當百錢) :

당백전은 대원군의 주도아래 1866년(고종3)부터 이듬해까지 발행된 동전으로 경복궁 중건과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액면가치가 상평통보 1문(엽전 한개)의 100배여서 당백전으로 불리었지만 실질가치(소재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에 불과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관주(官鑄) 이외에도 사주(私鑄) 및 도주(盜鑄)가 성행하여 이로 인한 당백전의 남발은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상승을 초래하였다. 당백전 발행 당시 7~8냥 하던 쌀 1섬의 값은 이후 44~45냥으로 무려 6배나 폭등하여 일반백성들의 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2004년 12월)에서〉



돈 이야기(3) - 신용 카드와 전자화폐도 돈인가?

사람들은 신용카드(credit card)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식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실생활에서 지갑 속의 현금과 같이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도 돈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뜻 보면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용카드는 돈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지불을 늦추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주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대금을 지급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가 우선 식사대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주인은 후에 이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대금 청구서를 받고 본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는 IC카드,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적 가치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됩니다. 전자화폐 역시 예금이나 현금을 근거로 돈을 전자화폐에 저장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금의 대용수단이 되지만 그 자체로 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화폐로 물건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액이 전자 매체에서 곧바로 빠져 나갑니다. 즉 전자적으로 내장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화폐는 자기앞수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그 자체가 돈이 아니며 그 뒤에 있는 예금계좌가 돈이며 따라서 그 예금계좌의 잔액이 통화, 즉 돈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를 돈으로 간주하는 것은 돈의 기능 중 교환의 매개수단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 즉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이외에 가치척도 및 가치저장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를 왜 돈이라고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읽 | 을 | 거 | 리 |

돈 이야기(4) - 우리나라 돈의 역사



▶ 우리나라의 현용화폐

우리나라에서 돈, 즉 화폐의 주조와 사용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기원전 957년 기자조선의 자모전(子母錢)에 관한 것입니다. 또 삼한의 하나인 마한에서는 기원전 169년에 동전(銅錢)을 주조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전에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금속으로 만든 돈보다는 곡물이나 벼와 같은 직물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돈에 관한 기록과 유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돈은 철을 주조해 만든 건원중보(乾元重寶)입니다.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15년인 996년에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나 활발히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화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 1401년(태종 1년)에는 최초의 지폐인 저화(楮貨)가 발행되었으며, 1423년(세종 5년)에는 동전(銅錢)인 조선통보(朝鮮通寶)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교환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 이들 화폐가 일반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1678년(숙종 4년) 우리나라 화폐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발행되었습니다.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화폐 중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이며 2세기에 걸쳐 장기간 통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최초의 은행권은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이 1902년에 개항장에서 무역 거래를 위하여 유통시킨 일 원(壹圓) 오 원(五圓) 십 원(拾圓) 3종류의 지폐입니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구한국은행(당시의 이름은 한국은행이었으나 현재의 한국은행과 구별하기 위하여 구한국은행이라 함)이 설립되고 1910년부터 일 환(壹圓) 오 환(五圓) 십 환(拾圓)을 발행하였습니다. 1911년 8월 구한국은행은 조선은행으로 다시 출범하고 1914년부터 일원(壹圓) 오 원(五圓) 십 원(拾圓) 백 원(百圓)짜리 돈을 발행하였으나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비조달을 위해 은행권을 남발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수탈을 심화시켰습니다.

1950년 6월 현재의 한국은행이 설립되고 그해 7월에 최초의 원(圓) 표시 한국은행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3년 2월에는 인플레이션의 진정 등을 목적으로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圓)으로 바꾸고 100원(圓)을 1환(圓)으로 화폐단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1962년 6월 다시 화폐단위를 환(圓)에서 순수한 한글인 원으로 바꾸고 10환(圓)을 1원으로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읽 | 을 | 거 | 리 |

돈 이야기(5) -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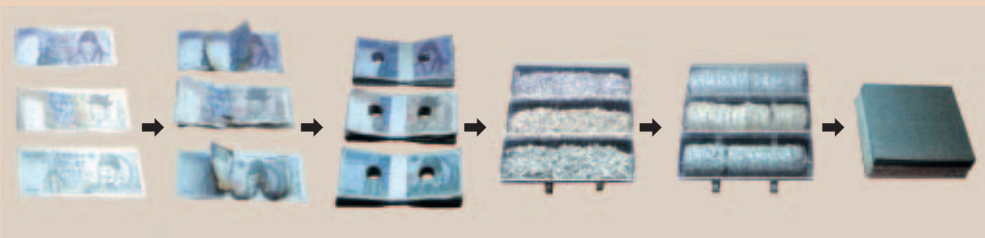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지폐는 종이기가 아닌 100% 면으로 만들고 있으며 지질의 수준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깨끗이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 원 권의 유통수명은 4.5년, 오천 원 권과 천 원 권은 2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100달러는 9.5년, 호주 100달러는 11년, 캐나다 1,000달러는 13.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유통수명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폐기한 지폐는 연평균 5조 5,000억 원 정도로 5톤 트럭 기준 194대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폐기한 물량을 쌓아 놓을 경우 높이는 약 9만 6,000m로 백두산 높이(해발 2,750m)의 35배이며,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높이(해발 8,850m)의 11배에 달합니다. 또한 찌그러짐과 부식 등으로 못쓰게 되어 폐기되는 주화는 연평균 8백만 개로 6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매년 폐기되는 돈을 새 돈으로 바꾸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 돈을 만드는 데 연평균 1,08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화폐 제조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됩니다. 돈을 깨끗이 사용하면 돈의 수명이 늘어나 돈을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의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나라의 돈에는 그 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깨끗함 정도에 따라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돈을 소중하게 다루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두 이익이 되므로 돈 깨끗이 쓰기를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 평소에 돈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구기거나 찢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현금거래가 많은 경우 전대나 현금보관용기를 사용하고 더러운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화의 경우 앞뒷면을 갈거나 구멍을 뚫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는 2004년 한해에 500원짜리 주화 8천만 개, 100원짜리 3억 개, 50원짜리 1억 1천만 개, 10원짜리 2억 2천만 개 등 7억 개를 시중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297개씩 보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처럼 주화의 공급이 많은 것은 경제규모의 확대, 자동판매기의 증가 등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나 집안의 저금통이나 책상서랍에 퇴장되어 다시 사용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주화는 저금통이나 책상서랍에 방치하거나 묵혀 두지 않고 거래에 적극 사용한다면 주화의 유통이 원활해져 제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돈의 폐기과정

3.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공급

어느 나라 경제든 법화제도를 운영하려면 그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중앙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등도 법화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법화를 발행하고 통화정책 등을 수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 국민경제 각 분야를 대표하는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국은행

www.bok.or.kr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공채 매매 등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를 매입하면 그에 따라 새로운 돈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면 그 대금이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으로 지급됨에 따라 시중의 돈이 줄어듭니다.

돈의 공급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중앙은행은 법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서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돈을 공급합니다. 이를 **본원통화**라 하는데 민간 화폐보유액과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측정됩니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예금 가운데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자신의 금고에 남겨 놓은 돈을 말합니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때, 은행에 대출할 때, 외환을 매입



할 때,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인출할 때 등에 각각 공급됩니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돈은 시중에 그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예금됩니다. 은행으로 들어온 예금은 또다시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돈을 대출 등으로 시중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과 예금자의 예금 과정이 되풀이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당초 은행에 공급하였던 돈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은 예금통화를 창출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현금을 지갑에 남기지 않고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예금 가운데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한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해 정부공사대금 1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A은행에 100만 원 예금하며, A은행은 이중 10%의 지급준비금을 남겨두고 90%를 대출합니다. 이 경우 통화량을 측정해 보면 A은행이 대출하기 전에는 100만 원이었으나 A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면서 용자받은 사람은 현금 90만 원을 갖게 되었으므로 현금과 예금의 합인 **통화량**은 19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게 되면 **예금통화**를 창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금통화는 풍선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은행의 신용창출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100만 원을 공급하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예금통화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통화량
경제 내에 유통되는 돈의 양

표 10-1 은행의 신용 창출

	한국은행	A은행	B은행	C은행	합 계
본원 통화	100					100
예금 통화		100	90	81.0	1,000
지급준비금		10	9	8.1	100
대출		90	81	72.9	900

부문별로는 민간, 정부, 해외 부문 등을 통해 돈이 공급

이처럼 한국은행은 지폐나 주화 형태로 시중에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예금통화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돈의 공급을 정부, 민간, 해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은 가계와 기업을 말합니다. 시중의 돈의 양은 통화정책 이외에 정부활동과 해외거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동요인을 각 부문별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에 따라 변동합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경우 돈은 정부의 은행인 한국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줄고 반대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집행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민간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회수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외국과의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은 결과로 일어납니다.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 돈을 들여와 국내은행에서 우리 돈과 바꾸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기타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도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은행이 건물을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감소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돈의 양은 어떻게 조절하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화지표를 작성하고 그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준비된 금의 양에 맞추어 화폐를 발행하던 과거의 금본위



제도과 달리 중앙은행이 별도의 금 준비 없이 화폐를 발행하는 오늘날의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크게 공개시장조작정책, 대출정책, 저금준비정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면 국채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한국은행이 시중의 돈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금융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금융기관이 현금이나 은행예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개시장조작은 1830년대에 영국의 영란은행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의 설립과 함께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였으며 미국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도 1980년대 이후 금융자 유화가 진전되고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공개시장조작이 핵심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지급준비정책 또는 대출정책과 달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인 데다가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시장조작은 실시 시기나 조작 규모 및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속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정책은 일반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제도 초기에 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할인제도라고도 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대출 금리는 재할인금리라고도 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대출정책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곤경에 처한 금융기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1997년 말경 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일부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10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4년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의 대출자산이 대량으로 부실화되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76억 달러를 대출하고 1991년에는 부실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Bank of New England에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23억 달러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급준비정책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비율, 즉 지급준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예금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

어들과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시중의 돈은 늘어 납니다. 지급준비율은 조금만 조정되더라도 국가 전체의 돈의 양이나 은행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을|거|리|

최종대부자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란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돈 부족 사태가 나타날 때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뜻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단기의 예금을 받아 장기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간에 만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하지만 대출을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건전한 은행이라도 동반하여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시에 금융기관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위기 때마다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들이 고수의 고위험 자산을 더욱 선호하게 함으로써 경영이 불건전해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들도 자신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경영과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 없이 고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대부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은 경영실태 파악과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합니다.



최종대부자



지갑 속의 돈만 돈인가?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 즉 **통화량**(money stock)은 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을 통해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시중에 필요 이상 또는 반대로 너무 적게 풀려 있으면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통화지표를 작성합니다. 통화지표는 무엇까지를 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통화라고 하면 갖고 있는 지폐나 주화 같은 현금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종 예금도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넓혀 이들도 통화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통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M3라고 불리는 세 가지 지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지표의 추이를 관찰하여 시중자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협의통화(M1) : 현금,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국민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지폐와 주화는 명백히 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금만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수단인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구불예금 잔액, 즉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의 예금계좌도 통화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 등을 통해 원할 경우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어 지갑속의 현금과 거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금 이외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 결제성 예금을 포함하여 M1이라고 합니다. M1은 돈의 세 가지 기능 중 교환의 매개수단, 즉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통화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의통화(M2) : M1에 포함되는 현금과 결제성 요구불예금 이외에 은행의 정기예금, 수익증권, 금융채, 거주자의 외화 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금융상품은 결제의 수단보다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일정기간 저축수단으로 보유되지만 다소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면에서 결제성 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외화예금도 국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제약이 있으나 언제든지 원화로 바꾸어 유통할 수 있습니다.

M3 : M2에 2년 만기 이상의 정기예금과 장기금전신탁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현재로서는 시중의 유동성 수준을 가장 넓게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돈과 금융 이야기

열한째 마당

11

금융과 신용

- 1. 금리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리는 돈을 빌려 쓴(빌려 준) 대가
금리의 여러 종류
금리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2. 왜 금융시장은 다양하게 있을까?
금융시장이란?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 3. 금융기관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금융기관의 개념과 역할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증권회사·기타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겸업화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 4.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
신용이란 무엇인가?
기업과 국가의 신용
개인의 신용



열한째 마당 _ 금융과 신용



1. 금리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물거래에서는 상품과 돈이 교환되지만 금융거래에서는 돈과 증권 또는 채무증서가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통장을 내어 줍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의 결과, 당사자 간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예금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부채입니다. 국민경제 내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흑자 경제주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큰 적자 경제주체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주체 사이에, 즉 흑자 경제주체와 적자 경제주체 사이에 돈이 유통되는 것이 곧 금융입니다.

돈의 유통과 관련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법규 등을 포괄하여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라고 합니다. 금융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자금을 잉여 부문에서 부족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으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위축됩니다. 흑자 경제주체인 가계도 마땅한 저축이나 보험 수단이 없으면 미래의 소비나 노후, 재해 등 위험에

금융제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
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법
규 등을 포괄하는 개념

적절히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금융제도의 주축으로서 기능하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돈을 빌려 쓴(빌려 준) 대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도 있지만 돈이 부족해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빌려 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만 원을 예금하고 1년 뒤에 11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돈을 예금한 대가로 받는 1만 원이 이자입니다. 이 경우 예금 금리는 이자 1만 원의 원금 10만 원에 대한 비율, 즉 10%입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을 예금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영화관람, 외식, 옷 구입 등 현재 소비의 만족을 포기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금융거래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이자를 돈의 시간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변동함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의 가격인 금리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좌우됩니다. 즉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돈의 공급은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계의 소득이 적어지거나 소비가 늘면 돈의 공급이 줄어들어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또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질 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밖에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그리고 차입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리의 여러 종류

금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 방식으로는 120만 원(100만 원 $\times(1+0.1\times 2)$)이 되지만 복리 방식으로는 121만 원(100만 원 $\times(1+0.1)^2$)이 됩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에는 보통 명목금리로 이자를 계산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실질금리가 얼마인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연 5%이고 물가상승률이 연 5%라고 하면 실질금리는 0(零)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예금 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text{실질금리} = \text{명목금리} - \text{물가상승률}$$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1억 원을 1년 예금할 때 세후이자 318만 원, 물가상승분은 360만 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명목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명목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아래는 예금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금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7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월의 연 3.83%에서 3.81%로 하락했다. 이 금리로 1억 원을 1년간 은행에 맡길 경우 이자소득은 381만 원이 되지만 이자소득세 62만 8,650원(16.5%)을 떼고 나면 실제 받는 이자는 연 3.18%인 318만 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분(연 360만 원, 6월 3.6% 기준)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0.42%)가 된다.

✦ 자료 : 세계일보, 2004년 7월 29일

금리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도 구분되어집니다.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합니다.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일지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집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계산방법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집니다.

금융거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금리의 또 다른 개념 중 수익률과 **할인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 후 원금 100만 원과 이자금액 10만 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수익률은 10%입니다. 즉 수익률은 투자수익, 여기서는 이자금액을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text{수익률} = \text{이자금액} / \text{채권가격} = 100,000 / 1,000,000 = 0.1 \text{ 즉 } 10\%$$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 원 할인된 90만 원에 사고 1년 후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 할인율이 10%라 합니다. 이를 위에서 설명한 수익률로 바꾸어 보면 현재 90만 원짜리 채권에 투자하고 1년 후에 원금 90만 원과 이자금액 10만 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 또는 금리는 수익률 개념입니다. 따라서 할인율로 표기된 경우에는 정확한 금리 비교를 위하여 수익률로 전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text{할인율} = \text{할인금액/채권가격} = 100,000/1,000,000 = 0.100 \text{ 혹은 } 10.0\%$$

이를 수익률 개념으로 전환하면 ;

$$\text{수익률} = \text{이자금액/채권가격} = 100,000/900,000 = 0.111 \text{ 혹은 } 11.1\%$$

한편 금리는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 자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또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종류나 만기에 따라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수익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나 물가는 물론 국가 간의 자금 흐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계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같은 금액의 돈을 맡기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여 지금 소비하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되며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금리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 변동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할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시장금리로 알 수 있는 정보

아래 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요 시장금리(수익률)를 나열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수익률, CD수익률 등은 신문에 매일 게재되고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금리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장금리 지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기와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을 보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위험과 수익률 : 만기가 3년으로 동일하더라도 수익률은 국고채, 회사채(AA-), 회사채(BBB-)의 순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사려는 사람은 금융상품 발행자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즉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러한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동일한 데도 신용의 차이로 생기는 수익률의 격차를 위험할증률(risk premium)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이므로 국고채수익률은 다른 상품의 위험할증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용위험(credit risk) 또는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은 금융상품의 가격, 즉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기가 91일로 동일한 CD수익률이 CP수익률보다 낮은 것도 신용위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어서 일반 기업이 발행한 CP보다 신용위험이 낮다고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콜금리 목표 변경 : 2004년 8월 12일(목요일) 11시 47분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1일) 목표를 연 3.75%에서 연 3.5%로 하향조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시장금리 지표가 0.20%포인트 내외 연쇄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KORIBOR는 8월 13일자에 반영되었습니다.)

(종가기준, 연 %)

	2004.7 말	8.9 (월)	8.10 (화)	8.11 (수)	8.12 (목)	8.13 (금)	8.16 (월)
콜금리(1일)	3.78	3.77	3.78	3.77	3.53	3.52	3.52
KORIBOR(1개월)	3.74	3.74	3.74	3.74	3.74	3.51	3.50
CD(91일)	3.90	3.90	3.90	3.90	3.73	3.67	3.65
CP(91일)	4.02	4.02	4.02	4.02	3.85	3.80	3.78
국고채(1년)	3.90	3.97	3.95	3.95	3.76	3.68	3.67
국고채(3년)	4.08	4.08	4.04	4.04	3.87	3.74	3.74
회사채(3년, AA-)	4.65	4.64	4.60	4.60	4.42	4.30	4.30
회사채(3년, BBB-)	9.09	9.07	9.03	9.03	8.85	8.73	8.72
국고채(5년)	4.32	4.28	4.24	4.23	4.05	3.90	3.89

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금융경제 - 금융시장 주요지표
한국증권업협회 홈페이지(www.ksda.or.kr) - 채권정보센터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KORIBOR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는 국내 은행들이 서로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국내에서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와 같은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의 기준금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04년 2월 단기 기준금리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고 수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7월 26일 정식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KORIBOR의 만기는 1주일부터 12개월까지 모두 10종(1주일, 2주일, 1·2·3·4·5·6·9·12개월)이며 14개 은행이 제시한 만기별 금리 중에서 상·하위 각각 3개의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금리를 평균하여 구합니다.

앞으로 KORIBOR는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뿐만 아니라 KORIBOR 연동대출,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이자율스왑 등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시장참가자들의 가격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예금·대출시장, 채권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등 여러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을 높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이 위축되고 개인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품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어 물가를 하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가 상품의 생산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경우 제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쪽 영향이 더 큰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가



상승 효과보다 수요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금리의 변동은 나라와 나라 사이 돈의 움직임, 즉 자본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 등 다른 여건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 외국 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운용하는 것이 자기나라에서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자금을 유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의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보다 높은 이익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금리는 금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처럼 투자, 소비, 물가 등 실물부문에 파급됩니다. 금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폭 넓고 다양하므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가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수단으로 하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또한 금리 변동이 너무 심하면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의 투자 등 경제주체들의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므로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좀 더 알아보기 |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이자율(금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현재가치**(present value)와 **미래가치**(future value)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주는데 그 시기를 오늘 또는 10년 후로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오늘 10만 원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10만 원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면 1년 후에는 원금 10만 원에 이자가 붙어나 1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한 금액이라면 현재 금액의 가치가 미래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10만 원을 주거나 10년 후에 20만 원을 주는 것을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는가? 상당히 고민해야만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의 10만 원과 미래의 20만 원을 비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개념을 이용한다. 즉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금액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거나 미래에 그 금액을 얻기 위해 지금 얼마가 필요한가, 즉 미래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견주어 보면 된다. 이를 다음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문제: 오늘 은행에 10만 원을 예금하면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 즉 현재 10만 원의 10년 후 미래가치는 얼마일까?

답: 이자율이 5%이고, 이자는 매년 지급되고, 그 이자가 복리방식이 지급된다면 1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가 $(1+0.05) \times 10$ 만 원이 되고, 2년 후에는 $(1+0.05) \times (1+0.05) \times 10$ 만 원, 10년 후에는 $(1+0.05)^{10} \times 10$ 만 원이 될 것이다. 즉 $(1+0.05)^{10} \times 10$ 만 원 = 16만 3,000원이다

문제: 반대로 10년 후 20만 원을 받는다면 이 금액의 현재가치는 얼마일까? 다시 말해 10년 후에 20만 원을 받기 위해 오늘 현재 얼마를 예금하여야 할까?

답: 이 문제는 앞의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앞에서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 현재금액에 $(1+0.05)^{10}$ 을 곱하였다. 반대로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금액을 $(1+0.05)^{10}$ 으로 나누면 된다. 즉, 10년 후에 받을 20만원의 현재가치는 20 만 원 $\div (1+0.05)^{10}$ 이 된다. 즉 20 만 원 $\div (1+0.05)^{10} = 12$ 만 3,000원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자율이 r 이라면 n 년 후에 받을 X 금액의 현재가치는 $X \div (1+r)^n$ 이 된다.

오늘 받는 10만 원과 10년 후에 받을 20만 원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자율이 5%일 때 10년 후에 받을 20만 원의 현재가치는 12만 3,000원으로 10만 원보다 많다. 따라서 10년을 기다려서 20만 원을 받는 것이 당장 1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 경우는 이자율이 5%일 때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고 만일 이자율이 8%라고 하면 10년 후에 받게 될 20만 원의 현재가치는 20 만 원 $\div (1.08)^{10} = 9$ 만 3,000원이므로 당장 10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자율이 높으면 같은 금액을 예금할 경우 원리금이 더 많아져 당장 손에 쥔 10만 원의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가치의 개념은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등에도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는데 당장 1조 원이 들고 공장에서 10년 후에 2조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공장을 건설해야 할까? 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용 1조 원을 미래의 수입 2조 원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자율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만일 이자율이 5%라면 10년 후 수익 2조 원의 현재가치는 약 1조 2,000만 원이므로 공장을 짓는 편이 이익이다. 반면에 이자율이 8%라면 2조 원의 현재가치는 9, 300억 원이므로 투자를 포기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 자료 :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2. 왜 금융시장은 다양하게 있을까?

금융시장이란?

금융시장

경제주체들 사이에 돈의
유통, 즉 금융거래가 이
루어지는 시장

경제주체 사이에 돈의 유통, 즉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금융시장** 이라 하고, 그 매개수단인 증권 또는 채무증서를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자금

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나아가 경제 전체의 후생이 늘어나게 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들어가는 탐색비용과 정보비용 등 각종 비용과 시간을 줄여 주는 한편 적절한 자금 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을 언제라도 다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가격, 즉 금리나 주가 등을 결정함은 물론 가격을 통해 자금 수요자의 신용과 수익성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합니다. 각종 정보는 시장참가자들에게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 확장에 필요한 돈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데 금융시장이 이러한 계획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은 거래 단계, 형태 그리고 상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거래 단계에 따라서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나뉩니다. 발행시장은 자금의 수요자가 주식, 채권 등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은 금융거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됩니다. 직접금융은 자금공급자가 자금의 최종수요자가 발행한 채무증서나 주식 등의 직접증권 또는 본원적 증권을 자기 위험부담 하에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직접금융은 주로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증권회사는 자금공급자의 위탁에 의해 증권매매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신이 자금공급자로서 직접 금융시장에 참가합니다. 이와 달리 간접금융은 은행이나 자산

운용회사가 예금증서나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증권을 발행하여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직접증권을 매입하는 방식, 즉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형태로 금융이 이루어집니다.

금융시장은 또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예금·대출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는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만기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미만인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화폐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합니다.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이 일시적으로 여유 있는 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현금을 갖고 있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자금의 이자 수입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있으면 여유 현금이 생길 경우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자금이 일시 부족한 경우 단기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조달함으로써 현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금융상품은 장기 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폭이 크지 않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으며 유통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팔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고 금융상품의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용을 통해 콜금리를 조정하여 단기금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으로는 콜(call)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또는 Repo : repurchase agreement)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 nego-

tiable certificate of deposit)시장,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본 시장은 기업과 정부 등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는 넓은 의미로 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등 장기 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증권시장을 말합니다.

이중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기업은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자금을 운용합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기업의 자기자본으로 전환되어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로서 지분만큼 소유권을 갖습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매각하고 나면 이 주식들은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KOSDAQ),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일반 상품의 가격처럼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고 각 요인이 주가에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투자자

자본시장

주식, 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www.krx.co.kr



▶ 유가증권시장 (사진 출처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매매체결이 전산화되기 이전 유가증권시장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주식시세표 보는 법

대부분의 일간 신문은 주식시세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A경제신문에 게재된 주식시세표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봅시다.

종목명: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을 말하며 편리한 거래를 위해 종목별로 고유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번호 옆에 쓰여 있는 알파벳 'C' 는 주식의 액면가를 구분하는 기호입니다.

* 액면가: A=100원, B=200원, C=500원, D=1,000원, E=2,500원, 무표시=5,000원

주가: 주식시세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주당 주식이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가는 시장이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된 주식 가격입니다. 등락은 전일에 비하여 가격이 올랐거나 내린 정도, 시가는 당일 중에 처음 형성된 가격, 최고가는 당일 중에 체결되었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최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을 각각 나타냅니다. 장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최근 60일간 또는 52주의 최고, 최저 가격(종가 기준)을 게재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거래량: 당일 중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매도 100주, 매입 100주인 경우 거래량은 100주로서 한쪽만 계산합니다. 거래량은 주식시장의 판단지표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개별 주식간의 거래량을 비교할 때는 액면가가 1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다양하므로 비교하는 주식들의 액면가가 얼마인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가수익비율(PER : price earnings ratio):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이익(EPS : earnings per share)으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파악하여 수익성보다도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낮게 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주당순이익은 1주당 세후 순이익을 말합니다. 순이익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같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기업의 주당순이익 증가는 향후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 9. 22일 기준)

종목명 (코드번호)	종가	등락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PER	최근 60일	
								최고	최저
동원 003580	12450	▲ 150	6406	12350	12750	12350	10.0	14300	7710
동원산업 006040	10550	▽ 150	5890	10700	10950	10550	2.3	11900	7660
동원수산 030720	8150	▽ 50	18609	8210	8340	8100		9950	7385
사조산업 007160	5760	0	10679	5730	5850	5710		8090	3490
신라교역 004970 C	3040	▽ 70	107413	3110	3270	3030	78.0	4150	1550

의 판단 또한 다양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부요인은 기업의 장래 수익성입니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산업인가 정체산업인가는 장래 수익성을 예상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부요인으로는 경기, 금리, 환율, 물가, 국제원자재 가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정치상황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지난 2003년 3월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것은 당시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 위협이라는 불안한 국내외 정세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이란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자금공급자로부터 직접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일종입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 증서를 소유한 사람에게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서 차용증과 같습니다. 채권에는 빌린 자금을 갚는 시기, 즉 만기와 만기가 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금리), 만기일에 지급되는 금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표면이자(coupon rate), 만기일에 지급될 금액은 액면가(face valu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이며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고 1년 단위로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의 소유자에게 매년 1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산 사람이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팔수도 있습니다.

채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증서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신용카드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예금보험공사·토지공사·한국전력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에 대한 제3자의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회사채, 은행대출채권, 카드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금융이 발달하면서 채권의 종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과 채권의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어떤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100만 주를 발행하였다면 주식 1주당 그 회사 이익 중 100만 분의 1의 지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산 시 부채를 뺀 잔여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가집니다. 즉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지분만큼 그 기업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그 기업에 대한 채권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낼 경우 주주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이자만을 받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채권 보유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지만 주식 보유자는 회사에 돈이 남지 않아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 부담이 더 크며 자산자체의 가격의 변동이 심합니다.

주식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발행해 준 증서



| 좀 더 알아보기 |

파생금융상품시장이란?

투자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분산하여 보유함으로써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의 다양화만으로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시켜야 위험이 줄어드는지 알아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입니다.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은 채권, 주식, 외환 등 기초가 되는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이란 말이 붙은 것인데,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에는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이 있습니다.

먼저 **선물**은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미리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3개월 후에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받을 계획인데 환율이 변동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과 1달러당 1,400원인 현재 환율에 팔기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주식 채권 환율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말한 선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스왑은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스왑은 교환하는 대상에 따라 통화 스왑과 금리스왑으로 다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읽 | 을 | 거 | 리 |

기후도 선물시장에서 거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도쿄와 오사카의 여름, 겨울 날씨를 기준으로 한 신종 기후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을 도입할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CME가 아시아 기후파생상품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현재 CME에서는 10개 미국 도시와 5개 유럽 도시의 기후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일본 기후파생상품은 선물과 옵션 두 가지 형태로 거래될 계획이다. CME는 세계 기후파생상품 시장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신상품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3월 말 기준 세계 기후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46억 달러를 나타냈다.

✦ 자료 : 이데일리, 2004년 7월 13일

3. 금융기관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금융기관의 개념과 역할

금융기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중개기관

금융기관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만기와 금액의 금융상품으로 변환시키고 채무불이행 및 가격변동 위험을 축소시켜줌으로써 시장참가자의 후생을 늘려줍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돈의 활발한 유통을 통한 경제활동의 촉진이라는 금융시장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제도를 실행하여 금융기관과 고객,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고객과 고객 간의 금융거래를 종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오랜 역사를 통해 그때그때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발전과정에서 금융기관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 집니다.

은행

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합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대출 재원이거나 채산성의 제약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으로 대부분 정부계 은행입니다. 특수은행에는 중요 산업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농업·축산업과 수산업 금융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도 특수은행에 포함됩니다.

한편 은행은 별도로 분리된 신탁계정을 두어 고객에게 금전과 재산을 신탁 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 모두와 12개 외국은행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예금이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한 장·단기 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합니다. 자산운용회사(구 투자신탁회사)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은 지역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업무에 전문화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 단위의 신용협동조합,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협 단위조합의 농어민을 위한 상호금융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 금융으로서 농어촌과 도시의 소액 가계저축 예금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 증권회사 · 기타 금융기관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 금융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범주에 들지 않지만 금융거래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겸업화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은행업 · 보험업 · 증권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금융산업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객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간 인수 ·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겸업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방화와

국제화가 가속화되었고 국제수준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상품개발·마케팅과 같은 업무제휴의 확대, 우리금융 신한금융 등과 같은 지주회사의 탄생,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키슈랑스**(bancassurance)의 시행, 해외 금융자본과 국내 우량은행간의 포괄적·전략적 제휴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키슈랑스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로 은행 청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뜻.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서비스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금융시장은 자율적인 시장규율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일반 상품시장에 비하여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우선 수많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은행과 거래하던 수많은 기업들도 연쇄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됨은 물론 그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로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서로 유사한 금융감독체계를 제도적으로 정하여 금융시장을 늘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통합 금융감독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금융관계법령의 제·개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제한적으로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 확립, 공정한 금융시장의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중개자인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금융 소비자는 금융시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되므로 부실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조속히 정리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www.fsc.go.kr



금융감독원
www.fss.or.kr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지급결제제도란?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지급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매달 금융기관의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 화요금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는 수표, 어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저장·분석하여 장거리 간 자금이체를 신속하게 해 주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 는 이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장치로서 지급수단,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 청산·결제기관, 전산시스템 그리고 업무처리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주고받을 자금의 흐름을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운용 계획을 세워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지급결제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 내에 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거래은행을 통하여 현금화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시기도 불확실하다면 생산 투자 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경제의 각 부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실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 현금, 수표 등과 같은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지급수단, 금융기관청산 결제기관 전산시스템 그리고 업무 규정등으로 구성



또한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시장규율에 따르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기업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금융시장의 동향과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개인,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채권·채무 관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결제를 완결시켜 주는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www.mofe.go.kr



4.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

신용이란 무엇인가?

개인 신용불량자가 2004년 말 기준으로 36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1/10 정도가 신용불량자인 셈입니다. 가계 부채의 증가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 사회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용**이란 돈을 빌려 쓰고

신용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림 11-1 개인 신용 불량자 추이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이 좋다는 것은 곧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항상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이 좋은지 여부를 따져보고 빌려줍니다. 신용은 개인이나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는 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의 신용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이들 회사는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 채무증서별로 신용도를 조사해서 상환능력이 높은 순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은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계 각국은 서로 수출입 또는 금융 거래를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자주 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는 돈을 빌리

신용(평가)등급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상환 능력의 정도를 기호로 표시한 것

려는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용 평가회사가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면 그 나라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차입 금리가 높아짐은 물론 심지어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기업어음과 채권의 신용평가등급 체계

신용평가 기준은 평가회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상 기업의 사업성, 수익성, 현금 흐름, 재무적 안정성, 경영관리 등을 기초로 사업전망과 추정 재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합니다. 아울러 환경요소로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상황, 개별 채무증서의 발행조건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용평가등급에 반영합니다.

신용평가등급 체계는 기업어음과 채권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1에서 A3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 등급입니다. 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 등급이며 D는 상환불능 상태입니다. A2에서 B까지는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합니다.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은 AAA부터 D까지의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AAA에서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 등급으로,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 등급으로 각각 분류되며 D는 상환불능 상태를 나타냅니다. AA에서 BB까지는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체계

	기업어음	채권
투자 등급	A1	AAA
	A2	AA
	A3	A BBB
투기 등급	B	BB
	C	B CCC
		CC C
상환 불능	D	D



오르면 돈을 빌리기가 좀더 수월해 집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 즉 외채가 2004년 9월 말 기준 1,700억 달러 정도이므로 만약 국가 신용이 하락하여 금리가 1.0%포인트 오른다면 연간 17억 달러를 이자로 더 지불해야 됩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은 외채규모, 외환보유고, 재정상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그 나라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안보와 정치상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기업의 대외거래 규모가 커지고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외화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 모두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신용평가회사로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등이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회사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와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피치 IBCA(Fitch International Bank Credit Analysis)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

현대사회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신용사회일 것입니다. 신용사회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용이 있으면 돈을 빌려 물건을 사거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을 매개로 하여 더 많은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신용을 이용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신용카드가 그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신용거래를 이용하려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통해 당장 물질적·금전적 혜택을 누릴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금융기관에 수수료나 연회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료와 같은 벌칙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용도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매겨지고 관리됩니다.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각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내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금액, 보증제공 내역,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서비스 이용실적, 금융거래대금 연체 사실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조회하여 거래 신청의 승인 여부와 함께 이자율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거래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며 신용이 양호한 사람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체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를 보면 개인의 신용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한도를 설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거래 대금을 제때 지불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사용요금,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결제 계좌 잔고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본의 아니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전국은행연합회, 개인신용조회업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도 채무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잘 고려하여 제공하되 만일의 경우에 자신이 대신 갚을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 좀 더 알아보기 |

연체자에 대한 불이익

금융거래에서의 불이익

-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예 : 대출거절, 높은 이자율 적용 등).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 신용카드 발급 시 제약을 받게 된다.
- 연대보증인 자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

- 취직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이동전화 가입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각종 생활용품의 신용 할부구매 시 제약을 받게 된다.

열두째 마당

12

재산 늘리기

- 1. 노후대책은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장기 생활설계의 필요성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재산 늘리기를 위한 기본 준비
- 2. 부자는 예금만 할까?
수익이 적으나 안전한 예금
고수익 고위험인 증권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또 하나의 투자상품, 부동산
- 3. 재산은 어떻게 늘릴까?
목적을 먼저 생각한 뒤 선택하라
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하라
돈 벌리기를 현명하게 활용하라

재산 늘리기 실천계획



열두째 마당 _ 재산 늘리기



1. 노후대책은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장기 생활설계의 필요성

장기 생활설계는 인생 향로의 항해계획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지까지의 항해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후 출발한다면 암초를 피해 조수와 풍향에 따라 진로를 조정하고, 예기치 않은 악천후에도 적절히 대응하면서 순조롭게 항해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 생활설계는 우리의 경제생활을 '현재는 윤택하며 장래는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정된 수입을 현재와 장래의 생활에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의 생활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생활설계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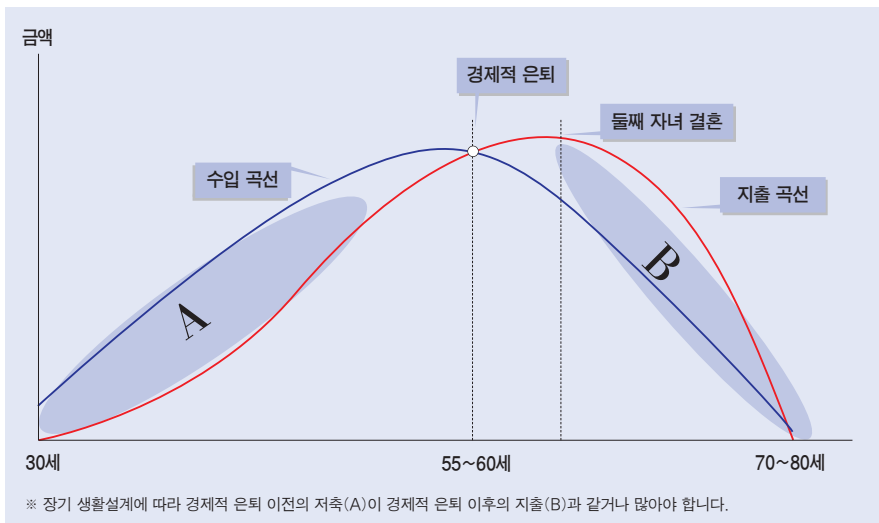
장래를 대비한다고 해서 쓰고 남은 돈을 맹목적으로 저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정도의 돈을 쓰기 위해 얼마를 저축하고 또는

빌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이자나 다른 수익을 통하여 스스로 불어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 예금만 하더라도 상품별로 이자가 천차만별입니다. 저축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갖추고 금융상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누구라도 장래를 적절히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년이 되면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고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나면 노년의 생활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기본 생활비 외에도 몇 차례 상당한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한 사람의 생애 동안 크게 소요되는 목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본인의 결혼자금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일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혼의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한 전세자금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마련을 위한 목돈이 필요합니다. 주택가격과 전세금의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결혼 후 가급적 빠른 시일

그림 12-1 장기 생활설계



내에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고 난 뒤에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교육을 위한 생활 설계를 적절히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비용은 그들 자신이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얻어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모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2002년 기준 77.0세(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서 지난 30년 사이에 14세 정도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83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은퇴 이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할 필요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뜻하지 않게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가족 중 누군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과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저축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남겨놓은 부분을 말합니다. 가정경제의 입장에서 이러한 저축은 예금, 적금, 증권 등 각종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저축한 돈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말은 돈을 수익성 있는 자산에 운용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집에 현금으로 보관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축한 돈을 미래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는 넓게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금융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위를 좁혀 자산가



경제관련 책이나 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저축과 투자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여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금융거래에서 말하는 저축과 투자는 실물거래에서 말하는 그것과 다소 구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 쓰고 남은 부분을 말합니다. 저축은 금융을 통하여 기업에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어 미래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거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저축액은 국내 투자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결국 각 경제주체의 저축을 합하면 국가경제 전체의 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축한 돈을 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실의 금융거래에서는 저축을 예금과 투자라는 말로 구분하여 이자수익만을 기대하고 돈을 금융기관에 운용하는 것을 예금으로, 자산 자체의 가치 상승과 그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수익(배당금, 임대료 등)을 기대하고 돈을 운용하는 것을 투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이 장에서는 투자를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글을 전개하였습니다.

치가 변동할 수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 즉 금융상품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출발하더라도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운용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산 늘리기는 소득 중 얼마를 저축하는가와 저축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과 위험, 금융상품의 종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입니다.

금융거래에서 투자와 투기는 명확한 한계로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가 자산 고유의 수익 이외에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정상적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기는 우연히 단기간에 생기는 가격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는 주식투기와 부동산투기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투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려는 생각보다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시에 많은 돈을 벌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해치게 됩니다.

재산 늘리기를 위한 기본 준비

기본적으로 재산 늘리기를 위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은 반면 이자율이 높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원금 손실의 위험도 함께 높아 지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 '위험이 크면 수익이 높다(high risk, high return)' 는 기본 원리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주식을 샀다가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을 잃게 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수익의 자산이 항상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핏 보아 주식이 예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에 따르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높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기 상황, 투자하려는 회사의 영업실적과 향후 성장 가능성, 경영자의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한다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낮추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처럼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분산하여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은 줄이면서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안전성과 수익성 이외에 환금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재산은 어떻게 늘릴까?' 에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 좀 더 알아보기 |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portfolio)는 원래 간단한 서류가방이나 자료수집철을 뜻하는 말로 금융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목록을 뜻합니다. 주식에 투자한 경우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산 주식 목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진 돈을 한 종목에 모두 투자한 경우 그 종목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되면 한 종목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이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른다면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주식뿐만 아니라 예금, 채권, 부동산 등 여러 가지의 다른 자산으로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을 경우 사고가 생기면 계란이 모두 깨질 수 있으니 여러 곳에 나누어 담으라는 격언입니다. 즉 금융자산을 적절히 분산·보유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2. 부자는 예금만 할까?

금융기관은 고객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고객들은 여러 금융상품 중 자신의 조건에 알맞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크게 예금, 증권 그리고 보험상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금상품은 대부분 예금하는 기간 동안 확정된 이자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이자 외의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이자를 못 받을 위험 또한 거의 없습니다. 좀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을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이 적으나 안전한 예금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합니다.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지불해야 하는 예금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언제 찾아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기업에

장기간 대출해 준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곤란해 낮은 이자를 주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든 손쉽게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있는 장점을 취하는 대신 높은 이자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요구불예금**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에는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통예금,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당좌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저축성예금**은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저축성예금은 돈을 불리는 목적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입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애초에 받기로 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입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금은 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금융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목돈을 굴리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금리를 미리 정하여 목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맡기는 예금입니다. 보통 만기는 1개월, 6개월, 1년, 3년 등으로 다양하게 있으며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에 예금을 찾을 경우 가입 시 정했던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기예금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축성예금 중에는 내 집 마련에 요긴한 상품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 상품은 보통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장기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예금 이외에 목돈을 굴리는 데 적합한 금융상품으로는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기업어음 등이 있습니다.



| 좀 더 알아보기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였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을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 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5개 금융기관입니다. 보호대상 예금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예금' 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이들 금융기관이 취급한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예금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도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수익 고위험인 증권

위에서 살펴본 예금상품은 대부분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위험이 낮은 반면 정해진 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좀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증권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권상품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있으며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직접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원금 손실의 위험도 높고 자칫 자신의 주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간접투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는 돈을 믿고 맡긴다고 해서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신탁상품의 수익은 예금이자보다 높을 수 있으나 자산 운용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으며 이 때 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운용회사 등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탁상품은 크게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그리고 금전신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익증권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

수익증권은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에 돈을 맡겨 그 돈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흔히 ○○펀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익증권인데 펀드는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의 미합입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채권에 주로 돈을 운용하면 채권형 수익증권이라 하고, 주식에 주로 운용하면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채권과 주식에 혼합하여 운용하는 혼합형 수익증권도 있습니다. MMF(money market fund)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어 환금성이 좋은 데다 일정한 수준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인기가 높은 수익증권입니다. MMF는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줍니다.

한편 최근에는 수익증권의 투자대상이 금융상품뿐 아니라 실물자산으로

도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형 수익증권과 선박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실물간접투자형 수익증권 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즉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후 투자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유사합니다. 다만 뮤추얼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마다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발행으로 모은 돈을 채권형은 채권에, 주식형은 주식에 주로 운용하여 번 돈을 배당하게 됩니다. 일정기간 환매가 금지되는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주식시장에서 서류상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은행이 일반 예금과 분리된 신탁계정에서 고객에게 팔고 있는 신탁상품입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처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돈을 맡긴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예금이자보다는 좀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일반 예금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신탁상품을 실적배당상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보험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의 분담금을 모아서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여 불행에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에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질병, 사고, 장애, 사망 등으로 개인이 소득상실 위험에 처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며,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 사고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소득수준과 금융상품에 대한 자신의 성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뮤추얼펀드

고객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모은 돈으로 채권, 주식 등에 운용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투자회사

금전신탁

은행이 고객에게서 돈을 신탁 받아 이를 채권, 주식 등에 운용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상품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에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일단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에는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다른 가입자에 대한 지급 보험금으로 이미 사용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투자상품, 부동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부동산이라 부릅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은 해당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

수익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얻는 자본이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 금액이 소요되고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동산과 금융을 접목하는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 trusts)와 부동산간접투자형 수익증권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은 운용 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은 거액이 소요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소액으로 증권화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다수의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3. 재산은 어떻게 늘릴까?

금융상품은 취급기관도 많고,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데다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어 어떤 금융기관의 어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재산 늘리기의 첫 걸음인 금융상품 선택의 다섯 가지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먼저 생각한 뒤 선택하라

금융상품의 선택기준은 목적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모은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인지, 돈을 모은다면 왜 모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융상품에는 주택마련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목적에 따라 특화되어 개발된 장기 저축상품이 있고 가계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영하는 데 적합한 상품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 상품도 있습니다.

우선 목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주택마련자금을 모으려면 주택청약부금 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적금을 열심히 부어서 마련한 목돈을 좀더 불리고 싶다면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언제 필요할 것인지를 예측한 다음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금리만 보고 무조건 장기 금융상품에 돈을 맡겼다가 급한 사정 등으로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거나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자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자금 지출계획과 저축기간을 일치시키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장기 저축자금과 단기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기간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을 그냥 놓아두면 만기 후에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자가 적용되거나 이자가 전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돈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 후 적절히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안전성은 어떤 금융상품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원금과 이자를 보전하는 데 위험이 따릅니다. 금융거래 위험에는 거래 금융기관 또는 증권 발행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금융상품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정할 때는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지 또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식이나 회사채를 사는 경우에도 최소한 원금을 지켜 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따져 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은 확정금리형 상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일수록 위험도 크므로 여유자금을 특정 금융상



품에 집중시키지 말고 안전성이 다른 몇몇 상품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성은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주식의 경우 향후 주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와 주식발행회사가 결산 후 지급하는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가격의 상승과 정해진 기일에 매번 이자 수입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비교해 보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높은 것은 위험이 높든지 환금성이 떨어지든지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각 금융기관이 수익률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표면금리 이외에 이자지급 방법, 확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여부, 세금우대 여부 등 수익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수익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반영한 다음의 세후 실효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금성 또는 **유동성**이란 돈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보유 자산을 별다른 손해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만기가 장기인 적금이나 예금 등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므로 환금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손쉽게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환금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환금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수익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한 단기 대기성 자금이나 일상의 생활자금에 한해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금성, 유동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떤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하라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세후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실효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
입니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자
소득세 14%에 대한 10%)를 포함하여 전체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또는 감세 금융상품은 일반 서민들이 장기적이
고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
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기
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
세대상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모든 소득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한 금액을 다시 공제해
주는 것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도 선택대
상으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금액 또는 그것의
일정 비율 한도 이내에서 세금 절약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세액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며,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공제액만큼 세
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돈 빌리기를 현명하게 활용하라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빚을 얻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
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데 모아 놓은 돈으로 부족하다면 빌려서 충당하
고 나중에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기 생활설계에 따라 돈을 모으려
라도 목표했던 금액보다 돈이 덜 모아졌다든지 당초 예상보다 지출금액이
많아진다든지 하여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빌리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돈
을 빌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와 같이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 생기면 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꾸
준히 돈을 모아 빚 없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는 어느 정도의 중자돈이 모이면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상승은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불리하나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비용을 줄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골라서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현명한 대출상품 선택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는 데까지만 빌리고 또한 이자와 원금은 약속한 대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아 연체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새로운 대출을 받기 곤란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독촉 받게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소득으로 정해진 시기에 대출 이자를 지급하면서 장래에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을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방법에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과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입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대출 만기도 무

작정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금계획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상품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으며 중간에 돈이 생겨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출상품의 이자율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 별로 대출상품을 꼼꼼히 비교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자가



낮은 기관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단골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예금·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가의 채테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금융기관을 주거래 기관으로 정해 놓고 수시로 재산 증식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상품의 성격, 수익률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각 금융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산 늘리기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는 개인의 상품가치를 높여 더 많은 급여를 보장하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남보다 오래 경제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보다 더 확실한 노후대책은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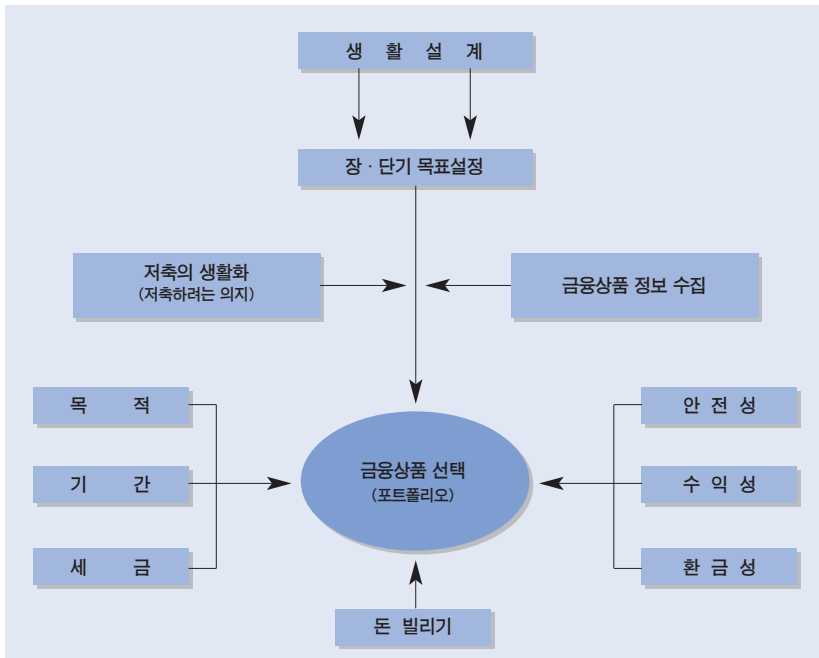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한국은행
www.bok.or.kr



그림 12-2 금융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재산 늘리기 실천계획

앞에서 재산 늘리기를 위한 장기 생활설계,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 선택 요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재산 늘리기 실천계획을 마련해 봅시다.

〈자신의 현 위치 파악하기〉

재산 늘리기 계획을 마련할 때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상세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단계로 자신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자신의 현재 부(富)를 나타냅니다.

$$\text{자산} - \text{부채} = \text{순자산}$$



자산은 가치가 올라가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 및 실물자산을 뜻합니다. 예금, 채권, 주식, 개인연금 저축액, 주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TV 등은 수익이 나거나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금, 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등 갚아야 할 빚을 말합니다.

(원)

나의 대차대조표	
자 산	금 액
예금	10,000,000
주식, 채권 및 기타 자산	5,000,000
개인연금 저축액	5,000,000
주택(시가 기준)	300,000,000
자산 합계	320,000,000
부 채	금 액
주택담보대출	50,000,000
신용카드 할부금	1,000,000
자동차 할부금	10,000,000
기타 부채	6,000,000
부채 합계	67,000,000
순자산(자산 - 부채)	253,000,000



〈재산 늘리기 목표 정하기〉

앞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 즉 순자산(富)의 규모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상환, 자녀의 대학 등록금, 은퇴 후 생활자금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장·단기로 나누어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 단기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습니다 :

1. 1년 동안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볼 수 있다.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습니다 :

1. 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상환지급 ₩50,000,000을 모은다.

2. 10년 동안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50,000,000을 모은다.

3. 25년 동안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200,000,000을 모은다.

4. _____

5. _____

장·단기 재산 증식 계획은 자신의 현재 순자산, 가구 소득, 가장의 나이, 자녀 수 그리고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는 젊어서부터 할 필요가 있는데 대략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대수명을 감안하여 산출한 총생활비에서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등을 빼면 앞으로 추가로 모아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노후 생활자금 계산 사례를 보면, 현재 나이가 35세이고 25년 후인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족한 노후 자금은 약 2억 5,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금액이 25년 뒤의 금액이 아니라 **현재가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물가상승(연 3.0% 가정)을 감안하여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약 5억 3,6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자의 현재 순자산 규모에 따라 추가로 모아야 할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다음 주인공의 예처럼 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주택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이 노후자금 전액을 지금부터 모아야 할 것입니다.

노후 생활자금 계산(사례)

- 현재 연령 (동갑내기 부부) : 35세
- 은퇴 예상 시기 : 60세(25년후)
- 은퇴 후 부부 공동생활 : 20년
- 남편 사후 배우자 단독 생활 : 7년
- 은퇴 후 예상 원평균 생활비 : 월 200만원 (현재가치, 공동생활 기간)
월 150만원 (현재가치, 배우자 단독생활 기간)
- 은퇴 시점에서 본 총노후자금(A) : 6억 600만 원
(=200만 원×240개월(20년)+150만 원×84개월(7년))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B) : 3억 5,000만 원
- 부족한 노후 자금 (A-B) : 2억 5,600만 원 (현재가치)

미래가치 환산 : 5억 3,600만 원 (물가상승률 연 3%, 25년 후)

매년 물가가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상 물가상승률을 연 3%로 잡아 현재 2억 5,600만 원의 가치와 동일한 25년후의 가치를 계산한다면 약 5억 3,600만 원이 됩니다.

*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열한째 마당 '금융과 신용'에 있습니다.

〈월별 지출 및 저축계획 세우기〉

앞에서 장·단기 재산 늘리기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과 매월 저축할 목표 금액을 정한 월 예산표를 작성합니다. 현재의 월별 수지로는 월 목표 금액을 저축할 수 없는 경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원)

나의 1월 예산			
	현재수입	변경수입	새로운 수입계획
급여	3,000,000		3,000,000
투자수익			
이자수익			
수입 합계	3,000,000		3,000,000
	현재지출	변경지출	새로운 지출계획
아파트 관리비	300,000		300,000
주택담보대출이자	500,000		500,000
전차료(통신료)	200,000	△ 100,000	100,000
기타	1,500,000	△ 400,000	1,100,000
지출 합계	2,500,000	△ 500,000	2,000,000
월별 수지	500,000		1,000,000
저축 가능 금액	500,000		1,000,000

〈금융상품 현황표 작성〉

금융상품은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적절히 분산하여 가입 하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무엇 때문에 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지 명확한 목적 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예금, 투자 금액, 수익률 등을 언제든지 손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의 내역을 체계적 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

나의 금융자산 현황				
	월 저축액	잔액 / 투자금액	이자율 / 수익률	만기 / 예년금액
예 금				
1. 정기예금	300,000	1,000,000	5.0%	3년(0 0원)
2. 정기적금	400,000	2,000,000	5.5%	10년(0 0원)
간접투자자산				
1. 수익증권	—	5,000,000	6.0%	1년(0 0원)
2. 뮤추얼펀드				
3. 공전신탁				
4. 적립식 상품	400,000	8,000,000	6.5%	5년(0 0원)
채 권				
1. 회사채				
2. 국공채				
주 식				
1. 삼성전자				
2. LG화학				
기타 금융상품				
1.				
2.				
노후 대비 자금				
1. 개인연금				
2. 회사 퇴직금				
합 계				

지금까지 살펴본 재산 늘리기 실천계획을 상황 변화에 맞추어 수시로 수정하고 무엇 보다 계획대로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생활화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셋째 마당

13

국제수지와 환율

- 1. 왜 국가 간에 거래가 일어날까?
무역의 이익 -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 2.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나 바람직할까?
국제수지표는 외국과의 거래장부
경상수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3.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 4. 환율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는 개선, 물가는 상승
환율정책은 왜 중요한가?
외환보유액의 역할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열셋째 마당 _ 국제수지와 환율

1. 왜 국가 간에 거래가 일어날까?

무역의 이익 -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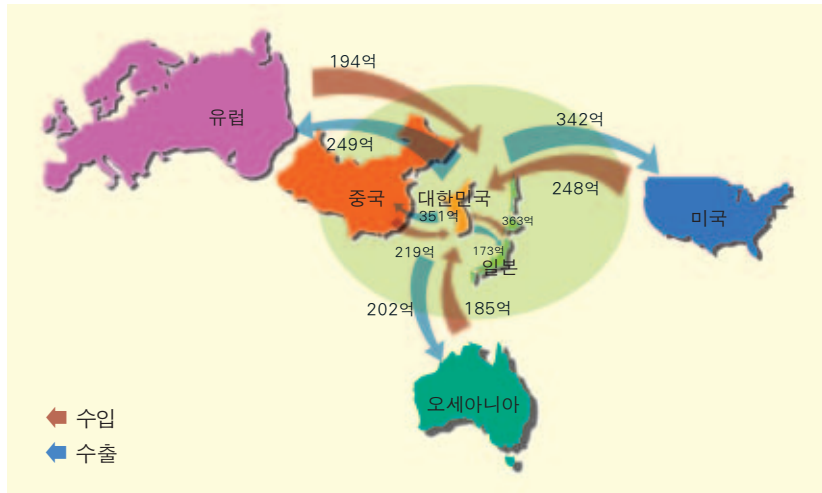
오늘날 세계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의 무역규모 역시 계속하여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이 2003년 3,726억 달러로 명목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수출입 의존도**가 76%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의존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국내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아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출입의존도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그림13-1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교역규모 (2003년 기준)

(달러)



우리나라의 생산품이 해외에서 인정받아 많이 팔리는 동시에 외국상품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무역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개인이 필요한 물건을 모두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듯이 국가 간에도 전문화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문을 열고 외국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자원을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서도 외국과 무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역은 단순히 부존자원의 유무 또는 부존자원의 양적 차이 때문에 발생할까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자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외국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국내 경제에서 ‘깎’이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는 ‘을’과 교환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국가 간에도 개인의 경우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할 경우 미국이 밀가루를 생산하는 데 한국보다 적은 양의 노동이 들어간다면,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미국 농부 한 사람이 한국 농부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밀가루를 생산한다면 미국이 밀가루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한국이 휴대폰 생산에서 미국보다 적은 양의 노동을 사용한다면 한국이 휴대폰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제품 모두 미국이 절대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 간에 무역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각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의 생산에 전문화하여 교역을 하면 두 나라는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비해 오렌지와 사과를 모두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어 두 가지 상품 모두에 대해 절대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무역은 일어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분업은 비교우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국제적으로도 자유무역을 추진하면 비교우위가 적용하여 국제분업이 이루어짐

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한 숫자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오렌지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사과 1단위 생산을 위해 4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며, 한국은 오렌지와 사과 한 단위 생산에 각각 8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미국은 한국의 4분의 1 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고 사과는 한국의 2분의 1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렌지와 사과를 모두 한국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과보다 오렌지를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우위라고 합니다. 위의 예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오렌지 생산에, 한국은 사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 생산을 특화하여 무역하면 양국의 소비자가 두 가지 상품을 더 싸게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은 대체로 절대우위에 근거한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세계 무역량에서 선·후진국 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역이 전세계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교우위 원리가 현실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면 왜 선진국에서조차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에 자유무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미국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자국의 이익에 맞추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무역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비교우위에 따른 전문화를 통해 거래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완전한 자유무역은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비교우위가 없는 자국산업을 외국산업에 경쟁력을 갖출

관세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쌀 농업에서 보호주의가 강력히 주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농업이 비교우위가 없다고 해서 쌀을 모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내 쌀농사를 전면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보호무역을 위한 정책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줄이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관세입니다. 관세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일찍이 사용되어 온 보호무역 정책수단입니다. 그러나 1948년 이후 GATT체제 아래의 **다자간 무역협상**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정책에서 관세의 중요성이 점차 쇠퇴하여 왔습니다. 관세의 중요성이 점차 약해지면서 최근에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수단으로는 수량할당(쿼터),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수량규제와 수출보조금을 비롯한 가격규제가 있습니다. 이외에 행정절차 등으로 무역을 규제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방출량이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들 간에 행하여지는 GATT의 무역협상(예 : 우루과이라운드)을 말하나 현재는 WTO 체제하의 도하개발아젠다를 말함

비관세 무역장벽

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을 말하며 크게 수량규제와 가격규제로 나뉨



2.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나 바람직할까?

국제수지표는 외국과의 거래 장부

일반 가계는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위해 가계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 비용, 이익금이나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등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여 경영성과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국가의 경우 역시 나라경제의 살림살이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국민계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것을 기록한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세계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경제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외국과의 거래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임금 및 투자소득과 같

국제수지표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수취와 지급내역을 기록한 표를 말함. 국제수지는 실물거래 결과를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돈 거래를 기록하는 자본수지로 이루어짐



은 실물거래 결과를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비단 실물거래뿐 아니라 외국에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얻어 오는 등 돈 거래도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본수지라고 합니다.

언론이나 일반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수지는 나라경제의 기초가 되는 실물부문의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서 국민소득, 생산, 고용 등 나라경제 전체의 거시지표들과 관련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흔히 국제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흑자, 국제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말합니다.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알기 쉬운 국제수지표 해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누고,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그리고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수지는 외국과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을 기록합니다. 배당, 이자, 금료 및 임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상이전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 차이입니다. 즉 해외송금,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구호물자, 정부 간의 무상 원조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본수지는 각 경제주체들이 돈을 외국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외국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외화의 유출입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 (2003)

	차변(credit)	대변(debits)	수지(balance)
경 상 수 지	2,453	2,333	119
상품수지	1,973	1,753	220
서비스수지	330	404	-74
소득수지	72	68	3
경상이전수지	79	108	-29
자 본 수 지	275	136	139
투자수지	274	121	153
기타자본수지	1	15	-14
준비자산증(-)감	-	-	-258

경상수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나라의 경상수지는 그 나라 경제의 건강상태를 잘 나타내줍니다. 경상수지의 변동이 경제 운영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을 통한 해외수요 증가가 국내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외화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므로 가계의 경우처럼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다소간의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경상수지의 흑자가 계속되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결과이므로 총수요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외화자산이 늘어나거나 외채상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해외투자나 외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는 결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화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통화량 증가와 경기과열을 가져와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이 밖에도 국제간의 거래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적자가 발생하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게 되어 결국은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외국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 돈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국내에서 만든 물건보다 외국 기업이 만든 물건을 더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내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경기는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3.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지금은 한 나라가 문을 닫고 자급자족하며 살 수 없는 개방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원유나 공산품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을까요? '원화의 국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면 상대국의 수출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하여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국제통화는 몇 안 됩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정도이며 아직 우리나라 원화는 외국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통화는 약 30개 내외입니다.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 돈 사이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품질의 물건 값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같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 봅시다. 햄버거 한 개 가격이 미국에서는 2달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우리나라 돈과 달러화 사이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습니다. 여기서 환율을 1,000원/달러(1달러당 1,000원)로 표시한 것은 국제 금융거래에 있어 기축통화인 미국

환율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 돈 사이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됨

www.kfxtr.com		미국 달러당 원화 PER USD	일본 엔당 원화 PER 100YEN	기타 통화	현금보내출대 PER 100USD	수출보내출대 PER 100USD
환율	현금	102360	978.12	유로화 EUR	136183	134861
	수출	98840	94448	홍콩 달러 HKD	812762	888888
	수입	101807	97097	캐나다 달러 CAD	83179	82372
	수출입	79495	95147	호주 달러 AUD	87260	80471
수출	보내출대	99620	95188	중국 달러 CNY	197354	195439
	보내출대	101580	97072	인도 달러 INR	873154	813026
수출입	수출	99620	95188	뉴질랜드 달러 NZD	874755	874029
	수입	101580	97072	스위스 프랑 CHF	88480	87621
		888888	888888	태국 바트 THB	882787	882656

▶ 시중은행에 고시된 환율 전광판 모습 (사진 출처 : 외환은행)

달러화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외국통화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자국 통화의 단위수를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자국통화표시법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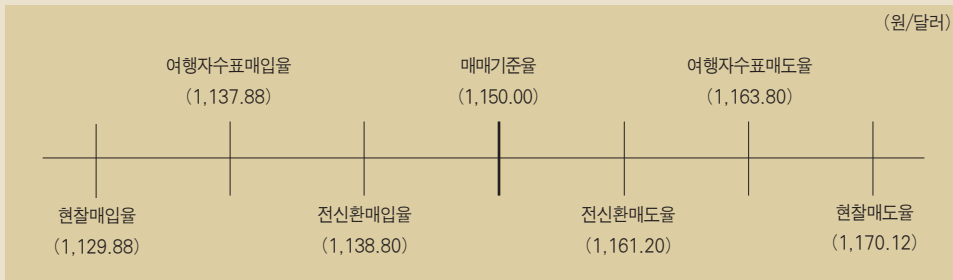
우리나라 환율은 이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는데 달러당 원화금액이 커지는 경우 원화환율이 상승하고 원화가치는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국통화표시법에 의한 환율은 그 나라 돈의 대외가치와 반비례합니



| 읽 | 을 | 거 | 리 |

외국환 은행이 고시한 환율의 예시

외국환 은행이 고시한 환율의 예시 (2004년 4월 6일 기준)



다.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에서 1,150원으로 변동한 경우 원화 환율은 상승하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달러화에 대하여 하락한 셈입니다. 환율은 '0.001달러/원' 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외국통화표시법' 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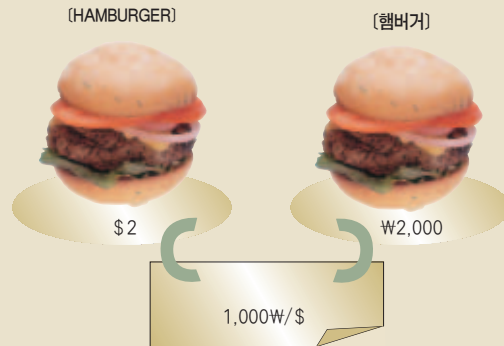
|임|을|거|리|

햄버거지수(빅맥지수)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분기마다 1번씩 발표하는 환율로서 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 제품인 빅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빅맥은 품질, 크기, 재료 등이 표준화되어 있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거의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빅맥 가격을 비교하면 각국의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의한 환율은 각국 통화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구매력평가설***과 동일한 제품의 가격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할 때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한 산출방식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와 미국 햄버거의 가격을 비교해 각국의 적정환율을 산정하는데, 2004년 4월 발표한 빅맥지수에 따르면 한국 원화의 적정환율은 1달러당 1,235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논상으로 보면 빅맥지수를 통해 시장환율과 적정환율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구매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데다 한 상품만으로 구매력을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 빅맥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미로 참고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 한 나라의 화폐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환율결정이론

매매기준율

외국환증개회사를 통해 거래된 미 달러화의 현물환 거래량과 거래환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시장평균환율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환율의 종류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은행에 가면 객장에 환율고시 전광판이 있는데 먼저 **매매기준율**이 눈에 보입니다. 매매기준율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외화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로서 외환시장의 평균 환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증개회사를 통해 거래된 미 달러화의 현물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이 매매기준율에 은행들은 거래대상 외환에 따라 약간의 스프레드를 가감하여 전신환 매도·매입률, 여행자수표 매도·매입률, 현찰 매도·매입률 등을 고시합니다. 스프레드는 현찰환율, 여행자수표환율, 전신환환율 순으로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려고 우리 돈을 외화로 바꿀 때 현찰과 여행자수표(T/C)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찰매도율보다 여행자수표매도율이 낮기 때문에 **여행자수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행자수표는 분실한 경우에도 일정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성 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환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용한 날짜와 결제 날짜가 차이가 있으므로 더 나은 환율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송금할 경우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은 전신환매매율입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환율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식품이나 TV와 같은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듯이, 돈의 대외 가치인 환율은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외환이란 외국화의 화폐나 외국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외화표시 예금, 수표 등으로서 **외환** 시장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환시장에는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고자 할 때, 국내 소비자가 해외여행이나 자녀의 유학자금을 송금하고자 할 때 또는 국내투자자들

이 외국주식이나 외국채권을 사고자 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삽니다.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나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바뀐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달러를 사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외환 수요와 달러를 팔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외환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그때그때의 시장 환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은 고객을 대신해서 거래할 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팔 듯 외환 자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율제도는 나라마다 그 결정방식이 다른데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누어집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고정환율제도로 출발하여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계속 변천해 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변동 폭에 제한이 없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변동환율제도
정부가 환율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외환시장 규모의 비교

오늘날의 외환시장은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파리, 홍콩 등 10여 개의 주요 외환시장이 있습니다.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거래액은 2004년 4월 기준으로 1조 8,8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입 결제 목적의 거래는 전체 거래 금액의 5% 이내에 불과합니다.

2004년 4월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200억 달러 수준으로 연간 경상GDP 대비 3.3%, 무역규모 대비 5.4%로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규모는 멕시코, 대만 등 주요 신흥시장국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보다도 크지만 세계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은 아직 0.8% 정도로 세계 15위 수준입니다. 참고로 영국이 31.3%를 차지하고 미국은 19.2%, 일본이 8.3%, 싱가포르가 5.2%, 독일이 4.9%, 홍콩이 4.2%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개국의 거래비중이 전체의 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선물환시장과 NDF시장

경제개방화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환율의 변동이 외환거래 참가자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외국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예상외의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자금의 차입과 대출이 주된 업무인 금융기관이나 외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인보다 환율변동으로부터 예상외의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다. 선물환(forward exchange)은 가장 전통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에 특정통화를 일정환율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다. 1970년대 세계적으로 각국이 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한 이후 환율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자 개인이나 일반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차액결제 선물환*** (NDF: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차액결제 선물환이란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간의 차액만큼만 거래당사자간에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NDF거래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에 비해 결제위험이 작고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용어가 다소 낯설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김장배추의 가격은 작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데 배추재배농가의 수입도 따라서 기복이 심하게 된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수입보다 적절한 수준의 평균 수입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면에 야채 중매인 중에는 그 해 배추작황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리 배추를 사 두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때 농가와 중매인 사이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이 성립되면 소위 발매기 계약이 체결된다. 물론 타 지역의 작황이 예상보다 나쁠 경우 중매인은 배추가격의 상승에 따라 큰 이익을 보게 되지만 그 반대일 경우는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결과가 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배추재배 농가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적정수준의 판매가격이 보장됨에 따라 작황에 따른 가격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만기 시에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간의 차액만큼만 거래당사자 간에 결제하는 거래

※자료 :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그림 13-2 외환의 수요와 공급



외환의 수요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환율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상품시장에서의 균형가격 결정 원리와 동일합니다. 즉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그 화폐의 가격이 오르고 그 수요가 작아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 면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바로 환율변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각국의 경제활동 수준, 즉 경기의 좋고 나쁨이 외환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 수입이 증가되고 따라서 수입결제에 필요한 외환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면 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이 증가하므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자국통화가 강세로 되어 환율이 하락하고, 적자이면 그 반대로 상승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벌어들인 달러가 사용한 달러보다 많게 되어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을 늘리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환율은 1,200원/달러(1달러당 1,200원)에서 1,100원/달러(1달러당 1,1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수출입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외환시장 거래의 대부분이어서 환율 결정에 있어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거래가 더 큰 비



균형환율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
는 환율

중을 차지함에 따라 각국의 주식이나 국공채 등을 사고팔기 위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많아서 자본이동이 경상수지 변동보다 환율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자본수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입장에서 국제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이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내외의 실질 금리(명목금리에서 기대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 차입니다. 자본이 아



|임|을|거|리|

외환딜러 김 과장의 하루

외환딜러의 임무는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펀드 매니저와 유사하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고파는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수출을 하면 그 값 역시 달러로 받게 되어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을 사고팔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외환가격(환율)이 하루 중에도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 외환을 잘 사고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이후 외환딜러의 역할이 커졌다.

외환거래에는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 나라간의 환율은 각 나라의 경제여건 변화 이르면 금리, 물가, 경제성장, 수출입 등 여러 경제 변수의 변동과 그에 대한 기대감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제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원유나 원자재와 같은 상품시장의 정보 심지어 세계정치의 흐름 등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딜러에게는 대단한 순발력이 필요하다. 딜러는 각종 경제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딜링룸에 앉아 전 세계 은행의 딜링룸과 연결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로 사고판다. 물론 사고판 금액은 눈에 보이는 돈뭉치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 간의 전신 이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계의 외환시장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가장 먼저 문이 열리고 시드니, 서울, 도쿄, 홍콩, 런던, 뉴욕으로 이어지며 24시간 내내 장이 열린다.

오늘도 김 과장은 새벽에 가벼운 운동을 한 후 회사에 출근했다. 사무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릿속에는 전날의 시세와 거래내역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린 다음 날 아침은 상쾌하지만 손실을 본 날은 내내 마음이 꺼림칙하다. 처음 딜러가 되었을 때에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딜링을 일상생활화하려면 건강을 위해 잇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출근과 동시에 김 과장의 몸은 팽팽하게 감아 놓은 태엽이 풀리려는 것처럼 긴장이 감돈다. 「confidential(비밀)」이라는 안내판이 붙여진 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딜링룸으로 들어선다. “일찍들 나오셨네...” “좋은 아침...” 가볍게 동료들과 인사하고 모니터 앞에 앉는다. 아침에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요즘은 커피보다는 박하사탕을 하나씩 깨둔다. 세계 외환시장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텔레크스와 전화기들이 컴퓨터 옆에 나란히 놓여 있다. 우선 연합통신 Infomax와 AP 로이터 통신에서 보내 주는 환율동향을 체크한다. 스크린에 전일 동향과 예상거래 범위, 거래 전략 등이 나타났다. 거래가 시작되기 전 간단한 업무방향 전략회의가 열린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시장이 오전 9시 반에 열려 오후 4시면 다 끝나기 때문에 점심 먹기 전까지 딜링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딜러는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간혹 작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통 딜러에게는 한도가

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당연히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실질금리가 외국의 실질금리보다 더 높으면 국제자본이 들어와 국내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국통화표시법에 의한 환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채권 시장이 규모가 작아 외국의 투자자금이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오고 나감으로써 실질금리 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이론과 다르게 움직

주어지는데 하나는 거래할 수 있는 포지션의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잃어도 되는 만큼의, 즉 손절매 한도인데 딜러가 되지 오래되지 않은 주니어 딜러에게는 몇 백만 달러의 **거래금액 한도(포지션 한도)**와 그에 상응되는 몇 만 달러 정도의 **손절매 (stoploss) 한도**가 주어진다. 물론 두 가지 한도를 넘으면 내규에 의해 경고나 징계, 심한 경우에는 해고당하기도 한다. 과거 국내 A은행은 거래금액 한도나 손절매 한도를 정해주지 않고 딜러에게 외환거래에 관해 거의 전권을 주어 딜러의 투기적 외환거래로 인한 손실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다.

김 과장은 은행의 외환포지션을 점검해 보았다. **외환포지션***이란 외국환을 매입하는 금액과 매도하는 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은행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수동적으로 거래를 해 주는 곳이므로 은행이 고객의 수요(예를 들어 수입을 위한 달러수요)와 공급(예를 들어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달러)에 따라서 외국환을 사고파는

일을 하다 보면 매매액이 일치되지 않고 차액이 발생한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가치가 올라가므로 달러를 보유한 포지션(**롱 포지션**이라고 한다)이 많은 은행은 돈을 벌 수 있다. 은행에서 달러를 산 금액과 고객에게 달러를 판 금액이 같은 경우는 **'스퀘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외화자산과 부채의 차액이 '0'이므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위험이 없다. 포지션을 롱, 숏 또는 스퀘어로 결정하는 것은 돈을 벌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게 하는 딜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기본전략이다.

오늘 밤 뉴욕에서 열리는 한 컨퍼런스에 서 미국 FRB 의장의 경제현황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한다. 김 과장은 오늘 밤 퇴근이 늦을 것 같아 집에 전화를 걸려고 수화기를 들었다.

* 외국환은행이 외환거래를 통해 매입한 외환매입액과 매도 액의 차액, 즉 일정시점에서의 외화자산과 부채의 차액



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금리를 올려 내외간의 실질금리 차(差)가 더 커진다 하더라도 원화가 반드시 강세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상된 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로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미래 수익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이것이 반영되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해 국제통화로 교환하여 자본을 빼내갈 것이므로 원화가 도리어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이 40%대를 넘고 심지어 우량기업 주식의 경우 외국인이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합니다.

또한 환율변동은 장기적으로 국가 간의 물가상승률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은 경제성장률이나 경제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환율의 움직임은 참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외환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실질금리 차이 등과 같은 경제의 기초여건(funda-



| 좀 더 알아보기 |

‘원/엔 동조화’ 현상이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돈(‘원’)의 가치와 일본 돈(‘엔’)의 가치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원/엔 동조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외환시장의 인식에 주로 기인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품은 일본과 유사하므로 일본 ‘엔’ 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 화도 약해져야 하며, 외환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동조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그러한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원/엔 동조화 현상이 더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지만 환율이 성장, 물가 등 기초경제여건에 근거한 시장의 외환수급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원/엔 동조화 논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mentals)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 또는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도를 고려하고 또 이러한 모든 변수들의 장래 움직임까지 고려합니다. 이 밖에 투기적인 거래와 함께 외환시장 참여자의 심리적인 요인이나 루머 등도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이유로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미래의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컨트리 리스크
 금융기관의 해외용자에 있어서 상대국 정부에 의한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가능성. 리스크 발생 요인으로는 전쟁, 혁명, 누적채무, 국유화 등을 들 수 있음

4. 환율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는 개선, 물가는 상승

환율은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외국과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율변동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제 환율 변동이 나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시다.

먼저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당 1,100원이면 채산성이 맞는 상품을 제조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달러당 1,200원이 되면 순이익이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수출하는

그림 13-2 환율변동이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상품의 단가를 낮추어도 물량 증가 효과는 더 크므로 수출액(수출물량×수출단가)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 수입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달러표시 수입단가가 동일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품 가격이 오르게 되어 국내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입품을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값이 올라 국내 물가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물가수준이 내려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환율의 상승은 외채상환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제주체 개개인의 경우도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화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지므로 수출기업과 관련된 업체의 근로자는 환율 상승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른 만큼 고스란히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국내 경기가 좋지 않거나 수입품에 대한 국내 대체상품이 많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에서 원가 인상 요인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밖에 없어 결국 수입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함께 환율 상승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화환율 상승은 또한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거주 가족에게 송금하는데도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가 소요되어 불리합니다.

환율정책은 왜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환율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이 항상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임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 제1, 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또는 균형환율로 되돌리

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의 급변동을 초래하는 외부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입 업체나 일반 국민이 큰 피해를 입거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환정책의 한 수단입니다.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또는 흑자의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와 같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 한나라 경제의 **대외균형**을 이루는 환율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을 약세로 유도함으로써 대외균형의 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내수부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 정책당국이 수출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추기기 위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의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환율의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입비용 상승 등을 통해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같이 환율정책의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목표를 중앙은행이 사전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책간의 상충 등으로 환율에 대한 목표나 범위를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율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환율안정을 위해 정책 금리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역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외환보유액** 수준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

스무딩 오퍼레이션
변동환율제하에서의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런 가운데 중앙은행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

외환보유액
한 나라가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환채권의 총액. 국제수지의 일시적인 역조를 보전하기 위한 준비 역할을 함

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의 외환을 매입함으로써 늘어납니다. 이렇게 축적된 외환보유액은 각종 요인에 의한 외환시장의 충격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아 인접국가의 경제가 좋지 않아 주식자금 등 외국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는 경우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여 수입대금과 대외부채의 지급, 국민의 해외여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는 나중에 투자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와 같이 행동하는 **군집행동**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패닉 현상이 있는 경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면 시장에 외환을 매각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다는 사실은 **국가신인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04년 11월 말 현재 1,926억 달러로 세계 제4위입니다.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우리는 첫째 마당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알아봤는데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른 말로 어느 정도의 외환을 보유하여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학자나 중앙은행, 정부의 실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 외환보유액의 수준을 추정하였지만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파수꾼이라고 일컬어지는 IMF조차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규모, 단기외채 규모,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기외채 규모와 함께 위기발생시 유출 가능한 외화규모(예를 들어 외국인 주식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적 여건이

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찾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 본래의 목적인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외환보유액의 운용 수익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은 외환을 지하금고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은 국제금리나 주요국 국채수익률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통화안정증

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들에 지급되는 이자는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유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높은 외환보유액이 국가신용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 같은 경우에 그 편익을 숫자로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좀 더 알아보기 |

얼룩말과 펀드매니저-군집행동의 사례

에퀴티

www.equity.co.kr



얼룩말과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의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양자는 모두 이익을 추구한다. 펀드매니저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얼룩말은 신선한 풀을 얻으려 한다. 둘째, 둘 다 위험을 싫어한다. 펀드매니저는 해고될 수 있으며 얼룩말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둘 다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그들은 비슷한 안목을 가지고 비슷하게 사고를 하며 무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 랄프 웬저(Ralph Wanger)

※ 자료 : 에퀴티 홈페이지



| 좀 더 알아보기 |

J커브효과 - 환율정책의 한계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평가절하라고 함)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관계만은 아닙니다. 현실경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율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작거나 때로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늘기 시작하는 현상을 곡선으로 표시하면 J자 형태이므로 **J커브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J커브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입 가격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만 이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물량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출입이 진행되므로 수량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습관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환율전가** 효과가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즉 환율 변화가 수입품의 국내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환율이 5% 올라도 실제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5% 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 수출업체가 매출의 감소를 우려해서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윤의 압박을 느낄 때에야 수출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 그에 따라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완전히(즉 5%)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경상수지가 초기 약 6개월 동안에는 악화되다가 조금씩 회복되어 약 15개월이 지나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J커브효과와는 달리 환율상승이 장기에도 경상수지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 1980년대 미국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을 때 달러화의 약세와 엔화의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계속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폭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때 국내 수출기업들이 가격상의 유리한 점 때문에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율변동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 상승을 유도하더라도 그 초기에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개선되는 현상

열넷째 마당

14

경제안정화정책

- 1. 왜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한가?
경제안정화정책의 의미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한 논쟁
- 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떻게 운용될까?
통화정책과 그 수단
통화정책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나?
통화정책은 어떻게 펴나?
재정정책과 그 수단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
- 3.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
정책의 조화
경제안정화정책 성공의 열쇠



열넷째 마당 _ 경제안정화정책

1. 왜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한가?

경제안정화정책의 의의

현실경제에서는 물가불안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지나친 경기변동을 그냥 놓아 두면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가 불안해지고, 불황일 때는 실직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80년대 후반 **3저호황** 때 경기과열로 물가가 급등했다든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갔던 상황은 경제불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저호황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제적인 '저금리'와 '저유가' 그리고 '저원화가치'의 영향으로 경제가 크게 호조를 보였던 상황을 일컬음

경제안정화정책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국민들은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써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이라고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수행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굳어지게 된 계기는 1930년대 세계경제가 흑독한 공황을 겪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시장이 경제불안정을 자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때 정부는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정부지

출 축소 등 총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날 때에는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정부지출 확대 등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안정화정책은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흔히 '총수요관리정책' 또는 '경기조절정책'으로도 불립니다. 총공급 면에서의 안정화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총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공급은 기본적으로 노동, 자

잠재 생산능력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생산 수준



|업|을|거|리| 대공황과 재정정책

192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영원한 번영'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목요일)과 10월 29일(화요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미국 월가의 주가 대폭락이 세계경제의 공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기관이 파산했고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미국의 GDP는 1929년의 절반 수준인 587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1929년 3.2%에 불과했던 실업률은 1932년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황은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번져 전세계 제조업 생산액을 40%나 감소시키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공황은 경기침체의 정도와 지속기간 등에 있어 전례가 없었던 것이어서 사람들은 이를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화폐로 뒷받침되는 **유효수요***가 생산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공황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용해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케인즈(J. M. Keynes)의 처방을 반영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 정책이 실시되면서 차츰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딜 정책의 핵심은 심각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유효수요를 늘리고 이로써 불황을 타개하여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경제안정화정책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미국 테네시 강 유역의 대규모 댐 건설이었는데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 화폐지출이 수반된 수요



▶ 실직자로 넘쳐나는 1930년대 초반 미국의 도시풍경

본, 교육·기술수준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단기적인 정부정책으로 쉽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경제안정화정책이라 하면 총수요를 조절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합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며,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세금의 조정 등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한 논쟁

정부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쓸 때 정책의 기본방향,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여론의 향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 요인별 중요도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어떤 정책이 경제안정을 위해 더 효과적인지 또 어떠한 기준으로 경제안정 여부를 가릴 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총수요와 총공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 여부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실시 시기·정도·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안정화정책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며, 특히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있다면 안정화정책의 실시 정도와 방법 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화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기변동이 지나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총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때에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안정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성장기반 마련, 물가안정 등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경기변동은 스스로 해결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론적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며,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의 특성상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경기변동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화정책을 쓰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도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에서는 경제불안을 시장실패의 하나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는 물론 단기에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을 펼 때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장실패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경제가 효율적이어서 외부충격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에 개입할 때 생기는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준칙**(rule)에 따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화정책의 운용방식에 대해 살펴 보았으나 어떤 방식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정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재량적 경제정책

경제의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

정책에 대한 규칙을 미리 정하고 경제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규칙을 지키는 방식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대량 실업 또는 물가불안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만으로도 충분히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면 정부가 구태여 추가로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면 세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안정화장치는 경제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자동안정화장치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하여 경기변동의 크기를 완화시킵니다. 즉 경기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하여 지나치게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자동적으로 정부수입이 감소하여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상황이 변하여 자동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재정의 기능을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라고 합니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 누진소득세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의 별도 조치가 없어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소비지출을 덜 줄어든게 하므로 경기가 지나치게 나빠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을 때에는 그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실경제에서 누진소득세제와 고용보험제도가 경기변동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없었다면 경기변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떻게 운용될까?

통화정책과 그 수단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통화)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요한 돈보다 너무 많은 돈이 공급되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경기과열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거나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고용 및 금융안정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경제 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균형 등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직접조절수단과 간접조절수단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조절수단은 시장원리보다 정책당국의 행정적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은행여수신금리 규제, 대출규모 통제 등이 있습니다. 간접조절수단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공개시장조작 정책, 대출정책 그리고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간접조절수단을 주로 이용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한국은행
www.bok.or.kr



▶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전경



|워|클|거|리|

2004년 8월,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연 3.75%에서 연 3.5%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로 수요압력이 미약하여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목표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주택가격도 정부의 안정대책에 힘입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경상수지 또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재의 연 3.75%에서 연 3.5%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실효성 있게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반 거시경제정책의 조화적 운용에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4년 8월 12일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을 개정하여 유동성조절대출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총액대출한도금리를 연 2.5%에서 연 2.25%로 각각 인하하였다(시행일자 : 8월 12일).

실물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당초 예상을 벗어난 고유가 추세의 지속 및 세계 IT경기의 둔화 가능성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물가 면에서는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내수 저조

통화정책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나?

통화정책은 길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 등이 있습니다.

금리경로

정책금리의 조정이 장단기 시장금리와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변동시키고, 나아가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우선 **금리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면 콜금리가 그 의도에 따라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면 양도성예금증서금리, 기업어음금리와 같은 90일 이내 만기의 단기금리도 콜금리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금리, 은행 여수신금리도 차례로 변동합니다. 이러한 금리 수준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총수요와 물가도 변동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변화시켜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가격 경로**는 가계의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가 증가하고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늘어나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채권수익률이 낮아지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 결과 이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가계의 부(富)가 커져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내외금리 차(差)가 변하며 이는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쳐 환율을 변동시킵니다. 환율 변동은 다시 수출입, 경상수지, 물가 등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환율경로**는 국제화가 진전되고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책금리 인하로 국내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을 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야 합니다. 이는 원화의 초과공급과 달러화의 초과수요를 가져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원화환율 상승). 원화환율의 상승은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반면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가격 변화로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늘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수입가격을 높여 국내물가를 오르게 합니다.

위의 세 가지 경로의 공통점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을 통해 정책효과가 경제에 파급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양적인 측면, 즉 은행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쳐 정책효과가 경제에 전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변하고 물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금융기

자산가격경로

정책금리의 조정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를 변동시키고 이로 인해 총수요와 물가가 영향을 받는 경로

환율경로

정책금리의 조정에 따른 내외금리차 변화가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수출입과 물가 등이 변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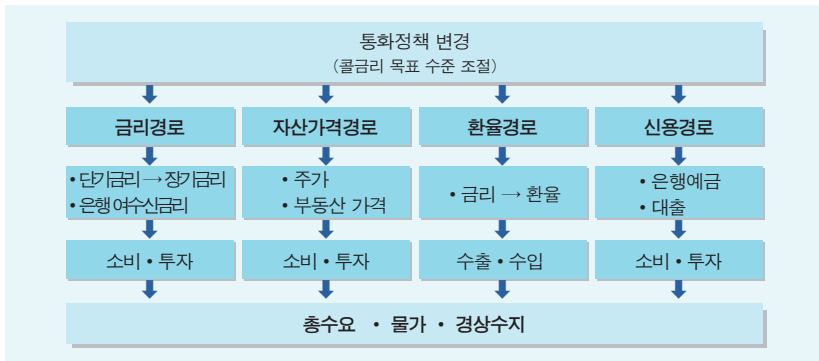
신용경로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뀔 경우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변하고 물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로

관은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집니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리면 기업들은 이 돈으로 기계 설비를 사거나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가계도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 경로별로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14-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통화정책은 어떻게 퍼나?

통화정책 운용체계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화정책 운용체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 및 고용 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금융안정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목기준지표입니다. 중앙은행이 최종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변수를 명목기준지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셋째, 통화정책의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제도적 요소들을 말합니다.

끝으로 통화정책의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정책,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첫 번째인 최종목표나 셋째 · 넷째 요소인 중앙은행의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과 정책수단의 종류 등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나라마다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소인 명목기준지표의 선택은 나라마다 확실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형태는 보통 어떤 명목기준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특정 통화량지표를 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 환율을 목표로 하는 환율목표제, 그리고 특정 물가수준을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읽 | 을 | 거 | 리 |

볼링게임 -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비유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는 흔히 볼링 경기에 비유되곤 합니다. 볼링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핀(최종목표)을 단박에 겨냥하여 볼을 던지기보다 우선 레인의 중간에 있는 특정점(중간목표)을 향해 볼을 던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의 최종목표를 직접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그 파급경로상에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간목표(통화량이나 금리)를 정하여 운용하면 정책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이라고 하는데 1970년대 후반 이후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 등으로 통화가 매우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통하지표와 최종목표인 물가의 관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통화와 실물지표간 관계의 안정성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볼링 경기에서 레인의 특정점을 정확히 겨냥해도 핀이 반 정도밖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특정점을 찾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느슨한 형태의 통화량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통화량목표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량목표제를 대신하여 1990년대에 등장한 것이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인데 이 제도는 1990년 3월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이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볼링에서 레인 위의 특정점 대신 멀리 떨어져 있는 핀을 직접 겨냥하듯이 중간목표 없이 운용목표의 조절을 통해 사전에 세워진 물가목표를 직접 달성하고자 하는 운용체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볼링에서 레인의 굴곡, 공을 던지는 힘의 세기나 방향, 공의 무게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토양, 즉 정교하고 선진적인 금융시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성장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안정목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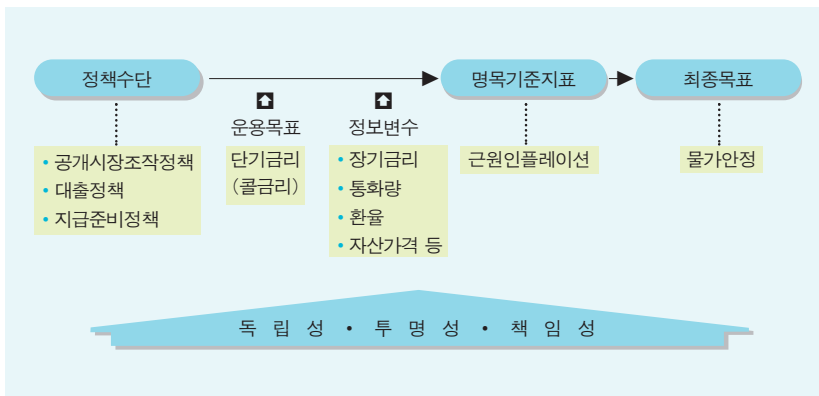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삼아 정책을 펴는 방식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통화지표를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용체계는 ① 최종목표 면에서는 물가안정, ② 명목기준지표 면에서는 근원인플레이션을, ③ 제도 면에서는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의 강조, ④ 정책수단 면에서는 보다 선진화되고 시장기능에 초점을 맞춘 수단과 분석기법의 활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금리(콜금리)를 운용목표로 정하여 통화정책을 펴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여러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정책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을 수정해 나갑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발달로 금리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통화량보다 금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기관 사이에 초단기로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여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월 물가변동, 실물경기의 움직임,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콜금리 목표수준을 결정·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림 14-2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 좀 더 알아보기 |

금리중시 통화정책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의 눈과 귀는 그린스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간단히 '연준' 이라고도 부름) 의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던 1970년대에 미국 연준 등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물가와 통화량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통화량을 중간지표로 삼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유화와 개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가와 통화량간의 관계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통화량 대신 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79년 이후 광의통화(M2)를 중심지표로 통화정책을 펴 왔으나 국내외 금융 환경의 변화로 통화량 중심의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점차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5월부터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여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매월 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목표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등을 토대로 단기금리인 콜금리 목표 수준을 결정·공표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중시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존중하면서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의 변동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고 정확도도 떨어지지만, 금리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의 반응을 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리의 미조정(fine-tuning)을 위해 거래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리를 중시하는 통화정책은 발달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선진화를 이루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그 수단

재정정책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세
금의 조정 등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
는 정책

오늘날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과 같은 거시경
제의 안정은 물론 소득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과 조
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통틀어 **재정정책**이라 합
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득불균형 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
책은 제외하고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긴축적 또는 확장적 재정
활동에 한하여 재정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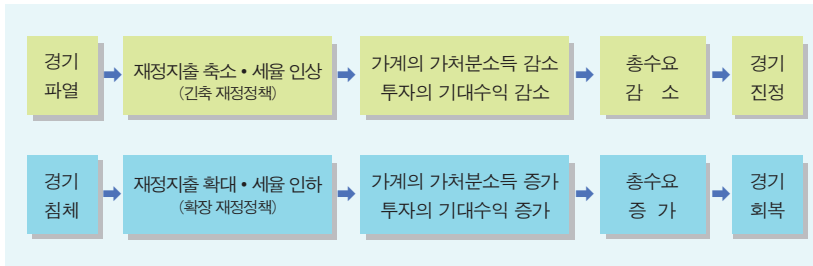
정부 재정의 세출 항목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과 특정 개인이나 부문에 대한 보조
금 및 융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정지출은 총수요를 증가
시키지만 경제안정화와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전자입니
다. 전자의 지출은 공무원 급여, 비품구입 등을 위한 소비지출과 도로, 항
만, 통신, 운수 등 유무형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지출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일 때 정부는 공공투자 사업을 벌이는 등의 방법
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재정경제부
www.mofe.go.kr



▶ 정부 과천청사 (사진 출처 : (주) 토티픽토에이전시)

그림 14-3 재정정책의 파급효과



정부가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인 세입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부는 공기업 운영 수입과 국공채 발행 등으로 채우지만 대부분은 민간 부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조달합니다. 조세는 그 구조와 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안정, 소득 분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침체된 경우 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세율 인하를 통해 민간부문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출과 조세의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세율을 낮추면 총수요를 보다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자주 쓰면 **적자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경기 과열일 때보다는 침체일 때에 더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정부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늘어난 정부지출을 다시 줄이기는 매우 어려워 정책과 관련된 예산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다시 지출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재정
재정지출이 조세수입 등으로 마련된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상태

세금 징수는 강제성을 띤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조세감면이라면 모를까 세금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침체상태로 떨어뜨릴 수 있어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갖다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스란히 통화량 증가로 나타나 물가불안을 초래합니다.

끝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조세부담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정부는 조세수입이나 또 다른 국채 발행을 통해 이를 상환해야 하는데 조세수입을 통한 채무상환의 경우 후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시 국채를 발행해 상환하는 경우에도 국채 보유자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후손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안정화를 위한 확장 재정정책 때문에 적자재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균형재정**은 여전히 재정 운용의 중요한 기본원칙입니다.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재정의 달성을 위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1년이므로 정부가 매년 균형재정에 집착할 경우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재정지출로 인해 경기 진폭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겠지만 균형재정원칙을 지키려 한다면 늘어난 재정수입만큼 지출을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재정원칙을 매 1년 단위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3~5

균형재정
재정지출이 재정수입과
일치하는 상태

년 정도의 중기 단위로 신축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단일 연도의 예산을 이러한 중장기 틀 안에서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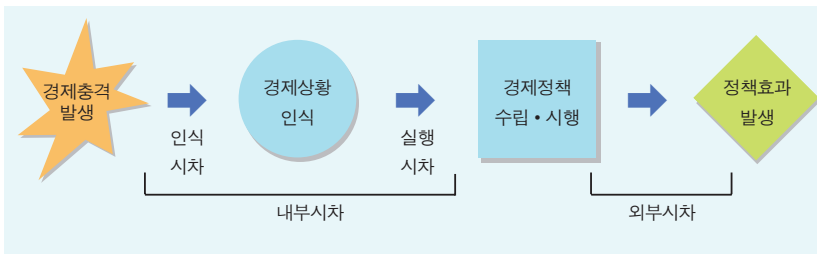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

경기변동은 계절의 변화와 같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며 외부 충격에 대해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경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물가상승이나 대규모 실업과 같은 경제불안이 거듭되는 것은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증명해 줍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만 안정화정책의 효과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가 경제안정화정책을 펼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정책시차**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이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정책의 수립·집행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그

정책시차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인식시차),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실행시차), 이에 따른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림 14-4 정책시차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통화정책에 비해 빨리 나타나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경제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안정화정책 자체가 오히려 경제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목표의 상충(trade-off)**도 안정화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합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생산, 물가, 고용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정책목표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실업률은 낮출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물가상승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잡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확장적



| 좀 더 알아보기 |

정부정책의 양면성

옛말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고르는 일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상대편도 있기 때문에 혜택을 얻는 쪽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쪽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의 중간 정거장을 늘리면 신설되는 정거장 근처의 주민들은 편리하겠지만 부산까지 가는 승객들에게는 그만큼 탑승시간이 길어지니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로 도시 주변의 녹지대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막상 그 안에서 사는 주민들은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정책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정부의 예산제약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외차입이 없는 폐쇄경제에서 정부의 예산제약은 정부지출(G), 조세수입(T), 통화량 증가(ΔM), 국공채발행 증가(ΔB) 등 4개의 변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G - T = \Delta M + \Delta B$$

위 식은 정부의 재정적자, 즉 조세수입(T)을 초과하는 정부지출(G)은 결국 통화증발과 국공채 발행으로 메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우리는 재정적자와 그로 인한 국가채무의 누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과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나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늘 것으로 예상했던 민간투자나 소비가 도리어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점도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정부의 예산 제약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제약**은 정책의 선택과 강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이때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은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통화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통 시장금리가 오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실시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구축효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정책의 조화

이처럼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안정화정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책시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상반된 정책 목표와 수단

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정책담당자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주체와 시행 절차, 시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정책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감안하여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시장에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기가 과열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재정도 건전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우선 사용하고 통화정책을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두 정책수단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 중

정책조합

보다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얻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는 시도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

‘선제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경기 과열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 보아도 별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경기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는 지금 취하는 조치의 효과가 한참 후에 나타난다면 미래의 경제상황을 잘 예측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을 미리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단기금리 → 장기금리 → 생산·투자 → 물가’의 긴 경로를 거치는데 시차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에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된다면 미리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제적 통화정책은 그 당위성이 크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에 이미 물가상승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중앙은행은 많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각종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보면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잔치가 무리익을 무렵 술병을 치워 버리는 심술궂은 사람(killjoy)’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선제적 통화정책이 경제를 장기호황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의 최고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 연준의 예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양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이자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그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경우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리 수준보다 높을 수 있어 통화정책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의 특성과 상호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 성공의 열쇠

과거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는 빠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한번 결정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상황이 가변적이고 정책담당자도 불확실성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집행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책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내려야 하고 정책 방향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제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그 대상이 되는 민간 경제주체나 시장이 정책입안자의 의도대로 따라 줄 때에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관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신뢰가 사라지고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속성과 행태를 보다 면밀히 주시하여 시장 움직임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펼 때 정부 자신 또는 정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해야 합니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

게 하려면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수미일관(首尾一貫)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잃게 되면 각 경제주체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때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져 예기치 않은 시장동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외개방이 크게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못지 않게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 자유화와 자율화가 진행될수록 정책효과의 파급경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눈에 띄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문제의 인식, 정책수단의 동원, 그리고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 읽 | 을 | 거 | 리 |

경제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은?

우리는 경제양극화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경간,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수출은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내수가 부진하며, 자동차·조선·철강·IT산업 등은 호조인데 다른 업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규직은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된 반면 비정규직의 일자리와 소득은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양극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성숙단계 진입, 세계화, 기술진보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능력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이 밖에 소재부품 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수출과 내수의 연관성 미약, 중소기업 성장기반의 취약성, 그리고 고용구조 악화 등도 발생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여러 부문에서 경제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화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적 또는 물적 자본의 축적이 약화되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경제안정화정책은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 수준에 근접시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려는 정책으로서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경제안정화정책으로는 부문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 별도의 미시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재부품과 서비스 산업 육성 등으로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수출 증가가 투자와 고용 증가, 그리고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 체제 구축 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빨리 재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열다섯째 마당

15

세계 속의 한국경제

- 1. 세계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는?
경제규모로 본 한국경제
국가경쟁력과 경제자유도
- 2.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
향후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
세계화와 지역블록화의 진전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재와 미래
- 3. 한국경제의 앞날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세계화의 과도에서 살아남기
각 경제주체의 역할 - 가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기계발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구현
정부는 시장기능의 보완자 역할에 충실



열다섯째 마당 _ 세계 속의 한국경제

1. 세계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는?

경제규모로 본 한국경제



| 읽 | 을 | 거 | 리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2003년 기준)

- 외환보유액은 1,553억 달러로 세계 4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OECD국가 중 5위
- 연평균 실업률은 3.4%로 OECD 국가 중 낮은 순서로 영국, 멕시코에 이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와 더불어 3위
- 에너지 총소비량은 세계 총소비량의 2.2%이며 세계 10위
- 자동차 생산량은 317만 8천 대로 세계 총생산량의 5.2%를 차지하여 세계 6위
- 선박건조량은 세계 총건조량의 32.4%를 차지하여 세계 1위
- 조강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4.8%를 점유하며 세계 5위
- 전자제품 생산액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 쌀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1.0%를 생산하며 세계 13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미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세계 최다 생산국인 중국과 10위 생산국인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
-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는 60명으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
- 총인구는 4,793만 명으로 세계 총인구 63억 1백만 명의 0.8%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26위

※ 자료 : 통계청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에 들어서는 문턱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은행이 200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기준에 의한 경제규모는 세계 제11위입니다. 1인당 GNI는 1만 2,000달러로 세계 제50위이며 이는 세계인구의 약 16% 안에 속하는 고소득 국가군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총 교역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3,726억 달러로서 수출의 경우 1,938억 달러로 세계 총수출액의 2.6%를 차지하며 세계 제12위, 수입의 경우 1,788억 달러로 세계 총수입액의 2.3%를 차지하며 세계 제14위입니다.



국가경쟁력과 경제자유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각 국가의 경쟁력을 경제성과, 정부, 기업, 사회간접자본의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2004년 5월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0개국 중 35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2위), 대만(12위), 일본(23위) 등보다 뒤지는 수준입니다. 부문별 경쟁력 순위를 보면 광대역통신 이용자 수, 연구개발인력 1인당 특허권 획득 수, 인터넷 사용자 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에서는 상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 교사 1인당 초등학교 수, 대도시 생계비지수, GDP 대비 총교육비 지출,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비중에서는 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스위스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전세계 104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29위로 대만(4위), 싱가포르(6위), 일본(9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한편 개인이 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도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적을수록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증가하므로 국부 창출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2004년 경



| 읽 | 을 | 거 | 리 | 국가경쟁력 지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업 환경을 창조·개발하고 관리·유지하는 정부의 국가 경영능력을 분석하여 순위를 매긴다. 2004년 현재 60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323개 지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211개 지표는 국가별 통계를 비교하여, 112개 항목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작성한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항목은 4개 부문으로, 경제운영성과(83개 지표)로 국내경제활력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를, 정부행정효율(77개 지표)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기업경영효율(69개 지표)로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능력·이윤추구·경영책임성의 기준을 평가하며, 발전인프라구축(94개 지표)으로 경제기반·기술인프라·과학인프라·인적자원 활용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지 평가한다. 국가경쟁력 순위 상위 10개국은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아이슬란드, 홍콩,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의 순서이다.

한편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도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앞의 IMD 평가방법과 비슷하나 평가항목의 구성과 가중치로 인해 국가경쟁력의 종합순위에 차이가 있다. 대체로 WEF의 경쟁력 순위는 IMD보다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심한 거시경제 지표보다 미시적인 산업정책 및 경제제도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경제자유도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155개국 중 46위를 차지하여 두 번째 그룹인 '경제활동이 상당히 자유로운(mostly free)'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도와 국가경쟁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화 속에서 수출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의 규모에 걸맞은 경제자유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과 경제자유도 지수, 그리고 그에 근거한 국가순위는 산정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절대적인 평가 결과로 받아들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대강이나마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가신인도나 국가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

향후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현재 위치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대내여건을 보면 향후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3년 기준 1.19명으로 선진국의 1.6~1.7명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하락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엔의 분류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9년에 고령

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에 필요한 노동공급 기반이 저하되어 저축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조세 및 사회보험료 수입(收入)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연금급여, 노인의료비, 노인복지비 등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늘어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경제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개인차원은 물론 국가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과거 개발연대와 달리 국민들의 이해갈등과 욕구 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이 국민경제의 성장지속 필요성, 세계경제의 발전방향 등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앞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예상되는 대외여건으로는 세계화의 지속적인 진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국적기업에 의한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금융의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NGO) 등을 중심으로 세계화에 대한 저항운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세계



|업|을|거|리|

경제자유도 지수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발표하고 있다. ① 무역정책(관세 및 비관세장벽), ② 재정부담(세금 및 정부지출), ③ 정부소비, ④ 통화정책, ⑤ 은행 및 금융규제, ⑥ 자본이동 및 해외투자 관련 규제, ⑦ 임금 및 물가규제(보조금 포함), ⑧ 재산권 보호, ⑨ 창업의 어려움, ⑩ 비공식시장(informal market) 등 10개 분야의 50개 항목을 평가하여 국가별 점수를 산출한다. 국가별 점수는 크게 free(1~16위), mostly free(17~71위), mostly unfree(72~143위), repressed(144~155위)의 4단계로 구분한다.

2004년 경제자유도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별 순위 1위는 홍콩이며 그 다음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덴마크, 스위스, 미국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은행, 국제협력정보 제2004-11호



화의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진전되면 될수록 세계시장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경영 및 금융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이 예상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북미와 유럽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의 하나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그중 동북아 경제는 약 90%를 차지합니다. 향후에도 동북아 경제는 중국의 꾸준한 성장과 일본의 경제회복에 따라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 이후 연평균 10%대에 달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산업화는 경쟁을 격화시켜 우리 경제에 위기로 작용하는 동시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와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기술발달 속도는 과거에 상상했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소위 '무어의 법칙'은 이러한 기술발전의 속도를 잘 대변합니다. 1965년 인텔의 설립자 고든 무어가 반도체의 기억용량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예언한 무어의 법칙이 최근 들어 12개월로

지식기반사회

기술, 정보와 같은 지적
능력과 아이디어를 포함
한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더 당겨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급격하게 세계를 지식 기반사회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는 디지털 경제, 신경제, 사이버경제, 네트워크 경제, 정보경제라고도 불립니다. 지식기반사회는 땅과 노동만으로 열매를 거두어 살림을 꾸리던 농경사회나, 노동과 자본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팔아 경제를 유지하는 산업사회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식기반경제는 정보통신기술(IT : Information and Technology), 생명공학(BT : Bio Technology) 등의 지식이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는 네트워크형 사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장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상품이나 중간제품의 가격 등 풍부한 정보를 값싸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비용도 거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경제 전체로 보면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또한 기업 간의 경쟁력을 높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기반사

회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릅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인력으로도 벤처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전통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자동화와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전체근로자 중 육체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생명공학연구자, 마케팅 전문가, 디자인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와 같은 지식근로자(골드칼라라고도 함)가 증가합니다.



세계화와 지역블록화의 진전

이상에서 향후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을 간추려 보았는데 아래에서는 세계화와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하여 좀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세계화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이념을 기준으로 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경제라는 한 세계만이 존재하게 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즉 냉전 종식에 따른 탈이념주의는 군사력 대신 경제력을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GATT를 대체하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화는 자유무역을 전면에 내걸고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습니다. WTO 체제는 자유무역의 범위를 기존의 공산품 분야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로 확대했으며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WTO를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까지 WTO 체제가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각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 내에서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을 비롯하여 2004년 5월 현재 양국 또는 수개국



| 좀 | 더 | 알 | 아 | 보 | 기 |

도하개발아젠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는 GATT 체제하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1995년 WTO 체제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라운드 대신 개발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도국들이 '라운드' 라는 말에 갖고 있는 저항감을 줄이려는 의도와 함께 개도국들의 관심 사항인 개발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DDA의 협상 의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의 7가지로서 2002년 초에 분야별로 협상그룹이 구성된 후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나라와 나라사이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
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
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의 협정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 세계적으로 208개에 달합니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에도 최근 경제공동체 형성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시대에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역주의를 세계화시대로 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다자간 협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가입국이 제한되어 쉬운 지역협정부터 해 나가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지역 경제블록화를 세계화 현상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금융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진전과 무역규모가 커지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전보다 미국 등의 외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국 증권시장 특히 기술주가 소속된 나스닥 시장이 침체되면 국내 주가도 하락하고 나아가 자산 가치의 감소로 소비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효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후 지난 5개월간 수출은 2억 8,673만 달러인 반면 수입은 7억 9,466만 달러로 5억 793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시적 현상만 놓고 FTA 성과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 행여 이를 계기로 FTA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자폭이 커졌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한·칠레 FTA 성과는 뚜렷이 긍정적이다. 양국간 교역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 주력상품의 수출이 급증했다. 특히 칠레의 수입 중 우리나라 수출품의 시장 점유율이 1분기 2.61%에서 3.40%로 늘어나며 중국 일본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기대했던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 자료 : 파이낸셜뉴스, 2004년 6월 14일

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동향 역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나라경제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간의 정책 협조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 간의 협조를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세계화시대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비교우위가 있어 수출하는 상품을 우리도 사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입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재와 미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경제로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력을 꾸준히 모색해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기초하여 나라가 모든 재화의 생산규모를 계획하고 각 공장에 목표생산량을 할당하고 각 생산단위의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입니다. 기계나 설비, 토지 등의 생산수단은 국가, 사회 또는 협동 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유는 근로자의 임금,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에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대 말까지 남한보다 높았으나 1970년대 들어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추월당하여 2003년 기준으로 우리의 16분의 1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정권 붕괴의 충격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2%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단기적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일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1988년 시작되어 현재 남북 간 철도 도로의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교역규모도 물자교역이 처음 이루어진 1989년 1,900만 달러에서 2003년 7억 2,400만 달러로 38배나 증가했습니다. 남한은 쌀, 비료 등과 같은 비대가성 반출로 1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 투자규모는 2003년 말 기준으로 약 52개 업체가 참여하여 약 6억 달러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경제협력 중점사업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생산요소의 대규모 결합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치·외교·경제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반세기 이상에 걸쳐 형성된 사회 전반의 구조적 차이와 이질성 때문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남한과의 경제발전 격차를 의식한 북한은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거나 체제 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희망을 갖고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꾸준히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3. 한국경제의 앞날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세계화의 파도에서 살아남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은 세계적인 외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하여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규모가 작아 대외 무역을 통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은 아직까지 모두 과거 정부주도 고도성장기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소통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짜증을 내는 '고속도로 증후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기보다 단기적인 안목에서 미봉책을 마련하거나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서는 정부가 자국기업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와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기계발에, 기업은 기업가정신의 구현에, 정부는 시장경제를 창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은 물가상승 없이 신규 진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갈등·대립'에서 서로 '윈·윈하는 화합과 협



|원|을|거리|

지금은 글로벌시대

'모든 기관은 글로벌 경쟁력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기업, 학교, 병원은 물론 어떤 기관도 그 분야 세계적인 리더가 설정하는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성공은커녕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셔도 안 된다.'

- 피터 드러커 -

력'의 생산적인 관계로 승화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갈등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1970~80년대에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높아지는 데 평균 9.2년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득의 선진국에 정착하는데 노사관계의 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20세기



| 신 | 문 | 기 | 사 | 로 | 본 | 생 | 활 | 경 | 제 |

1만 달러 부모, 3만 달러 자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공부시키는 것으로 끝이라고 여겨 왔었다. 학업을 마치도록 뒤를 봐주면 어디에 취직하든, 어떤 배필을 맞든 자식들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린 것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걸 어쩌랴. 세상은 갈수록 치열한 경쟁 속에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내 자식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만 느껴지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중략)

문제를 참으로 심각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 왔는가를 곰곰이 돌이켜 보자. 1인당 GDP를 그 나라의 평균 소득수준이라 할 때 나는 1만 달러 이하의 시대를 살아왔으면서도 내 자식은 3만 달러, 4만 달러 수준으로 키워 온 게 한국의 보통 부모들이 아닌가. 내 자식 귀하다고 만사를 '오냐, 오냐' 하며 키워 왔기에 이들에게 정작 험난한 현실 속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과 고통이 더 커지도록 한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우리들 부모라는 이야기다.

한국 젊은이들의 몸값이나 기대수익률 계산을 기성세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다. 1만 달러 소득 수준의 사회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3만 달러, 4만 달러 소득으로 커온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대접도 3만 달러, 4만 달러 수준이길 기대한다. 어려서부터 마음껏 용돈을 써온 가락이 있으니 버는 기준이나 쓰는 기준이나 모두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까닭이다.

그러니 취업의 선택과 판단 기준도 크게 높다. 그들의 눈에 차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결국 지금의 취업난은 최소한 3만 달러 시대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셈이다. 취직을 안 하면 안 했지, 기름때 묻히고 구정물에 손을 담그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취직이 안 되면 계속 부모 집에서 버틸 수 있는 대안이 있고, 나이가 찼다고 내쫓는 한국 부모 또한 없다.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생겨 온 사회문제다. 이들에게 일자리라고 다 일자리가 아니다. 곳은 일자리는 모셔간다고 해도 안 간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차고 들어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구미 같은 지방공단에는 서울 못지않은 연봉을 주겠다는 유명 대기업마저 구인난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물질 모르고 눈만 높아진 자식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세상 어려운 줄 모르게 키워 온 한국 부모들의 잘못이요, 책임이다. 경쟁국들은 어쩌하고 있나를 생각하면 그저 암울할 뿐이다.

✦ 자료 : 중앙일보, 2004년 9월 13일

초 한때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4강의 국가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이후 노사 불안과 자본유출 등으로 국력이 쇠퇴하여 오늘날 우리나라보다 1인당 소득이 낮은 중상위 소득국가군에 머무르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각 경제주체의 역할 - 가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기개발

우리 경제가 세계화의 높은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터 드러커의 지적처럼 각 경제주체들이 세계화 마인드로 무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계의 경우 유인에 적절히 반응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계화라는 유인에 대응하여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의사결정은 그 결과 당연히 큰 만족과 행복을 누려야겠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최근의 카드 사용에 의한 신용상태가 악화된 소비자가 크게 증가한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경기후퇴에 의한 소비자의 소득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현재와 미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소비한 개인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실업이나 노후에 대한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개인이 정부에 더욱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적



자는 개인과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정의 확대는 큰 정부를 초래하게 되는데 큰 정부가 장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복지지원 제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장기 생활설계를 세워 미래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식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부모가 많은 것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는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 주어 행복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적성에 맞는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사회이므로 메마르고 냉혹한 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남을 생각하고 남과 더불어 산다는 대승적인 시민정신이 요구됩니다. 선진국의 기부문화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사회적 미덕입니다. 또한 기부문화는 빈부차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등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줍니다.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구현

국제화 시대의 무한경쟁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업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업가는 종국적으로 혁신과 국부창출로 연결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계속하여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우리 경제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기업가정신은 여러 가지 제약과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와 새로운 사업 진출 또는 사업 다각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가의 혁신의지 내지 모험정신입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계화·글로벌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

기업가정신

여러 가지 제약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 사업다각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가의 모험정신



|임|을|거|리|

직원에 대한 교육투자가 최선의 경쟁력 제고 방안

유한킴벌리의 M사장은 “경영자들은 구성원의 평생 학습과 재충전을 경영자들의 첫 번째 임무라 생각하고, ‘Chief Executive Officer’ 를 뜻하는 CEO가 아닌 ‘Chief Education Officer’ 로서의 CEO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직원의 평생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 “경기가 좋을 때 교육예산을 2배로 늘리고, 나쁠 때는 4배로 늘려라!” 라고 경영사상가 톰 피터스는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대 박오수 교수는 “미국기업들은 매출액의 3%를 직원교육에 투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0.3% 수준에 불과하다. 직원 교육비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직원 교육은 설비투자나 R&D 투자처럼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투자에 속한다. 배터리를 재충전해 쓰듯이 인력도 재교육시키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직원에 대한 교육투자를 기업경쟁력 제고의 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자료 : 조영탁, '행복한 경영이야기'

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에 기업가정신이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IMF 이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잠시 다시 활성화되었다가 약간 식어 최근 신설법인 수의 감소, 설비투자 부진, 상장사의 보유현금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가 기업가정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가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가는 창조적 파괴의 주체인 것은 확실하지만 기업가정신도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나 투자, 경영 등과 관련된 각종 유인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주체가 유인에 반응한다는 원리는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물론 기업은 회계기준과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브랜드 가치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기업윤리 면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기능의 보완자 역할에 충실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는 정부가 만능이라는 인식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작았을 때는 정부의 주도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른 현재

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민간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카스 교수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할 경우 정부의 인위적인 재정지출과 같은 경제정책이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실패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재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정부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경제 운동장에서의 '심판'으로서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안정기조의 확립에 두고 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운용을 통하여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안정기조적 경제정책과 함께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촉진, 사회기반설비 확충,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등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라는 제약을 인식하여 국내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커 나가고 또 세계적 기업이 국내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간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문제는 성장의 과실을 크게 상쇄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 안에는 사람들의 능력차이와 사유재산 제도로 인한 빈부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 개발연대 시절과 달리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구성원간의 빈부차이가 커질수록 장기적인 성장에 부담이 되므로 과거와 같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구함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도한 복지지출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경우에는 결국 현 세대의 행복을 위해 미래 세대의 행복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넓은 의미로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대표적임

찾아보기



- 가격규제 265
- 가격기구 40
- 가격담합 99
- 가격수용자(price-taker) 50
- 가격파괴 124
-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156
- 가격탄력성 61
- 가계 53
- GATT 315
- 가치저장 기능 193
- 가치척도 기능 193
- 간접금융 219
- 간접조절수단 291
- 간접투자 246
- 개성공단 사업 318
- 거시경제 33
- 경기변동, 경기순환 171, 288
- 경기적 실업 179
- 경기조절정책 287
- 경기종합지수 173
- 경상수지 267
- 경상지출 92
- 경쟁시장 67
-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 182
- 경제문제 27
- 경제성장 149
- 경제안정 103, 288
-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286
- 경제양극화 306
-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 278
- 경제재 27
- 경제적 이윤 84
- 경제주체 51
- 경제활동 24
- 경제활동인구 181
- 경제활동참가율 181
- 경착륙 175
- 경합성 96
- 계획경제 36
- 고령화 311
- 고속도로 증후군 319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recovery) 152
- 고정환율제도 273
- 공개시장조작 205, 291
- 공공재 90, 97
- 공급 32, 58
- 공급곡선 59
- 공기업 91
- 공유자원 96, 28
-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128
- 공평과세 원칙 108
- 공평성 106
- 과점시장 67
- 관리통화제도 196
- 관세 264, 265
- 광의통화(M2) 208, 297
- 교차탄력성 61
- 교환매개 기능 191
- 교환의 이득 46
- 구두창비용(shoe leather cost) 164
- 구매력평가설 271
- 구조적 실업 179

구축효과 (crowding - out effect) 303
 국가경쟁력 지수 310
 국가신인도 282
 국가재정운용계획 301
 국가채무 300
 국고채수익률 215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 135
 국내총소득(GDI) 140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138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 136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41
 국제수지표 266
 국채 223
 국채 발행 300
 규모의 경제 68, 85
 균형가격 33, 60
 균형거래량 33, 60
 균형재정 300
 균형재정원칙 300
 균형환율 276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194
 그리스핀 297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157, 296
 글로벌 경쟁력 321
 금리 211, 214
 금리경로 292
 금리중시 통화정책 297
 금속화폐 194
 금융 21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229
 금융거래 210, 213, 218
 금융부채 210
 금융산업 228
 금융상품 218, 243
 금융시장 214, 218, 229
 금융자산 210

금융제도(financial system) 210, 226
 금융채 223
 금융통화위원회 202, 292, 297
 금전신탁 247
 기업 54
 기업가정신 86, 322
 기업경기조사(BSI : Business Survey Index) 173
 기업어음(CP)시장 221, 245
 기업윤리 88, 323
 기업의 소유권 224
 기회비용 28, 83
 기후파생상품 226
 긴축적 재정정책 302



남북 경제협력 318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National Trust) 102
 노동 54
 노동가능인구 180
 노동생산성 185
 노후 생활자금 257
 녹색(green) GDP 146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156
 뉴딜(New Deal)정책 287
 능력원칙 108



다자간 무역협상 265, 315
 단기금리(콜금리) 296
 단기금융시장 220
 단리 212
 단위노동비용 185
 단위탄력적 61
 담합 99

당좌예금 244
 WTO 315
 대공황(Great Depression) 177, 287
 대외균형 280
 대체재 64
 대출 227, 253
 대출정책 206, 291
 더블딥(double dip) 177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118, 207
 도하개발아젠다 315
 독과점시장 68
 독립재 64
 독점시장 67
 독점적 경쟁시장 71
 돈 190
 돈의 시간가치 211
 동북아 경제권 313
 동행지수 173
 디플레이션(deflation) 159



로렌츠곡선 147
 롱 포지션 277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216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192
 리츠(REITs) 248



마찰적 실업 179
 매매기준율 272
 매물비용 30
 메뉴비용(menu cost) 164
 명목국민소득 139
 명목금리 212

명목기준지표 294
 명목임금 186
 모라토리엄 148
 무보증채 224
 무어의 법칙 313
 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 97
 물가목표치 296
 물가상승률 212
 물가안정 291, 294
 물가안정목표제 281, 295, 296
 물가연동제 188
 물가지수(price index) 155
 물물교환경제 191
 유추얼펀드 247
 미래가치(future value) 217, 256
 미시경제 33
 민간 화폐보유액 202



발행시장(primary market) 219
 배제성 96
 범위의 경제 86
 법인세 91
 법화(法貨, legal tender) 195
 변동환율제도 273
 보완재 64
 보이지 않는 손 44
 보증채 224
 보통예금 244
 보험 247
 보험회사 228
 보호무역 264
 복리 212
 복리채 224
 복지정책 325

본원통화 202
 본인-대리인 117
 부가가치세 91
 부채 255
 분배 국민소득 138
 분업 34
 불환지폐(unconvertible money) 195
 비경제활동인구 181
 비관세 무역장벽 265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 146
 비교우위 263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 159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227
 비정부기구(NGO) 312 (시민단체 참조)



사용제 96, 97
 사유재산 제도 34
 사치세 66
 사치재 61
 사회간접자본 90, 298
 사회안전망 325
 사회적 잉여 48
 사회 후생 48
 산업사회 314
 3저호황 286
 상대가격 43
 상품수지 267
 상품화폐(commodity money) 194
 생명공학 314
 생명보험 247
 생산 80
 생산 국민소득 137
 생산요소 44
 생산자물가지수 155

생산자잉여 47
 생활물가지수 168
 서비스수지 267
 석유파동 297
 선물(futures) 225
 선제적 통화정책 304
 선택 26
 선행지수 173
 세계화 312
 세금 91
 세액공제 252
 세외수입 91
 소득공제 252
 소득분배 100
 소득세 91
 소득탄력성 61
 소비 74
 소비자물가지수 155
 소비자의 8대 권리 79
 소비자잉여 46
 소비자주권 77
 소비자태도조사(CSI : Consumer Survey Index) 173
 손절매(stoploss) 277
 손해보험 247
 수량규제 265
 수량할당(쿼터) 265
 수요 32, 58
 수요곡선 59
 수익률 213
 수익성 220, 242, 251
 수익증권 246
 수입 262
 수출 262
 수출보조금 265
 수출입 의존도 262
 수출입물가지수 156

수출자유규제 265
 순순 공공제 96
 순자산 255
 순환주기 171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280
 스왑(swap) 225
 스퀘어포지션 277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161
 CD수익률 215
 시민단체(NGO) 102
 시장경제 34, 289
 시장금리 215
 시장실패(market failure) 94
 시장점유율 71
 시장지배력 94
 시중은행 227
 신용 231
 신용경로 293
 신용등급 215, 232
 신용불량자 231
 신용사회 234
 신용위험(credit risk) 215
 신용카드(credit card) 199, 234
 신용평가 232
 실업률 181
 실질국민소득 139
 실질금리 212
 실질금리 차(差) 278
 실질임금 186
 실효금리 213



아담 스미스(Adam Smith) 35, 94
 안전성 220, 242, 250
 암묵적 비용 28, 84
 액면가(face value) 223
 양도성예금증서 245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220
 어음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 245
 NEW(Net Economic Welfare) 146
 M3 208
 역선택(adverse selection) 115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202
 연착륙 175
 예금 227, 241, 243
 예금보험공사 229, 241, 243
 예금보호 한도 245
 예금자보호제도 245
 예금통화 203
 예산제약 77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131
 옵션(option) 225
 완전경쟁시장 50
 완전고용실업률 180
 외국통화표시법 271
 외부경제 97
 외부불경제 97
 외부효과(external effects) 95, 127
 외환 272
 외환딜러 276
 외환보유액 281
 외환시장 272
 외환위기 286
 외환정책 280
 외환포지션 277
 요구불예금 243
 용의자의 딜레마 120
 원/엔 동조화현상 278
 위조지폐 197
 위험할증률(risk premium) 215
 유가증권시장 221

유동성 250, 251
 유동성 위기 207
 유엔 인간환경회의 126
 유인(인센티브 : incentive) 31
 유인제도 101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219
 은행 227
 이자소득세 91, 252
 이자율 211
 이표채 224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164
 인플레이션(inflation) 159
 인플레이션기대심리 160
 일물일가의 법칙 271
 일반은행 227
 1인당 국민소득 144



자국통화표시법 270
 자금의 수요 211
 자본 54
 자본수지 267
 자본시장(capital market) 221
 자본자유화 275
 자본주의 34
 자본지출 92
 자산 255
 자산가격 경로 293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 224
 자연독점 68, 96
 자연실업률 180
 자원배분 35
 자유무역 264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316
 자유변동환율제도 293

자유재(free goods) 26
 작은 정부 103
 잠재성장률 149
 잠재 생산능력 287
 장기 생활설계 238, 255
 장비구니물가 165
 재량 289
 재정경제부 229, 231
 재정의 자동안정화정치 289
 재정정책 288, 298
 재정지출 298
 재정활동 92, 91
 재할인금리 206
 재할인제도 206
 저축 240
 저축률 141
 저축성예금 244
 적자재정 299, 300
 전신환매매율 272
 전자자금이체시스템 230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199
 절대우위 263
 절세 104
 정기예금 244
 정기적금 244
 정보 110
 정보변수 296
 정보통신기술 314
 정부 54, 90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101
 정부기능 100
 정부의 시장개입 36, 98
 정부의 예산 제약 303
 정상재 61
 정책금리 293
 정책목표의 상충(trade-off) 302

정책사차 301
 정책의 조화 303
 정책조합 304
 제3세계 126
 J커브효과 284
 조세 103
 조세부담률 103
 조세수입 91
 조세저항 300
 조세회피 104
 주가, 주식의 가격 222
 주가수익비율(PER : price earnings ratio) 222
 주당순이익(EPS : earning per share) 222
 주식 221, 224
 주택청약예금 244
 준칙(rule) 289
 중간목표 295
 중국식 자본주의 37
 중앙은행 202, 205, 291
 중앙은행차입 300
 증권시장 221
 증권회사 219, 228
 지급결제제도 230
 지급준비금 202
 지급준비정책 206, 291
 지니계수 147
 GDP 디플레이터 157
 지방은행 227
 지방채 223
 지식기반사회 314
 지역경제통합 315
 지출 국민소득 138
 지폐 195
 직접규제 130
 직접금융 219
 직접조절수단 291

진입장벽 67



차액결제 선물환(NDF : non-deliverable forward) 274
 채권 213, 221, 223
 채권수익률 214
 채권시장 214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 215
 채무증서 218, 223
 초고령 사회 311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162
 총공급 159, 287
 총공급곡선 160
 총수요 150, 287
 총수요곡선 160
 총수요관리정책 287
 최저임금제 186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206, 207
 70법칙 150



카르텔(cartel) 72
 케인즈(J. M. Keynes) 287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215, 216
 콜금리 214
 콜금리 목표수준 296
 콜시장 214, 220
 크루그만(Paul Krugman) 38
 큰 정부 101



탄력성 58, 61
 탈세 104

탐색행위 110
태환지폐(convertible money) 195
통화량 203, 208, 293
통화량목표제 295, 296
통화안정증권 221, 223
통화정책 288, 291
통화정책 운용체계 294
통화정책의 수단 294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292
통화지표 205, 208
투기 241
투기 등급 233
투자 214, 241
투자 등급 233
투자수익 213
투자율 141
특수채 224
특화 34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225, 274
편익 29
포트폴리오 242
표면금리 213
표면이자(coupon rate) 223
표지어음시장 221
필수재 61



한계의 원칙 31
한계효용 75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78
한국은행 202, 231, 291
한국은행권 195

할인율 213, 214
할인채 224
합리적인 소비 79
해외부문 55
햄버거지수(빅맥지수) 271
현재가치(present value) 217, 257
협의통화(M1) 208
혼합경제 36
화폐시장(money market) 220
확장적 재정정책 302, 304
환경문제 125, 324
환경세 131
환금성 242, 251, 259
환매조건부채권 220, 245
환율 269
환율경로 293
환율목표제 295
환율정책 280, 284
회계비용 84
회계상 이윤 84
회사채 223
회사채수익률 215
효용 75
효율성 35, 106
효율임금이론 187
후행지수 173
희소성 26

참고문헌

- 강태진·유정식·홍종학, 「미시적 경제분석」, 1996년 2월
- 공병호, 「10년 후, 한국」, 2004년 6월
- 김경수·박대근, 「거시경제학」, 1999년 9월
- 맨큐, 김경환·김종석 공역, 「맨큐의 경제학 제2판」, 2001년 8월
- 김기옥·허경옥·정순희·김혜선, 「소비자와 시장경제」, 2001년 8월
- 김기화, 「거시경제학」, 2002년 9월
- 김상규, 「박제가의 우물론과 균형소비교육」, KDI 경제교육 2003년 12월호
- 김인준·이영섭, 「국제경제론」, 2004년 1월
-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년 9월
- 백용호, 「돈의 경제학」, 1997년 11월
- 삼성경제연구소,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2004년 1월
- 손정식, 「소프트 경제원론」, 2001년 1월
- 송병락, 「글로벌 지식 경제시대의 경제학」, 2001년 8월
- 안국신, 「안국신@경제학 길잡이」, 2000년 2월
- 이정식·이정욱, 「돈을 다루는 사람의 이야기」, 2002년 4월
- 이준구, 「새 열린경제학」, 2001년 3월
- , 「시장과 정부」, 2004년 2월
- 이준구·이창용, 「경제학 들어가기」, 2003년 1월
- 전성인,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1996년 1월
- 전택수, 「시장경제원리의 이해」, 1995년 12월
- 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론」, 2004년 8월
- 조순, 「화폐금융론」, 1997년 2월
- 조순·정운찬·전성인, 「경제학원론」, 2003년 3월
- 토크 부크홀츠, 이승환 옮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1994년 12월
- 한국개발연구원, 「열린세상 유연한 경제」, 2001년 12월

한진수, 「쉽게 알자 경제지식」, 2002년 5월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2004년

Paul A. Samuelson and William D. Nordhaus, 「Economics」, 2001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년

이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

지은이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경제교재편찬위원회

조한상 위원장

유만식 · 김현철 · 서태석 · 이상호 · 정도관 위원

자 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한국은행 이근영 · 유진방 박사

디자인

(주)대통기획

삽 화

안준석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발행일 _ 2005년 3월

발행인 _ 박 승

발행처 _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http://www.bok.or.kr>)

인 쇄 _ 서원기업 주식회사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는 한국은행 화폐금융
박물관내 서적·기념품코너(☎759-4805) 또는 정부
간행물센터에서 매권당 3,700원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